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 석사 학위논문

1980년대 한일 안보경제협력 연구:
목적과 결과를 중심으로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Seika KATO

국제학 석사 학위논문

1980년대 한일 안보경제협력 연구:
목적과 결과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Korea-Japan Security Economic
Cooperation in the 1980s: Focusing on the
Objective and the Result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Seika KATO

1980년대 한일 안보경제협력 연구: 목적과 결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Seika KATO

Seika KATO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원장 한정훈

부위원장 김현철

위원 박태균

(인) 

(인)  Hyuncheol (Kim)

(인) 

국문 초록

1981년 4월 22일 한국정부는 북한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에게 100억 달러의 안보경협을 5년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후 한국은 안보명목을 근거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공적원조를 공식요청했으며, 이렇게 시작된 한국의 대일경협 요청은 결국 안보 명목이 상실되고 5개년계획에 대한 경제적 지원형태로 체결되었다. 한국이 제시한 안보 명목의 거액차관 요청은 안보상의 이유라는 군사적 목적의 색채와 천문학적인 금액 요청이었다는 부분에서 당시 한일관계에 있어 의구심이 제기되는 요청이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주요인물들의 회고록 및 경제정책의 1차자료, 신문기사 등의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80년대 한일 간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경제 측면을 포함한 보다 거시적 시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본고는 전두환 정권이 100억 달러의 안보경협을 왜 구상하였고, 그러한 경협자금을 어디에 도입하고자 하였는지, 또한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안보경협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였으며, 그것에는 어떠한 의의가 있었는지라는 초점으로 연구질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국의 100억 달러 대일경협의 구상은 안보적 목적이 중심이 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었다. 100억 달러의 구상자인 전두환 대통령의 근본적인 구상요인은 북한의 군력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순수한 안보적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 대통령의 100억 달러 안보경협 구상은 과거 한국전쟁에서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낸 전쟁 특수에 대한 심리적 변수가 작용한 것이며, 동시에 관료나 외교관 출신이 아닌 군출신의 권위주의 정권의 일 처리 방식과, 미국의 대일 안보경협요청

에 대한 협조 의지에 따라 가능했다. 둘째, 한국은 양국의 교섭 과정을 통해 대일차관을 안보적 사업에 대한 사용이 아닌 5개년계획에 대한 순수히 사회 발전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표면적 의사와는 달리, 타결 마지막 시기에 이르기까지 안보적 사업에 대해 사용할 것을 의도했다. 교섭과정에서 안보 명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자금을 안보적으로 사용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안보 명목이 거액차관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5개년계획이라는 명목 또한 안보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실제 자금도입 결과는 전두환 정권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안보적 달성도 경제적 달성도 아닌 사회발전적 달성의 의미가 강했다. 양국 간에 합의된 40억 달러의 사용원칙은 5개년계획에 대한 자금이거나 일본으로부터의 기자재구입을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도입된 내용은 모두 경제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일 경협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 당시 한국이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양질의 거액차관 소요외자 계획은 국제고금리 현상 및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라 위협받았으며, 한국에게 있어 평균금리 6%의 거액 대일차관은 한국 경제정책을 실현하는데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안보’ 명목의 의미는 당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의 대외거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했던 거액 공공차관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적 역할이 되었다는 점에서 ‘안보’ 명목은 한국의 전략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
 주요어: 한일 안보경협, 한일 경제협력, 한국의 대일외교, 한국의 대일정책, 한국의 경제정책, 한일관계
 학번: 2018-26480

목 차

국문초록	i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6
1. 80년대 한일 안보경협의 기원과 목적을 다룬 연구	7
2. 80년대 한일 안보경협이 갖는 의미를 다룬 연구	9
제 3 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13
제 2 장 100억 달러 안보경협 요청에 대한 검토	15
제 1 절 100억 달러 안보경협 요청의 모순성	16
1. 평화헌법에 기반한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비현실성	16
2. 일본의 대북정책 속의 한일 안보협력의 실현 불가능성	20
3. 경제적 형태로서의 안보경협 문제	21
제 2 절 80년대 초 한국의 경제정책	22
1. 70년대 고도성장의 잔재와 경제위기	22
2.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28
제 3 장 1980년대 한일 안보경협의 전개와 성사	31
제 1 절 안보경협 논의의 시작과 전두환의 100억 달러 상정배경	31
1. 전두환-레이건 정상회담	32
2. 이토외상 방한	36
3. 전두환의 100억 달러 상정요인	39
제 2 절 81년 스텝키 내각 협상 시기	46
1. 노신영- 스노베 100억달러 비공식 요청	47
2. 한일 외상회담과 60억 달러 공식요청	49
3. 제11차 한일 정기각료회담	56
제 3 절 82년 스텝키 내각 협상 시기 - 경협방식 교섭과정	65
1. 제1차 한일 실무자협의를	66
2. 제2차 한일 실무자협의를	69
3. 최동진-무라오까 면담과 일본의 경협방식 제안	70
4. 경협규모를 둘러싼 양국 갈등	72
제 4 절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연계경로와 안보경협의 경제적 목적에 대한 논의	80
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외자소요의 의미	80

2. 양질 차관의 중요성과 80년대 초 한국의 외자도입 상황	89
3. 안보경협외 경제적 목적	96
제 5 절 나카소네 내각 협상 시기와 대일경협외 실제목적	101
1. 세지마-권익현 비공식 루트	102
2. 세지마-전두환 비공식 루트	108
3. 나카소네 총리 방한과 40억 달러 타결	110
4. 대일경협외 실제 목적	113
제 4 장 경협자금외 도입실적과 그 의의	116
제 1 절 경협자금외 사용원칙과 연차별 도입실적	116
1. 경협자금외 사용원칙	116
2. 경협자금외 연차별 도입실적	119
제 2 절 한국의 대일경협 목적과 결과에 대한 고찰	128
제 5 장 결론	132
제 1 절 결론 및 논문의 의의	132
참고문헌	147
Abstract	158

표 목차

[표 1.1] 외자소요와 조달.....	84
[표 2.1] 자금운용에 관한 주요 합의 내용.....	117
[표 2.2] 1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120
[표 2.3] 2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121
[표 2.4] 3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122
[표 2.5] 4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123
[표 2.6] 5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124
[표 2.7] 6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126
[표 2.8] 7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127
[표 2.9] 한일 경험자금 사용 실적.....	128

제 1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은 1981년 4월 22일부터 협상이 시작된 한일 간 안보경제협력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아온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깊이 고려하여, 안보를 중심근거로 시작되었다고 인식되는 80년대 한일경협이 ‘안보’가 아닌 ‘경제회복적 목적’이 우선이었음을 주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전두환 정권이 안보경협을 요청하게 된 목적을 재검토하고 안보경협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였는지, 즉 경협자금을 실제 어디에 도입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목적을 중심으로 검증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실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달성하였다면 어떻게 달성하였는지를 관찰하고 1980년대 한일 안보경협이 갖는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1945년 종전 이후 한일 양국이 합리적 행위자로서 교섭을 통해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 두 가지 중대 사례가 존재한다. 하나는 종전 20년 후인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83년 일본의 대한국 경제협력이다.¹ 그 중 후자인 1980년대 경제협력은 65년 국교정상화 협상의 결과 제공된 경제협력 차관에 이어 사실상 2차 대규모 경제협력 차관협상을 성사시킨 사례로서 한일 협력의 역사상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²

¹ 고모다 마유미. 2013. 「한일 ‘안보경협’ 분석: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² 김상준 외. 2013. 『韓日經濟協會 30年史 : 韓日經濟交流의 발자취』. 서울: 한일경제협회. pp. 121-122.

1980년을 전후하여 한국은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결과 짧은 민정이양기를 거쳐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등장했다. 일본은 오히라 마사요시 수상의 사망을 전후로 자민당 내부 파벌투쟁의 절정과 퇴조, 그리고 스즈키 정권이라는 과도기를 경과한 후 전후 총결산을 내건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을 맞이했다. 1979년 말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한일관계의 제1막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³ 한국 정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전두환을 둘러싼 ‘신세대’ 사람들은 박 대통령 시대의 한일관계를 높은 세대의 유착에 기반한 불건전한 관계라고 인식하여, 이제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기초를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립했다.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한 실제적인 조정은 1981년 봄부터 이루어졌다. 이른바 한일 간 ‘안보경협’을 둘러싼 협상이 그것이다.⁵

스즈키 젨코(鈴木 善幸) 내각기인 1981년 4월 22일, 노신영 외교부장관은 스노베 료조(須之部 量三)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에 불러 공적 개발원조 60억 달러, 일본수출입은행 자금 40억 달러, 총 100억 달러를 5년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경협차관 요청의 이유를 안보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련의 위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약 600억달러의 GNP 중 6%, 국가예산의 37%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한국의 안보가 미-일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안보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⁶ 이후 1981년 8월 21일 한일 외상회담에서 한국정부는 일본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위노력

³ 박정진. 2016. 「1980년 한일관계: 5.17 쿠데타와 일본」. 『Acta Eurasiatica』 (한국유라시아학회) 7권 1호. pp.23-48.

⁴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23.

⁵ 박정진. 2016. 「1980년 한일관계: 5.17 쿠데타와 일본」. 『Acta Eurasiatica』 (한국유라시아학회) 7권 1호. pp.23-48.

⁶ 김상준 외. 2013. 『韓日經濟協會 30年史 : 韓日經濟交流의 발자취』. 서울: 한일경제협회. P. 122.

의 상응하는 경제적 협력으로 82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⁷ 기간 중 60억달러의 공공차관을 제공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⁸ 이는 한국이 안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와 같은 협력을 경제형태로 지원해달라는 안보차원의 이유였다. 한국의 요청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에서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일본의 스즈키 정권은 양국간은 동맹관계가 아니므로 군사원조는 절대 할 수 없으며 규모 측면에서도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교섭은 장기화되었다. 그러나 스즈키 수상 퇴진 후에 출범한 나카소네 정권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1983년 1월 전두환-나카소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교섭은 타결을 보게 된다. 결국 규모는 정부개발원조, 민간자금 등 포함하여 40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안보 명분이 아니라 경제개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제5차 5개계획에 대한 경제지원이라는 형태로 합의가 되었다.⁹

한일 경제협력의 역사상 중요한 사례이자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요구되는 시기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정부 간 안보경협 교섭은 한일관계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 간 협력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당시 한일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큰 쟁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몇 가지 논의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행기 한일관계 속에서 전두환 정권이 갑작스럽게 경제협력을 요청하게 된 요인, 즉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본에게 ‘안보’차원의 경제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안보경협

⁷ 이하 필요에 따라 ‘5차계획’으로 표현한다.

⁸ 『경향신문』. 1981년 8월 22일. 「한일외상회담 폐막 한국 60억불 요청 일, 안보연계 경협거부」.

⁹ 고모다 마유미. 2013. 「한일 ‘안보경협’ 분석: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을 둘러싸고 몇 가지 모순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첫째, 일본은 평화헌법 상 상대국가에 대한 군사적 협력이 어려우며, 동시에 80년대 초 일본은 등거리외교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전략을 펼치고 있는 시기였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협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을 한국정부는 인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달성을 위해 경제협력을 요청했다는 점을 볼 때 경제협력의 실제 목적을 거시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당시 일본에서는 반한사회가 유착되어 신군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0억 달러라는 거액을 5년 간에 걸쳐 지원해줄 것을 갑작스럽게 요청한 것은 양국관계에 타격이 될 수 있는 과한 금액 요청이다.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5년 동안에 무상과 유상을 포함하여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제협력의 총액이 13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5년 간에 100억 달러를 요청하는 것이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¹⁰ 따라서 전두환 정권이 100억 달러라는 경제자금을 요청하게 된 사실적 의도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남아있다.

셋째, 한국정부가 공식요청한 목적은 안보차원이면서도 실제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사용되는 경제적 자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안보차원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태를 연계시킨 점은 주목되는 점이다. 위에서 제시한 ‘안보’명목의 모순성과 더불어 실제 요청내용이 경제차원의 형태로 교섭이 이루어진 점에서 안보 명목에서 벗어난 경제정책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1980년대 초 한국의 경제는 60년

¹⁰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280.

이래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경협요청의 목적 즉 한국정권이 안보경협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전략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¹¹ 또한 안보차원에서 벗어난 내용의 경협요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제기한 ‘안보’ 근거라는 표면적 이유로 인해 대표적인 몇 가지 선행연구들이 안보라는 개념 하의 이 협상을 인식하고, 경제적 차원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온 점도 주목된다. 이 점은 선행자료들의 주장을 보다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거나, 또 다른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온 ‘안보로 시작된 경제협력’이라는 틀에 대해 거시적 시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당시 한국의 경제적 상황 및 이에 따르는 경제정책을 관찰하는 것과 주요인물들의 증언을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안보경협 요청의 실제 의도를 알아본다. 본고는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않은 100억 달러의 실제 구상자인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과 당시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안의 1차자료에 접근하여, 선행연구 및 대표 저서와의 차별화와 발전된 연구결과를 도출해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일 양국이 성사시킨 안보경협의 실제 형태 즉 경협자금의 사용방도와 그 의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1980년대 한일안보경협에 관한 연구 보완에 기여하도록 한다. 한일 안보경협에 대한 논의는 곧 당시 양국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정책이라는

¹¹ 『동아일보』. 1980년 5월 17일. 「미 「한국위기경제」 지원검토」.

새로운 접근을 통해 한국정부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1980년대 양국의 협력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다. 한국정부의 경제정책과 안보경협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또한 한국정부의 대일경협의 실제목적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1980년대 한일경협에 대한 의의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 논문은 당시 한국정부의 안보경협을 둘러싼 전략을 이해하는데 기여되며, 추후 한일관계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 함의점이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980년대 한일 안보경협은 60년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의 결과 제공된 경협차관에 이어 대규모의 경제협력을 성사시킨 협상으로서 한일관계 사례 중 중요한 사건이자, 신시대 한일관계가 출발하는 시기 속에서 이루어진 교섭으로 양국관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정상화와 관련된 연구에 비하여 80년대 한일경협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일관계의 국제정치사적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있어 80년대 경제협력 교섭 사례는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² 현재까지 관련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최근 이루어진 몇 가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들의 초점은 안보경협의 발안경위와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및 관련국가들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 80년대 한일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

¹² 고모다 마유미. 2013. 「한일 ‘안보경협’ 분석: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의 관심사인 한국정부의 의도와 목적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의미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안보경협의 시작이 ‘안보’라는 개념하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보편화되어,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현재까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안보경협을 둘러싼 연구의 발전가능성이 남는 가운데 본고의 관심사를 부분적으로 다룬 논문이 존재하며, 이를 논의하면서 연구의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80년대 한일 안보경협의 기원과 목적을 다룬 연구

우선 조양현(2017)은 80년대 대일 안보경협의 발안경위를 분석하면서,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제안설’을 비판하고, 실제 발안자가 다나카 카쿠에이(田中角栄) 전 총리였음을 밝혔다. 안보문제와 함께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본 전 대통령이 다나카 발언을 보고받아 100억 달러를 산출해냈다고 설명한다.¹³ 가장 최신 논문인 손기섭(2020) 연구에서도 자료측면¹⁴에서 발전시키면서도, 발안경위에 대해 조양현(2017)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거액차관을 요청하기 위해 안보와 경제를 연계했을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서의 미국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제시한다.¹⁵ 한편 고모다 마유미(2013)의

¹³ 조양현. 2017. 「제5공화국 대일외교와 한·일안보경협 : 안보경협안의 기원에 대한 실증분석」. 『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학회) 57권 2호, pp.169-205.

¹⁴ 공로명. 2019. 『한국 외교와 외교관 - 대일외교, 북방정책, 북핵협상』(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공로명, 임성준. 2018. 『공로명, 임성준 메모(1983) : 대일 경협교섭의 전말』(국립 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를 참조하고 있다.

¹⁵ 손기섭. 2020. 「80년대 한일 신 ODA 경협차관을 둘러싼 외교협상」. 『정치정보연구』(한국정치정보학회) 23권 1호, pp.83-112.

박사논문은 거액차관의 산정 근거를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과 ‘제 2 차 전력증강 5 개년계획’이라는 두 측면의 구체적인 목적에서 찾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군력증강을 도모하자는 전략이 있었다는 주장에서 앞의 두 연구하고 같은 관점이다. 더욱이 본고의 관심사인 안보와 경제형태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일 안보방파제역할을 근거로 경제협력을 요청한 것이며, 안보경협 교섭에서 ‘안보’나 ‘군사력 건설’이라는 것이 경제협력 요청의 ‘명목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¹⁶ 본고 또한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중심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에서 다른 관점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료¹⁷ 를 통해, 안보경협의 산정근거의 중심이 ‘전력증강계획’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안보경협의 발상이 ‘안보’로부터 시작했으나 군사협력이 어려운 일본 사정을 고려한 결과, ‘안보’와 ‘경제’가 혼재되었다는 논리를 설명한다.¹⁸ 저자는 당시 한국의 안보적 자금부족을 실증하면서 안보비용의 중요성을 서술했다. 그런데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이 연계된 만큼 해당 비용 또한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간과되었다. 이를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경제적 의미를 심화시킴에 따라 경협요청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저자는 거액차관 산정과정에서 대일자금의 안보적 제공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¹⁹ 본인이 실제

¹⁶ 고모다 마유미. 2013. 「한일 ‘안보경협’ 분석: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¹⁷ 국가안전보장회의. 1981. 『일본방위력 증강과 한일안보협력 방안』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p. 63. 를 참조하고 있다.

¹⁸ 고모다 마유미. 2013. 「한일 ‘안보경협’ 분석: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¹⁹ 80년대 한국정부의 안보경협 요청은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행정관료들의 검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 대통령 스스로가 ‘실무자나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한 것을 내가 지시해서 만들고 얻어낸 것’이라고 자랑삼아 밝혔듯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진했던 일이었으며, 안보경협에

군사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동 연구들은 전두환의 안보문제에 대한 심리와 경제안정의 욕구가 작용함에 따라 거액차관을 구상했다는 산정 배경을 분석하였으며, 본고 또한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선행연구들의 관점에 동의한다. 그런데 안보경협 발상을 논의하는데 있어, 한국이 그러한 거액차관을 실제 어디에 도입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목적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데 주목하여, 본고는 한국의 목적과 의도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성이 남는다고 보았다.

2. 80년대 한일 안보경협이 갖는 의미를 다룬 연구

80년대 한일경협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논문은 다수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식(1985)은 80년대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미일 삼국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미국 영향력의 한계와 스즈키 내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협상 속에서의 한일 안보협력관계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²⁰ 반면 오코노기 마사오(2001)는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미일 관계와 나카소네 역할에 중점을 두고, 나카소네 등장과 동시에 안보경협을 계기로 삼국이 공통의 전략인식을 가지고 안보적 협력관계를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한다.²¹ 앞서 언급한 손기섭의 연구결과 중

대한 한국의 전략을 밝히는데 있어 전두환 대통령의 증언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장규. 1991. 『경제는 당신이 大統領이야 : 全斗煥 시대의 經濟秘史』. 서울: 중앙일보사. p.274.

²⁰ 李庭植. 1989. 小此木政夫·古田博司(訳). 『戦後日韓關係史』東京: 中央公論社. (원제: Chong-Sik Lee,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imension, 1985). pp.144-193.

²¹ 小此木政夫. 2001. 「新冷戦下の日米韓体制: 日韓經濟協力交渉と三国戰略協調の形

2009 년에 출간된 논문(손기섭, 2009)은 협상을 통해 양국 정부가 한일관계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속성에서 비롯되어 존재한 각종의 국내정치적 내압을 조정했으며, 이 같은 측면에서 80 년대 안보경협은 한일 안보협력이나 이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및 외교안보적 동아시아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²² 반면 전술한 고모다(2013)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방법론적 한계로 보아, 교섭을 통한 한일간 상호작용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양국 간 안보경협 성사를 가능케 했던 것이 미국의 압력이나 일본의 정책변화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으로부터 기인한 약소국 한국이 주도성을 가지고 행한 성공적인 결과로 보았고, 동시에 안보경협은 한일간의 북한의 위협이라는 안보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²³ 한편 전술한 조양현(2017) 논문에서는 안보경협이 1965 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에서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이익이 우선시되던 이른바 ‘한일관계 1965 년 체제’의 연속성과 변화가 혼재하는 정치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일본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80 년대 안보경협에서의 일본 보수층의 한반도관은 냉전의 시대성을 초월하는 전략성을 담고 있었다는 일본의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⁴

成」. 小此木 政夫, 文正仁. 『市場·国家·国際体制』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pp.189-212.

²² 손기섭. 2009. 「한일 안보경협 외교의 정책결정 1981-1983년 일본의 대한민국 정부차관」. 『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학회) 49(1), 305-328.

²³ 고모다 마유미. 2013. 「한일 ‘안보경협’ 분석: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²⁴ 조양현. 2017. 「제5공화국 대일외교와 한·일안보경협 : 안보경협안의 기원에 대한 실증분석」. 『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학회) 57권 2호. pp.169-205.

동 연구들처럼 안보경협이 갖는 의미와 그것을 둘러싼 상호관계의 특징을 설명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왔으며,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동시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발전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80년대 한일경협이 한미일 삼국이 관련된 교섭이었던 만큼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및 상호의존성, 거기서 나타나는 안보경협의 특징을 위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온 것이 현재까지의 80년대 한일경협을 둘러싼 연구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현재까지 80년대 한일 안보경협에 관한 성공적인 연구가 존재했으며, 경제적 측면을 제시하는 논문도 존재하지만 한국의 전략적 측면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그러한 결함을 보완함에 따라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크다. 국제적 협력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국가들의 전략을 밝히는 일은 관계나 협상의 의미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동시에 추후 외교적 교섭과정에 있어 각 국가들의 전략적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정부가 안보경협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과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표면적인 안보차원의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실제 한국정부의 전략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한일 안보경협이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후술할 안보경협의 모순성과 당시 한국의 경제난을 고려해볼 때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실제 목적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안보경협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고는 선행연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안보차원의 경제협력’이라는 틀에 대해 보다 거시적 관점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현재까지 주목되지 않아온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정부의 경제정책과 안보경협 목적의 관계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찰함에 따라 안보로 제기된 경제협력이 실제로는 안보적 달성보다는 한국경제 그 자체를 위한 경제회복적 달성의 의미가 컸음을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²⁵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이 실제로 안보적 협력이 비현실적이었던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가 안보적 차원으로 100 억 달러를 요청하게 된 실질적 의도와, 더 나아가 안보를 근거로 경제형태의 협력을 요청한 연계 목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그러한 전략을 안보경협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제로 달성하였는지, 달성했다면 어떻게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주된 연구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전두환 정권은 왜 100 억 달러의 안보경협을 구상하였는가. 둘째, 한국정부는 안보경협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였는지, 즉 경협자금을 어디에 도입하고자 계획하였는가. 셋째, 결과적으로 안보경협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달성하였다면 실제로 무엇을 달성하였으며, 그것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안보경협 협상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이에 따르는 경제정책에 대해 보다 깊이 살펴볼 것이다.

²⁵ 이하 ‘안보경협의 경제목적 가설’로 표현한다. 여기서 ‘경제’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경협자금을 안보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거나, 안보와 경제형태의 연계성의 논리가 ‘군사적 협력이 어려운 일본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경제적 차원의 형태로 요청했다’는 ‘안보중심의 경제협력’이 아닌 애초부터 순수히 한국경제 그 자체에 대한 경제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제 3 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한일 안보경협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눠 분석하였다. 제 1 시기는 1980년을 전후하여 안보경협 안건이 출발한 발안시기, 제 2 시기로서는 노신영 장관이 일본에 대해 안보경협을 처음으로 요청한 1981년 4월 22일부터 스즈키 젨코 정권이 퇴진한 1982년 11월까지의 스즈키내각 협상 시기, 제 3 시기로서는 1982년 1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정권이 출범하고 교섭이 결착될 때까지의 나카소네 내각 협상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안보차원의 100억 달러 경협을 구상하게 된 목적을 검토하는 것과 약 2년간의 교섭기간을 관찰하면서 안보경협을 통한 한국정부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성사된 경협차관의 실제 도입내용을 관찰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안보경협 제 1 시기인 발안시기부터 시작해 제 2 시기 및 제 3 시기의 교섭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제 1 시기인 발안시기에서 본 논문은 100억 달러의 의미를 다루기 위해 금액 상정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두환의 100억달러 구상시기부터 관찰한다.

이에 따른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안보경협을 둘러싼 전두환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제 2장에서는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100억달러라는 금액을 안보차원으로 요청한 사실에 대한 모순성과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안보경협 요청의 목적이 당시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 80년

대 전후의 한국경제 상황 및 이에 따르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서술하면서 본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안보경협요청과 전개과정을 포괄적으로 관찰하면서 가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겠다. 이를 위해 동 장에서는 먼저 한국요청의 특징을 시사하는 것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1차자료 및 그러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외자소요의 총당 상황을 관찰하면서 안보경협의 경제적 목적을 추측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보경협에 참여한 주요인물 중 특히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않아온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을 관찰함에 따라 교섭과정에서의 한국 요청의 특징에는 어떠한 전략적 의미가 있었으며, 안보경협의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한일간에 성사된 경협자금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전두환 정권의 전략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그것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제 5장 결론은 논문의 요약 및 의의를 제시하고, 동시에 논문의 한계점을 기술하면서 본고의 발전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논문은 1980년대 관련 1차자료 중 특히나 안보경협의 중요인물들의 회고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한국측 중심자료는 주요실무자 자료로서 전두환 회고록, 노신영 회고록, 이재춘 회고록, 그리고 80년대 초 경제수석비서였던 김재익의 증언기록을 대신하여 경제정책을 둘러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이장규의 저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2008) 등을 통해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해 깊이 관찰한다. 일본측 자료로서는 일본의 외교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당시 한일안보경협의 교섭 실무자였던 오구라 카즈오(小倉和夫)의 저서 (『秘録·日韓 1兆円資金』, 2013)를 주로 참고한다. 동 저서의 저자인 오구라는 한일양국간 안보경협 교섭기간인 1981년부터 83년까지 아시아극 북동아시아과

장을 맡아 한일 안보경협 교섭을 측근에서 지원한 주요인물이며, 저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회상하였다. 동 자료는 간접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섭 내용의 1차자료를 세부적으로 담은 자료로서 당시 일본이 접하게 된 실제 한국의 요청과 언급 내용, 그리고 일본측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외에 교섭 후반기 주요 실무자 자료로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회고록, 세지마 류조 회고록을 참고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현재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제5차 5개년계획의 계획안 및 차관 도입동의서 등의 1차자료를 관찰함에 따라 실제 한국정부가 계획한 구체적인 경제정책 내용 및 성사된 경협차관의 원칙과 도입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관련 신문 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관찰하고, 또한 관련 연구자료들의 2차자료를 활용해 연구의 구체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안보경협을 둘러싼 전두환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많은 1차자료와 연구자료 및 신문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에 해당한다. 특히 본고는 2017년 4월에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2』에 접근하여, 100억 달러 안보경협 의 구상자인 전두환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목적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은 5차계획의 1차자료에 접근하여 안보경협의 경제로서의 의미를 관찰할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2 장 100억 달러 안보경협 요청에 대한 검토

제 1 절 100억 달러 안보경협 요청의 모순성

1. 평화헌법에 기반한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비현실성

1981년 4월 22일, 노신영 외교부장관은 스노베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하여 향후 5년 간 ODA 60억달러, 수출입은행자금 40억달러, 도합 10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일본이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였다.²⁶ 스노베 대사는 다음 날 곧바로 전보를 작성해 일본정부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²⁷

“한국은 자유진영의 중요국가로서 실로 국가예산의 35%를 국방예산에 소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위한 것뿐만이 아닌 자유진영 국가들, 특히 일본을 돕는 일이 되고 있다(為になっている). 한국은 현재 박정희 대통령 사후 큰 전환기에 있어 갖가지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대국이자 역사적으로서 깊은 관계에 있는 일본으로부터 안보경제협력을 요청하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일본의 대한국 협력의 액수를 10배 늘려 연간 약 20억 달러, 5년간 합계 100억 달러의 자금을 한국에게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 본래로서는 이 숫자의 근거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요청해야 하겠지만, 현재 일본으로서 정치적 고차원의 판단에 서서 우선 이러한 자금 지원과 큰 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해주기를 바란다.”²⁸

²⁶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p. 280-281.

²⁷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16.

²⁸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17. 인용내용은 필자가 번역했다. 본문: 「韓国は、自由陣營の要(かなめ)として、実に国家予算の35パーセントを、国防予算に費やしている。これは、韓国の為ばかりでなく、自由陣營の国々、なかんずく、日本の為になっている。韓国は、いま、朴正熙大統領亡き後、大きな転換期にあって、シュシュの困難に直面している。ついては、この際、豊かな隣国であり、歴史的にも深いつながりのある日本から、思い切った、防衛、経済協力をお願いしたい。具体的には、現行の日本の対韓国協力の額を10倍に増やし、年間約20億ドル、それを向こう5年間、合計100億ドルの資金を韓国へ提供願

이 요청은 한국이 소련의 위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게 역할분담을 요청하는 것이었다.²⁹ 특히 한국이 당시 국가예산의 35%를 국방예산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뿐만이 아닌 일본을 포함한 자유진영 국가들의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일본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아시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의 요청은 신시대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제 1막의 시작을 의미했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경협 요청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안보’를 차원으로 ‘100억달러’라는 거액을 구체적인 근거와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요청은 당시 양국 상황을 관찰해보아도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명목과 액수를 기반으로 한 요청이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일본은 헌법상 상대국에 대한 안보 및 군사적 협력이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에게 안보 명분으로 100억 달러라는 거액을 요청한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일본은 평화헌법 상 다른 나라에 대해 안보적 협력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본은 일본이 안고 있는 전후의 역사가 있으며, 그것의 기본적인 출발은 ‘비무장’이다.³⁰ 일본은 평화헌법에서 교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동맹국 미국이 아닌

たい。本来であれば、この数字の根拠や必要性について説明したうえで要請すべきかもしれないが、ここは、日本として政治的、高次元の判断に立って、まずは、こうした資金の提供とその大枠について原則的に同意していただきたい」

²⁹ 김상준 외, 2013. 『韓日經濟協會 30年史 : 韓日經濟交流의 발자취』. 서울: 한일경제협회, p.122.

³⁰ 『동아일보』. 1981년 9월 12일. 「각료회의 취재한 한일특파원 방담 '안보경협' 거리가 너무 멀다」.

제삼국과 집단적 자위수준의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³¹ 후술할 1980년대 안보경험 교섭 과정에서도 일본은 평화헌법 상의 제약으로 동맹국이 아닌 나라에 대해 군사적 협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³² 또한 ‘안보’ 명목과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요청 액수이다. 한국이 1981년 4월 22일 노신영 외교부장관을 통해 처음으로 요청한 금액 총액은 5년간에 100억 달러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체결된 한일 경제협력의 액수는 15년 동안에 무상 유상을 포함하여 총 13억 달러였다. 이와 비교해봐도 100억 달러라는 거액을 5년 동안에 걸쳐 지원해 달라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과 더불어 군사쿠데타 및 광주에서의 군대진압 폭력사건이라는 극적인 경위를 거쳐 1981년 1월 3일에 공식적으로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인물이다.³³ 일본 국내에서는 신군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김대중 사건의 여파가 한일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다.

³¹ 박선원. 2002.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42권 3호. pp.249-271.

³² 일본헌법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민은 항구의 평화화를 염원하여 인간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자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유하고자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폭정과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싶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면하여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헌법 제 2 장 <전쟁의 포기> 제 9 조에 따르면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전쟁의 포기)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전력의 미보유와 교전권의 불인정) 일본은 이와 같은 ‘비무장’을 기본지침으로 한 일본국헌법의 제약을 이유로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협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日本衆議院. 日本国憲法.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shiryo/dl-constitution.htm#2sho(검색일:2020. 9.10).

³³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21.

자민당 집권세력은 한국의 신군부를 박정희 시대의 유착 네트워크로 대체할 만한 정치세력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5.17 쿠데타 직후 광주 민주화 항쟁의 배후로서 김대중이 ‘내란음모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일본에서는 한국의 신군부 세력에 대한 비난여론과 한국 정부에 우호적 태도를 보여왔던 오히려 내각에 대한 비판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한일간의 쟁점은 김대중 재판문제로 모아졌었다.³⁴ 이에 대한 한국 신군부의 강경한 대응이, 일본정부에게 과거 박정희 정권과의 정치적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일본여론에는 한국의 비민주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춰졌다.³⁵ 이와 같은 갈등은 1980년대 초 한일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주는 정치적 사회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갈등 상황에서 일본의 신군부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외교관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아갈 것이 요구될 만한 전두환 신정권이 취임한지 약 4개월만에 갑자기 100억 달러라는 거액을 심지어 안보를 명분으로 요청한 것은 누가 봐도 돌발적인 일이다. 기우치 아키타네(木内昭胤) 당시 일본 아시아국장은 한국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대해 이 같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신정권의 장관은 외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일국의 외무대신이 갑자기 대사를 불러 100억달러를 달라니. 그것도 국방예산을 일본이 떠맡으라(肩代わり)고 하는 듯 요청하다니 거칠다, 너무 거칠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³⁴ 군사법원에서 국가반란죄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것은 일본의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1981년 1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는 했지만 재판 판결문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판결문의 입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본 국내에서 분출해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 쟁점이 되었다. 박정진, 2016. 「1980년 한일관계: 5.17 쿠데타와 일본」. 『Acta Eurasistica』 (한국유라시아학회) 7권 1호, pp.23-48.

³⁵ 위의 논문.

이러는 건가.³⁶

기우치가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요청은 일본에게 충격과 혼동으로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 100억 달러를 안보 목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당시 양국 상황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군부는 왜 100억 달러의 안보경협을 요청하였는가? 안보경협을 둘러싸고 전두환 정부가 펼치고자 한 전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일본의 대북정책 속의 한일 안보협력의 실현 불가능성

두번째로 주목할 점은 80년대 일본은 남북 등거리외교 및 북한과의 교류 확대정책을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대북 입장은 한일 간의 기본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과 경제·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를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³⁷ 실제로 일본은 북한과 활발한 교류 노선을 구축해 나갔다. 81년 시점에서는 일본의 대북한 무역량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일본 정치인들의 평양방문 사례의 증가와 북한의 정치 요원 방일 등 북일 교류가 활발해졌다.³⁸ 1981년 초 북일 양국은 경제관계를 정상화 내지 촉진키 위한 ‘동아시아 무역연구회’를 설립하여 은행·제지·자동차 업계 등의 일본 대기업들이 대북한 무역조사와 경제인 상호교류를 추진할

³⁶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18. 인용내용은 필자가 번역했다. 본문: 「大体、今度の新政権の長官は、外交を何と思っているのか。一国の外務大臣が、いきなり大使を呼び付けて、100億ドルくれとは。しかも、国防予算の肩代わりをしろとでもいうような言い方で日本に要求してくるとは。荒っぽい、荒っぽすぎる。一体、何を考えてこんなことをいきなりやってきたんだ」.

³⁷ 『경향신문』. 1980년 11월 27일. 「입법회의 지상 녹음 파장 큰 스즈끼 일 수상 발언」.

³⁸ 『경향신문』. 1981년 6월 12일. 「표리부동한 등거리외교」.

것이 계획되었었다.³⁹ 그러한 배경에서 안보경협 교섭이 시작하기 전부터 일본은 북한 위협에 대응할 자세를 실제로 내세우지 않았다. 1981년 1월 26일에 열린 제 94회 국회연설에서 스즈키 내각의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 이토 외상이 밝힌 내용이 있다. 이토 외상은 “남북대화의 신속한 재개를 강하게 호소하고,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역, 경제, 문화 등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점차 확대시켜 나아갈 생각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즉 한국 신정권의 안보경협 요청에 대해 일본정부 당국이 정면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를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⁴⁰ 따라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펼치는 일본에게 한국정부가 북한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대응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북일 교류가 촉진화 되어갈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안보협력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어떠한 계획과 전략들이 뒷받침하고 있었을까?

3. 경제적 형태로서의 안보경협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안보를 명분으로 10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요청한 일은 1980년대 초 당시 상황을 살펴봐도 신정권의 전략적 면에서 모순성이 드러나는 일이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첫째, 일본의 평화헌법을 근거로 볼 때 한국이 일본에게 ‘안보’명목을 가지고 100억 달러라는 거액의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사실, 둘째, 당시 일본의 대북

³⁹ 『매일경제』. 1981년 1월 10일. 「한일경제관계의 미래상」.

⁴⁰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30.

정책을 보면 한국이 일본에게 안보협력을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전두환 행정권은 일본에 대해 처음부터 100억 달러의 안보적 협력을 기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조차 보인다. 그렇다면 전두환 정권은 안보경협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였는가? 100억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금액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1981년 8월 21일 한일외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이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안보경협의 프로그램 내용에는 실제 안보적 내용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즉 안보를 명분으로 제기했지만 사실상 안보 명목과는 별개로 5차계획에 대한 경제차원의 형태로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앞서 제기한 액수 및 안보 명목에 대한 두 가지 모순성과 더불어 실제 요청내용이 안보에서 벗어난 내용이었다는 맥락을 볼 때, 한국 정부의 전략에 초점을 두고 한일 안보경협의 의미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다시 말해 현재까지 중점이 되어온 ‘안보차원의 경제협력’이라는 틀에 대해 보다 거시적 관점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80년대 초 당시 한국의 경제위기를 고려해볼 때, 한국정부의 경제정책과 안보경협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안보경협을 통해 한국정부가 경제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왜 비현실적인 조건과 수단으로 일본에게 정부간 경제협력을 요청하게 되었을까?

제 2 절 80년대 초 한국의 경제정책

1. 70년대 고도성장의 잔재와 경제위기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경제는 전국민의 개발의욕과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유지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력의 신장 등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왔다.⁴¹ 하지만 이와 같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70년대 말을 정점으로 한국경제는 급속도로 후퇴해갔으며, 전두환정권은 과거 경제성장의 성과를 고스란히 넘겨받지 못했다. 1980년 1.4분기(1~3월)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1964년 이래 16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의 잇단 원유가 인상충격이 한국경제에 본격적으로 파급되고 있었다.⁴² 1980년 12월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GNP 잠정추계에 따르면 80년 한해 국민총생산은 경상가격으로 35조3백6억원, 75년 불변 시장가격으로는 13조9천2백13억원에 그쳐 마이너스 5.7%라는 부(負)의 성장을 기록했다.⁴³ 이에 따라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복합적인 경제적 난제들에 직면해야 했다. 그것은 70년대 말 닥친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추진코자 한 안정화시책이라는 경제운용방식 대전환의 실패가 신정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경제는 지속되는 높은 물가상승 문제와 중화학공업 육성의 과잉투자 문제, 정부 재정을 대신해서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와 금융산업의 낙후 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 문제가 악화되고 있었다.⁴⁴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4월

⁴¹ 한국개발연구원. 1981. 「경제안정화시책자료집(상): 1979.4.17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중심으로」. P. i, 3.

⁴² 『동아일보』. 1980년 5월 7일. 「GNP 16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⁴³ 『경향신문』. 1980년 12월 30일. 「한은 추계 성장률 20년만에 마이너스 5.7% 작년비 1인당 GNP 89달러 감소」.

⁴⁴ 황성현. 2015. 「한국의 1980년대 긴축 재정정책 연구」.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재정학회), pp.1-25.

17일 신현확 부총리는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0년 인플레이션 해결의 전기를 마련키 위해 1,2년의 진정기를 설정하고, 중화학공업의 투자와 성장속도를 줄이는 한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목표 지향형에서 신속운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이제까지의 경제전략 방향을 대폭 수정키로 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누적된 인플레이션을 해결함과 동시에 과잉투자 및 과잉성장으로 경제가 과열하고, 내수공급 등에 불균형이 생기고 있는 상황을 시정시키기 위한 제도 및 경제운용방식을 근원적으로 고치기 위한 것이었다.⁴⁵ 박정희 정부는 박정희식 경제성장 정책으로는 이러한 내외적인 압박과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으로 발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1979년의 종합시책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장 원리에 의한 공정경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쉽지 않았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 조정 역시 난항에 부딪혔다. 조정의 핵심은 중화학공업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기업들의 중복투자를 조정하는 것이었지만, 기업 간의 특전 요구 및 이미 투자한 부문에 대한 대가 요구 등으로 인해 조정 및 통합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던 무분별한 기업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1980년대 전반기를 통해 중화학공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시 진행되어야 했다. 결국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이 가져왔던 모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⁴⁶ 한마디로 전두환 집권시기의 한국경제는 70년대

⁴⁵ 『경향신문』. 1979년 4월 17일. 「신 부총리 경제 안정 종합시책 발표 중화학 조정, 생필품 공급확대」.

⁴⁶ 박태균. 2019. 「박정희식 경제성장 정책의 종점으로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통권 128호. pp.10-39.

말의 이 같은 경제적 과제들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었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을 정리한다면, 성장정책의 중핵이었던 중화학공업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후유증, 고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무역적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 부(負)의 경제성장률 속에서 새 정권이 들어섰고 이전 정권의 과잉투자에 대한 비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중화학공업 조정은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⁴⁷ 실제 1970년대 한국은 그 기간에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경제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생산설비를 경제적 규모로 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중화학공업에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대기업의 중화학공업투자를 유인했다.⁴⁸ 이로 인해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70-1979년에 경상가격 기준으로 1인당 GNP는 252달러에서 1,640달러로 6.5배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와 수출이 이러한 고도성장을 견인하였다.⁴⁹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이 같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결국 부작용을 불렀다. 개발초기부터 대기업 그룹들의 경쟁적인 참여와 과잉 중복투자로 공급시설능력이 넘쳐 가동율은 떨어지고 시설의 유희화사태까지 빚어져 하루에 약 1억원의 건설이자만 늘어가고 있는 처지였다.⁵⁰ 70년대 빠

⁴⁷ 박영구. 2001. 「정부인가 시장인가 : 1980년대 중화학공업조정 이후의 효율성과 시사점」. 『국제경제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7권 1호. pp.213-231.

⁴⁸ 박기주. 2018. 「1980년대 초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의 과정과 평가」. 『경제사학』 (경제사학회) 42권 66호. pp.3-35.

⁴⁹ 위의 논문; 같은 논문에서 김두얼 외. 2017. 「1980년대 초의 외채위기」. 『한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서울: 대한민국의사박물관. 재인용.

⁵⁰ 『동아일보』. 1980년 8년 22일. 「중공업투자의 재정비」. 『매일경제』. 1981년 7월 4일. 「중화학 투자조정과 진로 1.중화학공업 기틀 자리질 때 수출 늘고 경제 성장 가속화」.

른 성장을 불러낸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이러한 부작용의 잔재를 신정권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동시에 한국이 경제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근원적인 문제로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 고도 인플레이션이다.⁵¹ 1970년대 들어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더불어 시장경제의 왜곡에 의한 만성적 인플레이션의 폐허가 1970년대 후반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⁵² 원유가 인상과 장기간 누적된 가격인상 요인의 현실화 등으로 인플레이의 폭과 속도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었고, 더 큰 문제는 가격정책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었으며, 또한 정책 당국조차도 인플레이션 수습에 대한 확신이나 단호한 결의를 갖지 못함으로써 인플레이가 가속화되고 악성화될 소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당장의 효과만을 위한 진통제적 처방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결과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고질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수술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⁵³ 한국정부는 1975년 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물가의 행정규제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지만, 이 시기의 물가안정은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이나 통화팽창의 문제점을 해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가압력을 단순히 잠재화시키는 것이었다. 물가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정부에 의한 강압적인 가격통제로 해결하려 하였으며, 통화증가량 역시 통제하지 못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하루 아침에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

⁵¹ 한국개발연구원. 1981. 「경제안정화시책자료집(상): 1979.4.17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중심으로」. p.3.

⁵² 황성현. 2015. 「한국의 1980년대 긴축 재정정책 연구」.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재정학회). pp.1-25

⁵³ 『동아일보』. 1979년 4월 17일. 「고질 인플레이」 도려낼 때-새 경제안정시책에 기대한다」.

도록 하였다.⁵⁴ 인플레이의 악순환은 지속되어 결국 1980년 동안에 도매물가는 44.2%, 소비자물가는 34.6%가 각각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정부가 연초에 억제목표로 내세웠던 도매 28%, 소비자 23%를 그 절반 넘어 초과한 수준이었다. 60년대 이후 물가상승율이 가장 높았던 1차 오일쇼크 이후 74년의 도매 42.1%, 75년의 소비자 25.3%와 비교할 수 있다.⁵⁵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무역수지 적자이다. 80년대 들어 수출부진과 수입 증가세 지속으로 무역수지적자가 전년 1~5월의 20억2천9백만 달러에서 22억1천9백만 달러로 확대되고 관광수입저조로 무역외수지는 전년(79년) 1억7천7백만 달러 흑자에서 3억7백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80년대에 들어 5월기준으로 경상수지적자는 23억8천4백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적자폭 16억7천9백만 달러보다 42%나 늘어난 것이었다.⁵⁶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고금리 추세 및 김파동 등까지 겹쳐 이자부담이 대폭 늘어났다.⁵⁷ 특히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에 주목하면,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계속 누적되어 79년 말에는 1백62억2천1백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대일 무역 적자가 전체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었다.⁵⁸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폭은 갈수록 확대되어 1980년 5월 말의 경우 대일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나 줄어든 12억2천만 달러인데 반해 수

⁵⁴ 박태균. 2009. 「박정희 정부 시기를 통해 본 발전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74호, pp.15-43.

⁵⁵ 『경향신문』. 1980년 12월 30일. 「도매물가 44.2%, 소비자 34.6% 상승 올 억제목표 1.5배 넘어」.

⁵⁶ 『경향신문』. 1980년 6월 10일. 「올들어 경상수지적자 23억 8천만불」.

⁵⁷ 『경향신문』. 1979년 10월 1일. 「무역적자 내년 국제 수지적자 올 수준서 억제」. ; 『매일경제』. 1980년 6월 28일. 「투자수입 지급액 1~5월 중 8억불 이자부담 늘어 무역외수지 악화」.

⁵⁸ 『경향신문』. 1980년 8월 15일. 「대일 무역적자 누적 작년말 1백62억불」.

입은 25억5천만 달러(전년동기비 5.0% 감소)로 동년 들어서만 대일 무역 적자는 13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5개월간의 전체 무역적자의 59.5%에 달한 결과였다.⁵⁹ 이처럼 한국과 일본간에서는 오래된 무역 역조관계가 축적되어왔다.

정리하자면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취임한 당시 한국의 경제위기는 두 말할 것없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60년대 이래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면서 복합적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었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1980년 민주화의 열망이 가득했던 이른바 ‘서울의 봄’이 신군부에 의해 무산되면서 국내 정치는 불안하고 사회는 혼란스러웠다.⁶⁰ 그러므로 10.26사태와 광주민주항쟁이라는 파격을 거쳐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에게 있어 경제적 안정을 확립하는 것이 곧 정권의 신뢰를 되찾아 사회적 안정을 획득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와 같은 경제난 속에서 전두환 정권이 추진한 정책이 바로 박정희시대 실패로 끝난 안정화 시책으로의 대전환이었다.

2.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80년대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의 필요성은 70년대 말 극심한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한 성장정책의 부작용 문제였으며, 이에 따라 성장제일주의에서 탈피하여, 안정과 자율, 개방으로 경제운용의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경제기획원 중심의 안정화 시책 추진론자들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대전환만이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⁵⁹ 『매일경제』, 1980년 7월 8일. 「대일무역적자폭 갈수록 확대」.

⁶⁰ 김동호. 2019. 『대통령 경제사』 서울: HadA. p.151.

는 인식을 공유했다.⁶¹ 안정화 시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80년 초 1982년부터 86년까지 진행될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이 계획되었다.

5개년계획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고, 국정 우선순위를 경제개발에 둔다는 국정목표를 국민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상징’으로서 훌륭하게 기능하였다.⁶² 5차계획은 5공화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목표인 만큼 전두환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은 모두 10회에 걸쳐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충실한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했다.⁶³

1981년 8월에 확정 발표된 이 계획은 안정, 능률, 균형의 이념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첫째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성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둘째 과거의 지나친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경제능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경제운용 방식으로 전환하며, 셋째 성장 추구 과정에서 다소 경시되었던 지역 간, 부문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계층 간의 분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⁶⁴ 즉 경제적 안정과 사회개발 촉진 중심의 목표로 단순한 경제개발계획이라기보다는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이 복합된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서 공유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발전전략을 물량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질 위주의 발전전략⁶⁵으로 바

⁶¹ 윤홍근. 2013.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와 시장제도의 변화: 1980년대 초 ‘안정화시책’에 대한 담론제도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2권 1호, pp.163-188.

⁶² 위의 논문.

⁶³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50.

⁶⁴ 위의 저서. p.50.

⁶⁵ 구체적인 주요 과제로서는 1, 인플레이경제의 탈피, 2.중화학 공업의 경쟁력 확보, 3.농수산업

꾸도록 했다.⁶⁶ 경제기획원이 마련해 1980년 7월 31일 경제장관협의회를 거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5차계획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율을 8%로 잡은 것을 비롯하여, 도매물가상승률 9%, 수출물량 증가율을 12.1%로 각각 잡아 나라경제를 운용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될 경우 5차계획이 끝나는 86년에는 1인당 GNP가 4천2백1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⁶⁷ 이와 같은 5차계획의 외자 소요 금액으로서 계획 기간 중 333억 달러의 차관 등 모두 465억달러의 외자를 도입할 계획이 세워졌다.⁶⁸

그런데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경제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이와 같은 거액 재원을 과연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을까? 특히 외자조달의 경우, 국제고금리 현상은 해외에서의 차관도입을 어렵게 했을 것이 예상되며, 상환능력 등의 대외신인도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차관문제에 있어, 경제난에 직면한 한국정부에게 충분한 재원을 지원해줄 국가 및 금융기관이 얼마나 있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일 안보경협과 5차계획을 중심역할로서 동시에 담당해야 했던 한국정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하였을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안보명목이다.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상환능력의 저하와 국제 고금리현상으로 외자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정부는 거액의 외자를 저금리로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구축의 개선, 4.에너지 제약의 극복, 5.금융제도의 개선, 6. 정부기능의 재정립과 재정운영의 합리화, 7. 경쟁체제의 확립과 개방정책의 촉진, 8. 교육 및 인력발전과 과학기술의 부흥, 9.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토지자원 이용의 합리화, 10. 새로운 농사관계의 정착, 11. 사회발전의 확충이었다. 경제기획원. 1980.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작성 지침(안) 요약」. P.24.

⁶⁶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 50.

⁶⁷ 『동아일보』. 1980년 7월 31일. 「성장률 연평균 8%로 5차5개년계획 지침 마련 86년 인 GNP 4천2백1달러」.

⁶⁸ 『동아일보』. 1981년 8월 22일. 「탈 인플레이션... 성장보다 안정추구 「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방향과 문제점」.

명분이 필요했으며, 그러한 명분으로 안보명목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 예상된다.⁶⁹ 앞서 제시한 한일간 안보적 협력의 비현실성과 안보차원과 경제 형태의 연계성을 고려해 본다면, 외자조달이 어려운 국제 금융적 상황에 직면한 한국은 애초부터 안보명목을 통해서야만이 거액 차관을 확보할 수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465억 달러의 일부를 충당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것이 실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안보명목은 100억 달러 발상 초기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실천에 대한 거액 외자를 좋은 조건으로 확보하는 명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다시 말해 한국의 대일 안보경협 요청은 애초부터 안보적 달성보다는 한국경제 그 자체를 위한 경제적 달성이 목적이었으며, 한국정부는 안보경협이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의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은 100억 달러 구상요인, 안보와 경제의 연계요인, 자금도입 목적 및 그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정부의 전략적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제 3 장 1980년대 한일 안보경협의 전개와 성사

제 1 절 안보경협 논의의 시작과 전두환의 100억 달러

⁶⁹ 앞서 제시한대로 선행연구에서는 이미 한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거액차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논문이나, 그러한 거액차관 확보에 안보가 명목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논문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더 나아가 그러한 자원조달을 안보를 수단으로 해야만 했던 대외 경제적요인 및 배경에 대하여 보다 심화시키고, 또한 그러한 자금을 실제 어디에 도입코자 하였는지를 증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상정 배경

1. 전두환-레이건 정상회담

한일 안보경협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과 레이건(Ronald W Reagan) 미국 대통령이 1981년 2월 2일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킨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였다. 전 대통령의 방미에는 신병현 부총리, 노신영 외무장관, 주영복 국방장관, 김용식 주미대사 등 11명의 공식수행과 국내기자 20명 등이 수행했다.⁷⁰ 동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한미양국의 협력강화를 넘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대일 안보경협에 대한 가능성을 얻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2월 2일 양 정상은 한미 양국간의 안보, 외교, 경제, 문화협력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⁷¹ 특히 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백지화하는데 동의하고 더군다나 한국이 안보차원의 대일 경협 요청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데 협상의 의미가 매우 컸다.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던 1980년 전후의 한국 안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미국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었다. 대통령선거 유세 때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공약했던 카터는 1977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공개적으로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향후 4~5년 내에 주한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할 것임을 통고했다. 결과적으로

⁷⁰ 『경향신문』, 1980년 1월 28일. 「전대통령방미등정하오 3시 영부인동반 10박 11일 - 내일새벽 LA 도착」.

⁷¹ 『경향신문』, 1981년 2월 3일. 「한미정상회담 ... 14개 정 공동성명 주한미군철수계획 백지화」.

는 1978년 ‘미군 철수 보안을 위한 특별국제안보원조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하자 이듬해 1979년 2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군철수문제는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카터 행정부에 이어 그 다음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들어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 새 정부에게 새로 취임한 레이건 행정부와 미지상군 계획문제에 대한 합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였다.⁷² 더욱이 소련은 북한에 접근하여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 주장과 남북 대화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북한 역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무력 개입과 친소련 정부 수립을 지지하면서 소련과의 관계를 회복, 강화했다.⁷³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당시 남북한의 대치 상황은 우려할 만큼 한국에게 불리했다고 주장한다. 회고록에 따르면 “GNP의 6.3%를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었던 한국과 달리 북한은 23.8%를 군사력 증강에 투자하고 있어 군사력 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현저히 우위에 있었다. 또한 북한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소련 극동군의 배치 병력도 위협적인 규모에 이르고 있었다.”라는 주장이다.⁷⁴ 영국의 국제전략 문제연구소(IISS)는 「The Military Balance 1981-1982」 보고서를 내면서 남북한 간의 군사력 불균형이 80년대 들어 더욱 커져 북한의 전력증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⁷⁵

⁷²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p.294-295.

⁷³ 장준갑, 김건. 2013. 「1980년대 초반(1980-1981) 한미관계 읽기」. 『미국사연구』 (한국미국사학회) 38권. pp.191-218.; 같은 논문에서 Young C. Kim, 1981. “North Korea in 1980: The Sun Also Rises,” Asian Survey, 21(1); 112-124. 재인용.

⁷⁴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295.

⁷⁵ 유석열. 1982. 「학술회의발표문 : 80년대 북한의 변화 전망과 대남전략」. 『안보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2권 0호 pp.143-154.에서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1~1982」. pp.82-84. 재인용.

전두환 대통령의 우려와는 달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에 쌓여 있던 모든 불신과 우려가 말끔히 사라지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순간이 되었다.⁷⁶ 이 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한미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 논의는 없을 것이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였다.⁷⁷ 이어 한국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을 위해 군장비를 지원해주고 F-16 전폭기 등 최신 군사장비에 대한 판매를 촉진키로 의견을 모았다.⁷⁸ 전두환은 그 동안 그렇게도 한국의 대내외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미군철수 문제가 백지화되고 F-16 구매도 약속을 얻어 그것만으로도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⁷⁹

한국의 대일 안보경협에 대한 협력요청은 같은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회담이 끝나가는 무렵 다시 발언을 시작하면서 “사실 이번 나의 미국 방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레이건 대통령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그 동안 미국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지만 아직은 경제력이 미약하다. 더욱이 600 억 달러의 GNP

⁷⁶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307.

⁷⁷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p.242-243.

⁷⁸ 『동아일보』. 1981년 2월 3일. 「오늘새벽 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 1시간20분 주한미군철수 계획 백지화」. ; 『경향신문』. 1981년 2월 3일. 「팬타곤서 국방장관 회담 F-16 등 최신 장비 대한판매 촉진 합의」.

⁷⁹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p.308.

중에서 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 조 1,600 억 달러의 GNP 중 불과 0.09%만 국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공산주의세력에 대하여 방파제와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본은 평화 속에서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만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한국의 방위를 위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달했다.⁸⁰ 다시 말해 일본이 오늘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공산진영에 대한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의 의미로 일본이 이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논리였다.⁸¹ 이러한 설명에 따른 전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순수한 안전보장의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이 2 개 사단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데 소요되는 만큼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위비 형태가 아닌 경제협력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미국이 일본을 설득해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아닌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자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께서 일본이 한국에 차관을 공여해주도록 일본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것이 나의 요구이다. 각하의 도움으로 만약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돈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비행기와 탱크 등 무기를 구입할 생각이다. 그러면 결국 미국에

⁸⁰ 위의 저서. pp.309-310.

⁸¹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p.243-244.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내가 미국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것이다.”⁸²

전두환 대통령의 이러한 논리는 일본의 안보협력차관을 얻어내는 일은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차관자금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오게 되는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도 환영할 일이라는 논리였다. 전두환의 협력요청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말에 이견이 없다(no disagreement)”고 하면서 한미간에 대일 안보경협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다.⁸³

중요한 것은 안보경협 논의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전두환의 대일 안보경협 논리는 ‘일본에서 차관을 얻어 그 차관으로 미국의 군사무기를 구입한다’는 논리로서 한국의 ‘군력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안보목적으로 시작했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정부, 특히 전두환의 한일 안보경협 구상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순수한 군사 및 안전보장의 목적으로 시작했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아무리 안보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다고 하더라도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만으로 100 억 달러라는 거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무시할 수 없다.

2. 이토외상 방한

⁸²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p.310-311. 하선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⁸³ 위의 저서. p.309, 311.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한 달 후인 1981년 3월 3일,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로 이토 마사요시(伊東正義) 일본 외상이 한국을 방문해, 남덕우 총리, 노신영 외무장관 등 한국측과 일련의 고위회담을 가졌다.⁸⁴ 이 날은 한국이 일본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안보경협 문제를 제기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서 한일 양국은 안보경협의 협상을 비공식적인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 일에 방한한 이토 외상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청에서 노신영 외무장관, 남덕우 총리 등과 회담자리를 가져, 4 월 도쿄에서의 외상회담개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와, 1979 년 이래 중단되었던 한일정기각료회의의 조기 재개에 대해서 합의하는 등 김대중 재판을 둘러싸고 엇갈려진 한일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확인했다.⁸⁵ 하지만 이날 오후 3 시부터 진행된 노신영-이토 회담에서 한일양국은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게 된다. 이토 외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본은 남북대화의 중재역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신영 장관은 일본의 남북대화 중재역할을 사절하고, 그에 앞서 일본은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하여 우리와 인식을 같이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노신영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정세와 한국의 방위력 강화에 대하여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을 알렸다. 이어서 농작물의 냉해 등으로 한국은 작년도의 경제성장이

⁸⁴ 『동아일보』. 1981년 3월 3일. 「한국수뇌 이동 일지보도 한일우호증진 합의」. ; 『동아일보』, 1981년 3월 10일. 「한일관계 … 새 현실과 냉기」.

⁸⁵ 『毎日新聞』. 1981년 3월 3일. 「韓国 政治 全斗煥大統領就任式：伊東外相、訪韓へ - 盧信外相と会談、日韓関係修復を確認」. ; 『毎日新聞』. 1981년 3월 3일. 「韓国 政治 全斗煥大統領就任式：伊東外相、訪韓へ - 「南北問題」など認識になお隔たり」.

마이너스로 되었으나, 여전히 GNP 의 6%를 국방비에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설명하고, 일본의 자유와 평화 번영이 한국의 굳건한 방위력에 의존함이 적지 않음을 지적한 후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요망하였다.⁸⁶ 다시 말해 일본이 오늘날 경제적 번영을 노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방위력 덕택이며, 한국은 즉슨 일본의 방파제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안보적 역할분담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 시경에 진행된 남덕우-이토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일안보경협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확인되었다. 남덕우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언급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치한다고 하면서 “일본도 기본적 인식, 이해가 일치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일본 측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불만을 표명했다. 이에 이토 외상은 첫째, 일본은 한미관계를 기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주의 증시의 자세이기도 하고, 군사적 협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본의 자세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둘째,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민간주도로 투자나 용자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로서는 민간협력이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 아시아에게 중요하며 일본은 중국하고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시야로 일본 나름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⁸⁷

취임식이 개최된 3 월 3 일에는 전 대통령이 이토 외상에게 직접 대일 안보경협에 대해 언급하였다. 전 대통령 또한 일본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우리와 같이 하기를 요망하였고, 이어 일본의 번영이 우리의 튼튼한

⁸⁶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253.

⁸⁷ 『毎日新聞』. 1981年 3月 3日. 「韓国 政治 全斗煥大統領就任式: 伊東外相、訪韓へ - 盧信外相と會談、日韓關係修復を確認」.

방위력 덕분임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하여 일본이 경제원조로 협력해주기를 요망하였다.⁸⁸

한국 새 정부의 일본에 대한 기본입장, 즉 한국의 안보방파제 역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역할분담 요청은 이렇게 전달되었다. 이토외상은 한국의 각 요망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펼치던 일본의 기본 입장은 안보차원의 경제협력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경제협력을 한다면 민간베이스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이 일본에게 안보경협외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협 액수를 제시하기 전부터 한일간에는 안보에 대한 인식차이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정부가 100 억 달러의 액수를 일본에게 처음으로 요청한 것은 노신영 외교부장관이 스노베 료조 주한 일본대신을 만나서 전달한 1981 년 4 월 22 일로, 이토 외상과의 회담을 통해 일본의 안보협력 반대의 기본입장을 확인한 후에 일어난 일이다. 안보적 협력이 어렵다는 일본과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100 억 달러의 거액을 안보차원으로 요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떠한 사고들이 작용했을까? 한국이 안보경협 요청의 이유로 일관적으로 언급하는 ‘한국의 안보방파제에 대한 일본의 역할분담 논리’는 어떠한 배경에서 나타났을까? 다시 말해 전두환은 어떻게 해서 안보차원으로 100 억 달러라는 거액의 경제협력을 구상하게 되었는가?

3. 전두환의 100억 달러 상정요인

⁸⁸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254.

(1) 전두환의 100억 달러 구상요인

여기서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언급하고 있는 100 억 달러의 구상배경을 관찰하여 거액차관의 의미를 살펴본다. 전두환은 안보협력의 비현실적 상황에서도 완전히 안보적 달성을 중심목적으로 구상하였을까? 아니면 5 차계획에 기반한 경제적 달성을 목적으로 구상하였을까?

전두환의 거액상정 근거는 과거 한국전쟁과 연결된다. 전두환은 2 차대전 당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아 패전국이 되었지만 이후에 몰아닥친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전략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경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일본의 지역안보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요인으로서 한국전쟁에서의 한국을 비롯한 UN 회원국들의 희생 끝에 일본이 안전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를 보면서 번영을 구가했다는 관점을 표시하고 있다.⁸⁹ 제 2 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일본 경제는 파멸적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2 차대전으로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 2 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제발전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두 차례 전쟁 특수에 크게 의존했다.⁹⁰ 이는 이미 한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역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평화비용을 대한민국이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조한다.⁹¹ 즉 한국정부가 대일 안보경협을 이유로 설명하는 ‘한국의 안보방파제역할에 대한 일본의 역할분담 요청’은 이처럼 과거 일본이 한국전쟁 특수로 인해 경제적 번영을

⁸⁹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p.302-303.

⁹⁰ 곽양춘. 2001. 「 [6·25 전쟁과 일본의 전쟁특수] 일본경제 재생의 ‘카미카제(神風)’ 6·25 전쟁」. 『민족 21』 통권 제7호. pp.124-127.

⁹¹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303.

일으켰다는 전두환의 강한 심리가 작용해서 나타난 것이었다. 전두환은 100 억 달러의 산정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곧바로 나는 수행하고 있던 주영복 국방부장관을 불렀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군 1 개 사단을 유지하는 데 1 년에 드는 비용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물었다. 약 10 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 2 개 사단을 주둔시켰다. 일본이 한반도를 계속 강점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2 개 사단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은 최소한 그 정도의 안보 비용을 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 10 억 달러×2 개 사단×5 년=100 억 달러. 이 100 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안보협력자금으로 받아내자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⁹²

과거 일본의 전쟁특수에 대한 심리로 그만큼 앞으로 일본은 경제적으로 이를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닿은 전두환은 미국의 1 개 사단을 유지하는 데 1 년에 드는 비용이 약 10 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해 이를 기반하여 일본에 요청할 분담비용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에 2 개 사단을 주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100 억 달러의 액수를 생각해냈던 것이다. 즉 전두환의 이러한 구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0 억 달러의 대일 안보경협은 경제정책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순수한 안보적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거액 안보차관 구상은 전두환의 참신한 생각과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⁹² 위의 저서. p.303. 하선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하는 방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의 100 억 달러 구상에 대해 관료나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군 출신의 일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구상이 가능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100 억 달러 안보차관 구상도 말하자면 전두환의 그러한 방식에서 상정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안보문제에 있어서 서방국가의 일원으로서의 공통인식에서 벗어나 있음을 인식하였고 따라서 자유세계의 방위분담이라는 명분의 대일경협 요청이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음을 우려했다.⁹³ 당시 일본의 한반도관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등거리외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경분리 지침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았다. 전두환은 대일 안보경협을 실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한반도 인식에 대한 차이를 인지해 한일 안보경협의 성사를 우려했다. 협상의 어려움을 인식한 전두환은 그 가능성을 높이고자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을 강조하였고 미국의 힘이 곧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요청한 것이었다.⁹⁴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두환은 레이건 대통령의 협조의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한국에게 미국의 이러한 협력자세가 일본과의 안보적 협력의

⁹³ 위의 저서. p.303, 354.

⁹⁴ 위의 저서. p.304, 354. 전두환-레이건 회담 이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 스즈키 수상과 회담을 가져 이 자리에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역할분담의 필요성을 논함에 따라 전두환정권은 대일 안보경협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1981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레이건 미 대통령과 스즈키 일본 수상이 회담을 가져, 양 정상은 미일 안보관계와 아시아 안보에 대해 협의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중요한 만큼 한반도 평화유지를 촉진시킬 것”을 약속하였고, 더욱이 두 정상은 지역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일본의 방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Oh, K.D. 1986. Japan-Korea Rapprochement: A Study in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1980'S. California U, PhD dissertation. 80년대 한일 경협에 있어 미국이나 미-일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으나, 본고는 한국의 대일 안보경협의 ‘목적’을 중심으로 다루는 논문으로서 한국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미-일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한다.

비현실성을 덜어주고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박차를 가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두환의 100억 달러 구상요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00억 달러의 안보경협 구상의 근본적인 요인은 본고가 주장하고자 한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달성이 목적이 아닌 북한의 군력증강에 따른 안보위기에 맞서기 위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 특히 대일자금을 통해 미국의 군사무기를 구매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순수한 안보적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두환의 안보경협 구상은 과거 한국전쟁에서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낸 전쟁특수에 대한 심리가 작용했다. 하지만 거액 상정의 의미는 안보적 목적을 성취하자는 심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해주는 변수들의 역할로 인해 가능했다. 그것은 첫째, 관료나 외교관 출신이 아닌 군출신의 권위주의 정권의 일하는 방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일본과의 안보적 협력은 애초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특히 등거리외교를 펼치던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중립 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양국의 안보인식 격차는 전두환의 대일 안보경협 실천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전두환은 그러한 비현실성에서 벗어나고자 미국의 협조를 중시했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두환은 일본이 오늘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공산진영에 대한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미국이 2개 사단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일본은 방위비 형태가 아닌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⁹⁵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미국의 협조의를 확인한 전두환은 대일안보경협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동력을

⁹⁵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p.243-244.

얻었다. 이처럼 전두환의 100 억 달러 안보경협 구상은 순수한 안보적 목적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복합적 변수들이 도모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2) 관계장관들에 의한 100억 달러 사용계획서 작성과정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전두환은 1981 년 2 월 7 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사항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일본의 경제협력자금 문제는 내각 차원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항이었다. 그런 만큼 관계 장관들에게 전두환의 구상과 추진 의지를 지체없이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대일 차관 문제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⁹⁶

전두환은 먼저 신병현 부총리와 김경원 비서실장을 따로 불러 대일 100 억 달러 차관 요청서를 만들어올 것을 지시했다.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신병현 부총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어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경제차관의 한도는 이미 소진되어 전혀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100 억 달러라는 거액을 들어본 일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전두환은 이어 주영복 국방부장관을 불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100 억 달러 차관자금의 사용계획서를 만들어 오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한술 더 떠서 200 억 달러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두 시간 만에 만들어 왔다. 차관을 얻어 오는 일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돈이 마련되면 쓸 일만 남은 국방부로서야 어려울 게 없었다고 한다. 전두환은 이어 국방장관이 가져온 그 계획서를 신병현 부총리에게 주면서 경제기획원의

⁹⁶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349.

안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했다.⁹⁷ 이처럼 100 억 달러의 사용계획안 작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방부로 지시가 들어갔으며, 애초부터 한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작성되었다. 처음에 100 억 달러의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는 전두환의 지시에 대해 그것을 두 배로 늘려 200 억 달러의 사용내역서를 가져온 국방부의 사정을 보면 한국의 국방력 증강이 얼마나 시급하였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국방장관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경제기획원의 안을 작성해 오라는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최창락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이 편성되었고, 여기에서 경제협력의 규모와 예산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1981 년 2 월 28 일 향후 5 년 간에 걸쳐서 정부개발원조(ODA) 40 억 달러, 금융기관차관 10 억 달러, 도합 50 억 달러를 일본에 요청하는 안을 작성했다. 이 안은 일본 정부가 ODA 를 향후 5 년 간에 배증한다는 공약을 하였으므로 ODA 총액이 214 억 달러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20%에 해당하는 약 40 억 달러를 5 년 간에 걸쳐서 매년 8 억 달러씩 지원받도록 한 것으로 일본의 배증공약을 기초로 작성한 시안이었다.⁹⁸ 도합 50 억 달러의 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실무자들은 액수가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안을 신병현 부총리, 노신영 외무부장관, 최창락 기획원차관이 함께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 대통령은 금액을 100 억 달러로 늘리라고 다시 지시했다.⁹⁹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에서는 배증될 ODA 총액의 30%에

⁹⁷ 위의 저서. pp.349-351.

⁹⁸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280.

⁹⁹ 이재춘. 2011.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 : 온 몸으로 부딪힌 격동의 세월 36년』. 서울: 기파랑. p.147.

해당하는 60 억 달러와 수출입은행차관 40 억 달러, 도합 100 억 달러를 5 년 간에 지원받는 안을 새로 작성하여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¹⁰⁰ 전 대통령은 차관교섭을 맡을 노신영 외무부장관을 불러 경제기획원이 작성해 온 대일 경제협력안을 주면서 “이것을 일본 정부와 협상해서 성사시키되 100 억 달러에서 한 폰도 삭감하지 않도록 직을 걸고 추진하라.”고 단단히 알렸다.¹⁰¹ 노신영 장관도 100 억 달러 교섭이 무리라고 인식했지만, 교섭책임자로서 대통령 면전에서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워보였다고 한다. 그만큼 전두환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위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했다.¹⁰² 당시 한국에서는 독재정권 하에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가 절대적이었으며, 전두환은 관계장관들에게 액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100 억 달러의 거액을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두환 정권의 100 억 달러의 구체적인 산정이 완료되었다. 제 2 절에서는 한일 안보경협 의 제 2 시기 과정으로서 스즈키 내각 협상시기를 다룬다. 스즈키 내각 교섭기는 1981 년부터 82 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연도에 구분하여 한국의 안보경협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양국의 입장의 특징을 관찰한다.

제 2 절 81년 스즈키 내각 협상 시기

¹⁰⁰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280.

¹⁰¹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352.

¹⁰² 이재춘. 2011.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 : 온 몸으로 부딪힌 격동의 세월 36년』. 서울: 기파랑. p.147, 150.

1. 노신영 - 스노베 100억달러 비공식 요청

81년 스키 내각 협상시기는 한국정부가 대일경협을 금액과 함께 요청한 노신영-스노베 협상시기를 계기로 양국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4월 말에 위임한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의 이임예방 기회에 노신영 장관이 ODA 60억 달러, 수출입은행차관 40억 달러 포함 100억 달러를 향후 5년간에 걸쳐 일본정부가 한국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 최대의 이슈로 등장했다. 일본정부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우선 한국 측이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인데다가 한국 측이 내세우는 경제협력의 명분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노신영 장관을 면담할 때마다 한국 측의 요청이 과다한 것임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한 노 장관의 답변은 언제나 녹음한 것처럼 같았다. 노 장관은 “현하의 남북한 대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우리 GNP의 6%, 예산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지만, 우리는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극동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정도만큼 일본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일본의 역할분담 논리를 되풀이하었다.¹⁰³ 한국의 요청은 스노베 대사로 하여금 일본 북동아시아국에 전보로 전달되었다. 전보에 적힌 내용은 한국의 기본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지만, 액수에 대한 근거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한국의 요청에 대해 일본측은 경협액수와 명분에 놀라움을 표시했다.¹⁰⁴ 노신영은 한국정부가

¹⁰³ 위의 저서, pp.147-148.

¹⁰⁴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p.16-18.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 정립을 위하여 100 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일본정부에 요청한 사실을 최경록 주일대사에게 알리고, 다음 번 외상회담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⁰⁵

한일 양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면서 100 억 달러의 경제협력 문제는 난항을 겪게 되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6 월 4~5 일 동경에서 예정된 외상회담을 통해 교섭을 시작하기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예정되었던 한일외상회담은 일본의 국내사정으로 연기되었다. 그 배경에는 미일 ‘동맹관계’ 단어를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와 이에 따른 이토외상의 사임 등 복잡한 일본 국내사정이 걸림돌이 되었다.¹⁰⁶

1981 년 5 월 4 일부터 9 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스즈키 수상은 레이건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한미간 수상 레벨의 공식문서로서는 처음으로 한미관계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레이건정권이 소련의 군비확장에 신경을 기울이고 대소전략 강화를 강조했던 만큼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한미 ‘동맹’은 군사력 증강을 의미하지 않고 ‘동맹’이라는 단어는 군사적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총리관저 측의 설명과 동맹관계는 당연히 군사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외무성(사무당국의 설명) 간에 표면적 모순이 생겼다. 이에 대해 공동성명 작성과정에 있는 총리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승인 유무의 문제가 겹쳐 그 결과 혼란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이토 외상과 다카시마 외무차관이 사임해, 소노다 외상과 스노베 외무차관이라는 새로운 포진이 등장했다. 또한 ‘동맹’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일본국내의 혼란은 그

¹⁰⁵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p.281-282.

¹⁰⁶ 『동아일보』. 1981년 5월 30일. 「한일외상회담 연기」.

배경에 극동의 안전보장에 대해 레이건정권과 스텔스내각의 인식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일간의 외상 접촉이나 수뇌 접촉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본 측에 의해 한층 강해지면서 결국 한일외상회담 개최는 1981년 8월까지 미뤄졌다.¹⁰⁷

2. 한일 외상회담과 60억 달러 안보경협 공식요청

1980년대의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한일 외상회담이 1981년 8월 20일 오후 동경에서 개막되었다.¹⁰⁸ 회담은 20일과 21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일에 개최된 제 1차 외상회담에서는 국제정세, 한반도정세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고, 현안의 안보경협문제는 주로 21일에 진행된 제 2차 회담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¹⁰⁹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노신영 외교부장관, 최창락 경제기획원차관, 공로명 외무부 정무차관보, 최동진 아주국장, 이기주 국제경제국장, 김경철 통상국장, 신운재 경제기획원 투자심사국장, 유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과 이재춘 외무부 동북아과장이 배석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기우치 외무성 아주국장, 야나이 경제국장, 아마우 정보문화국장, 오구라 북동아과장 등이 배석하였다.¹¹⁰

¹⁰⁷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p.38-39. 교섭 실무자였던 오구라는 외상회담 연기 원인으로 '동맹'에 대한 해석문제 외에도 한일안보경협을 둘러싼 정치적 결단의 어려움이나 미국 군함에 의한 핵적개기항문제 등을 설명한다. 같은 저서. pp.50-51.

¹⁰⁸ 『매일경제』. 1981년 8월 20일. 「한일외상회담 3년만에 재개」.

¹⁰⁹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82.

¹¹⁰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p.284-285.

제 1 차 외상회담에서 양국 외상은 양국의 안정과 번영에 양국이 상호의존관계와 연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에 입각한 새로운 차원에서 양국관계의 긴밀화를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¹¹¹ 특히 1 차 회담에서 중심의제가 된 것은 노신영 장관이 일본에게 양국이 북한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가지도록 바라는 자세를 표시한 부분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북한의 대남 대결정책에 대하여 중립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했으며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방관하거나 수출입은행 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노신영 장관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기본자세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노 장관은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토대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회담 벽두에 북한문제를 거론했다.¹¹² 노 장관은 북한의 전력증강 상황과 남북한 간 군사력의 현격한 차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어 일본 내에서 일본인의 북한 왕래가 북한을 자유세계로 끌어내는 계기가 되어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대두되고 있음에 언급하고, 그 동안의 일본과 북한 간의 교류가 긴장완화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대결자세를 강화시켰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일본이 진정한 한국의 우방이라면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하지 않는 일은 일본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¹¹³

이에 대한 일본측 반응에 대해 양국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한국측 관점은 한국의 요청에 대해, 소노다 외상은 북한의 전력증강을

¹¹¹ 『동아일보』. 1981년 8월 21일. 「한일경협 오늘 중점논의」.

¹¹² 이재춘. 2011.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 : 온 몸으로 부딪힌 격동의 세월 36 년』. 서울: 기파랑. p.152.

¹¹³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287.

대강 알고 있었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력 격차가 것처럼 크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고 언급하고, 일본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희망하고 있으나 교류로 그들을 자유세계로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현재 민간수준에서 북한과의 교류가 있으나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는 관점을 설명한다.¹¹⁴

일본측 관점은, 소노다는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것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그러므로 긴장완화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여, 일본은 민간교류를 계속할 것이지만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하고도 잘 상의하고 싶다는 자세를 표시했다고 한다. 북한 요인(要人)의 왕래에 대해서는 약속은 할 수 없으나 한국측의 입장은 '유의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노 장관은 북한의 대결자세가 계속되는 한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고무하는 듯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반복적으로 추구한 데 있어, 소노다 외상도 '미국과 마찬가지로'라는 말에 이의를 주창한다는 형태로 언급해, 노 장관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의 언질을 얻으려고 하면서 외교적으로 말하면 이예(異例)라고도 할 수 있는 추구였다고 한다.¹¹⁵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측 관점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양국 간에서 북한 정책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입장으로서는 완전한 동의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의 가능성을 남기는 약간의 한계가 남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¹¹⁴ 위의 저서. p.287.

¹¹⁵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83.

다음날 21 일 제 2 차 회담에서 중심 의제인 안보경협문제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 장관은 21 일 오후 속개된 제 2 차 한일외상회담에서 일본에 대해 82 년부터 시작되는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기간 중 60 억 달러의 공공차관을 제공해줄 것을 공식요청했다.¹¹⁶ 노 장관은 일본이 헌법상의 제약으로 군사협력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은 알겠다고 전제한 후, 한국으로서는 1986 년도까지 북한 군사력의 70% 수준으로 방위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일본이 제공한 지난 5 년 간의 공공차관 총액에 언급하고, 한국의 과중한 방위비 부담을 고려할 때 한국의 요청은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는 국교수립 후 발생한 200 억 달러 이상의 대일 무역적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결과도 될 것임을 부연하였다. 이어서 민간 베이스 프로젝트 위주의 수출입은행자금보다는 60 억 달러의 공공차관 문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러나 일본측이 경협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의 자료로서 공공차관의 프로젝트별 명세서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¹¹⁷ 노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위 노력의 실정을 설명하고 일본이 그 경제력에 상응하는 협력을 해 줄 것을 희망하는 가운데 이 같이 요청했다.¹¹⁸

한국측 요청에 대한 일본의 견해는 안보경협은 불가능하므로 협력의 명분은 제 5 공화국 정부의 새로운 국가건설에 대한 기여로 하고 싶다고 견지했다. 또한 ODA 자금의 한도 때문에 한국측이 요청한 금액 전부는 안

¹¹⁶ 『경향신문』. 1981년 8월 22일. 「한일외상회담 폐막 한국 60억불 요청, 안보연계 경협 거부」.

¹¹⁷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289.

¹¹⁸ 『경향신문』. 1981년 8월 22일. 「한일외상회담 폐막 한국 60억불 요청, 안보연계 경협 거부」.

되나 가능한 한 성의를 다하겠다고 하고, 이어 협력은 단년도의 프로젝트별 적상 방식이 돼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국 일본측은 한국이 요청한 공공차관 60 억 달러는 과하다며, 경험총액만을 먼저 제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담에서는 제 11 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를 9 월 10 일과 11 일 양일 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참석할 각료의 범위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¹¹⁹

한일외상회담이 이틀 간의 일정을 끝내고 21 일 공동발표문이 발표되었다. 노 장관과 소노다 외상은 공동발표문에서 일본 측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상태의 존재를 인정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거나 한반도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측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위노력과 관련하여 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해 5 년간에 걸쳐 “60 억 달러에 달하는 공공차관의 공여”를 요청했으나 일본측은 “방위 분담적 발상에 의한 대한 경제협력은 할 수 없으며 일방으로서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갖는 한국이 현재 경제적 곤란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해서 될 수 있는 한의 기여를 하겠다”는 정도로 그쳤다. 이와 같은 성명내용을 한국언론은 노-소노다 회담은 양측의 입장을 솔직히 피력하는데 그쳤으며, 노 장관은 한달 동안이나 두고 설왕설래하던 한국의 대일차관 요청액을 60 억 달러로 밝혔고 소노다 외상은 방위분담 형식의 경제협력은 곤란하다는 일본 측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¹²⁰

한일 양국은 외상회담에 이어 21 일과 22 일 두 차례에 걸쳐 한일 실무자회의를 열고 한국이 요청한 일본의 공공차관 60 억 달러 제공 문제를

¹¹⁹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p.289-290.

¹²⁰ 『동아일보』. 1981년 8월 22일. 「한일외상 공동발표문」.

협의했으나 별다른 접근을 보지 못했다. 한국은 특히 22 일의 실무자회의에서 한국 측이 요청하고 있는 차관의 근거로 5 차계획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¹²¹ 한국은 5 차계획에 필요한 외자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 465 억 달러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계, 전자, 에너지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에 중점이 두어져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60 억 달러를 일관하여 결정 및 제공해줄 것을 희망했다.¹²²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은 앞으로 경제협력배증 5 개년계획에 따라 5 년분의 정부개발원조(ODA) 기금을 214 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지만, ‘아시아’에 할당되는 규모는 150 억 달러에 불과하며 한국에 대한 60 억 달러의 차관제공은 다른 아시아국가와의 균형상 무리라고 주장하고 일본의 예산제도가 단년제이므로 5 년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¹²³ 또한 무엇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지원할 것인지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전면적 전체적인 금액만을 요청 받아도 일본으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견지했다.¹²⁴ 이에 한국은 60 억 달러 차관 요청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개발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서를 밀봉해 소노다 외상에게 직접 전해주도록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았다.¹²⁵ 한국 측이 구체적인 협력 요청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소노다 외상에게 전한 것은 60 억 달러에 대한 검토를 실무진에 맡기지 말고 일본 정부 고위층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¹²⁶

¹²¹ 『동아일보』. 1981년 8월 24일. 「실무자회담도 진전 못봐」.

¹²² 『경향신문』. 1981년 8월 24일. 「60억불 차관 합의점 못찾아」.

¹²³ 『동아일보』. 1981년 8월 24일. 「실무자회담도 진전 못봐」.

¹²⁴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99.

¹²⁵ 한국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협력대상 프로젝트는 교육시설확충, 상하수도 댐건설 공해방지 시설 등이 포함되었다. 『동아일보』. 1981년 9월 7일. 「무리한 요청 일본측」.

¹²⁶ 『동아일보』. 1981년 8월 24일. 「실무자회담도 진전 못봐」.

안보경협 요청이 이날 한일외상회담 자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안보를 명목으로 하였지만 경제형태를 연계시키는 요청이었다. 즉 한국의 대일 안보경협 요청의 논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한국의 역할은 곧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안보 방파제역할로 인해 득을 보고 있는 일본에게 역할분담을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일본은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군사적 협력이 어려우므로 그 대신 이를 5 차계획의 경제형태로 지원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일 외상회담에서 보여진 양국 입장의 특징을 요약해본다. 먼저 한국 측 특징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와 경제의 연계성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애초 100 억 달러를 구상했을 당시 본래의 중심 목적은 북한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외상회담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대일경협은 안보를 근거로 하면서도 실제 내용을 보면 제 5 차 사회경제발전 5 개년계획을 위한 경제적 내용으로 전환했다.

둘째, 프로젝트 논의보다는 경협 총액의 일괄타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한국은 5 차계획의 소요 외자를 465 억달러로 밝히면서도, 일본이 제시하는 단년제 프로젝트논의보다 경협총액의 정치적 일괄타결을 요망했다. 구체적인 경제개발협력 차관내용을 일본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60 억 달러의 총액 검토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우선하는 목적이었다.

한국 요청에 대한 일본 측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역할분담적 발상에 의한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헌법상 제약이나 역사적 배경으로 군사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본은 안보를 명목으로 하는 경제협력은 할 수 없으나, 한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명목으로 한다면 이를 성의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안보와 경제의 연계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둘째, 정부차관 협력의 한계를 표시했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 5 개년계획에 따라 5 년분의 정부개발원조기금(ODA) 총액을 214 억달러로 늘릴 계획이 있지만, 차관공여가 필요한 다른 국가와의 밸런스를 고려할 때 한국에게 60 억 달러의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상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셋째, 일본의 차관지원 제도는 단년제 프로젝트 적상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총액타결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나 지원할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60 억 달러 총액의 선택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외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일 각료회담이 예정대로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나,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견지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3. 제11차 한일 정기각료회담

외상회담을 마치고 20 일만인 1981 년 9 월 10 일, 11 일 양일에 걸쳐 서울에서 제 11 차 한일 정기각료회담이 개최되었다. 일본측에서는 소노다 외상을 수석대표로 하여 와타나베 대장대신, 가메오카 농림수산대신, 다나카 통상산업대신, 시오가와 운수대신, 고모토 경제기획청장관과 마에다

주한대사가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신병현 부총리를 고문으로 하고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이승윤 재무부장관, 고건 농수산부장관, 서석준 상공부장관, 박봉환 동력자원부장관, 윤자중 교통부장관, 최창락 경제기획원차관과 최경록 주인대사가 참석하였다.¹²⁷

회담 첫날인 10 일 전체회의에서는 국제정세, 한반도정세, 그리고, 현안의 경제협력문제가 제의되었고, 11 일에는 외상회담 및 각료 개별회담이 이루어졌다.¹²⁸ 3 년만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은 경험에 관해 8 월 외상회담에서 밝힌 각자의 입장만을 되풀이하여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한국측은 총액결정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였고, 일본측은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실무자회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¹²⁹

10 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국측 노신영 장관은 ‘새로운 차원의 우호협력관계의 구축’, ‘건전하고 바른 관계의 구축’, ‘상호 의존관계와 연대의식에 입각한 협력’,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협력 확대와 심화’ 등의 표현을 쓰면서 한일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협력의 방도(方途)를 검토하고 싶다.”는 언급에 머물러, 한일관계를 추후 어떻게 구축해 나아갈지에 대한 의욕을 분명하게 내세우지는 않았다.¹³⁰

국제정세와 한반도정세에 대해 한국측은 소련의 확장주의에 언급해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분쟁요인의 증가를 강조하면서 서방의 방위노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력의 증강에 따라 한반도의

¹²⁷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p.292-293.

¹²⁸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116.

¹²⁹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295.

¹³⁰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p.116-117.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해 북한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과 사정 협의하기를 바라는 입장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한반도의 긴장과 이에 따르는 한국의 방위노력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는 동시에 남북대화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안의 경제협력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이승운 재무부장관이 한국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대일무역적자가 1965 년의 국교정상화 이래, 1981 년 8 월말까지 누적 211 억달러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일본에서의 각종자금의 확대 및 신용조건의 대폭 개선을 요망하면서 “한일간의 경제협력문제는 안전보장에 관한 현실을 두고 재정립해야 한다.”고 표명했다.¹³¹

한국 측 요청에 대해 소노다 외상은 일본 측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은 평화국가라는 국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대신하는 성격을 가지는 원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노다 외상은 경제협력규모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어려운 재정사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개발원조(ODA)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양적 확대도 한도가 있고 정부개발원조는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함으로써 한국측이 요청한 60 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소노다 외상은 또 “특히 70 년대 후반의 한일경협관계는 민간베이스를 주체로 진전되어왔으며 80 년대에 들어와서도 당연히 이 같은 방향에서 한일경협관계가 유지 및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정부베이스 협력에 관하여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의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한 사회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같은 방향을 계속해서

¹³¹ 위의 저서, p.117.

유지해나가고 싶다”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소노다 외상은 이어 일본의 대외경제협력 원칙을 밝히면서 “일본은 경제협력을 통해 세계의 경제발전과 평화안정에 공헌한다는 기본정책 아래 상호의존과 인도적 고려에 기초하여 피원조국 경제사회의 개발을 지원하고 민생안정 복지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협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¹³²

양국 외상은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양측의 기본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노신영 장관은 “향후 4~5 년간을 내다볼 때 한반도의 긴장완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 같은 안보상황 아래 한국은 매년 GNP 의 6%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이 같은 한국의 방위노력은 일차적으로는 한국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한반도의 전쟁재발 억지력이 되어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노다 외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 반 도 에 는 극심한 긴장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한국의 방위노력과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에 있어서 세계 균형유지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만 말함으로써 북한과 소련의 대한반도 위협에 관해서는 지난 외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언급을 회피하였다.¹³³

11 일에는 관계자들에 의한 개별회담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일 양측 경제기획 담당인 신병현 부총리와 고모토 도시오 장관 간에 개별회담에 주목할 수 있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양측의 입장을 강조할 뿐이고

¹³² 『동아일보』, 1981년 9월 10일. 「일, 안보-경협 분리 계속주장」.

¹³³ 위의 기사.

안보경협에 대한 인식차이는 커지기만 했다. 오구라 아시아과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 측 외교자료를 통해 경제기획원장관 개별회담에서의 양국의 입장 차이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측 신병현 부총리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노다 외상의 안보와 경협을 분리하는 발언은 실망감이 있다. GNP 의 6%를 국방비에 계상하고 있는 한국은 안보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둘째, 일본측은 민생안정을 위해 매년 1 억 달러의 경협을 해주고 있지만, 한국의 GNP 는 현재 600 억 달러, 1986년에는 900 억 달러(1981년 기준)의 규모이고, 이 정도(1 억달러)의 원조로는 한국의 경제운영 상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한국 측 국방을 전제로 한 요청은 반드시 필요하며, 민생안정을 배경으로 한 대차원, 대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면 이 요청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¹³⁴

이에 대한 일본 측 고모토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0 억 달러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일본측은 요청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있다. 8 월 하순 기반정비를 중심으로 한 약 열 개의 항목의 투자내용, 예를 들어 상하수도, 교통, 항망, 철도, 댐, 농업개방 항목에 대한 해설을 들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둘째, 일본의 경협 기본적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전후의 평화헌법 하에서 자위대는 방위적 노력만 취할 수 있다고 엄격히 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기수출 3 원칙이 있고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긴박한

¹³⁴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119.

정세에 직면하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군사력을 대신하는 협력은 할 수 없다. 둘째, 산업면에서 보아도 한국은 선진국 선진공업국에 속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훨씬 뒤떨어진다. 또한 중공업에 있어서도 일부 한국이 우수하다. 일본의 경제원조에는 기반정비를 중심으로 한다는 기본적 방침이 있으며 제 5 차 5 개년계획에 포함되는 기반정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일본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중기목표가 1 월에 나와 1981 년~85 년 사이에 ODA 를 214 억달러로 배증하기로 했다. 평화헌법 하에 직접 군사증강을 위해서 기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 일반예산의 26%를 국채로 충당하고 있는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어 214 억 달러이면 대성공이다. 타국과의 밸런스를 고려하면서 한국에 최대한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 지 내용검토가 필요하다.¹³⁵

이처럼 외상회담에서 양측이 밝힌 입장과 비교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백한 설명을 바탕으로 양국은 서로의 주장을 견지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양국의 인식차이가 더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합의에 이르기 위한 발전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날 양국 외상간 개별회담도 같이 진행되었다. 노장관은 소노다 외상과의 개별회담에서 60 억 달러의 안보경협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일본 측의 정치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¹³⁶ 특히 지금까지 경협 총액의 타결을 요망하는 한국측과 이를 단년도 베이스의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자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본측 입장 간에 교섭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¹³⁵ 위의 저서, pp.119-121.

¹³⁶ 『동아일보』, 1981년 9월 10일. 「양국 개회식 인사 차원높은 협력 필요 한국 신뢰 금안가게 노력 일본」.

한국측이 경협 금액에 대한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력히 언급하면서 안보경협의 정치적 타결을 촉구했다.

노장관은 “60 억 달러와 40 억 달러 사이에서 타결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총리 간에 협상하는 것이 어떠냐”고 언급하면서 이 자리에서 한국측은 금액 조정을 시작하고자 시도했으며, 구체적으로 5 년간에 40 억 달러를 새롭게 요청했다. 이를 소노다 외상이 거부하자 노 장관은 이어 “그렇다면 얼마라면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되물어, 이에 대해 같은 자리에 있던 일본의 기우치 아주국장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정의 금액을 언급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소노다 외상도 나도 자신의 자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노신영 장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의 숫자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이상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숫자를 말한다면 13 억 달러이다. 하지만 이 숫자는 대통령 이외 어떤 사람에게도 언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숫자에 언급한 사실은 이후 교섭에서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노 장관의 답변은 “40 억 달러 이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¹³⁷

이처럼 한국 측은 총액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원래 금액보다 20 억 달러 축소된 40 억 달러의 총액타결을 요청하였지만, 일본의 입장으로는 최대 13 억 달러까지가 한계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13 억 달러의 금액에 대한 발언은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자리에서의 분위기 조정을 위한

¹³⁷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p.125-128.

기우치아주국장의 개인적인 답변에 불과하였다. 양국은 진전을 보일 듯하다가도 결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제 11 차 한일정기각료회의는 핵심의제인 안보경협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최후 순간까지 난항을 거듭한 끝에 사실상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공동성명 채택도 이를 취소해 공동신문 발표만 낸 뒤 각료회의는 폐막되었다.¹³⁸ 이처럼 정기각료회담에서는 외상회담에서 서로가 주장했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것은 첫째, 한국의 요청은 안보와 경제를 연계시키는 정치 및 안보적 성격의 것이었지만 일본은 안보역할분담적 논리에 의한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둘째, 한국은 총액에 대한 정치적 선택결을 바랐지만, 일본은 일본의 예산제도가 단년제 프로젝트 적상방식임으로 총액 선택결이 아닌 실무자간 회담을 통해 지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각 지원액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고, 또한 일본의 어려운 재정상 60 억 달러의 거액을 한국에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회담과 비교해 제 11 차 정기각료회담에서는 한국의 목적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의 진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양국 입장을 명백히 관찰하는 것은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국의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기여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근거하여 양국 입장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살펴봐야 할 점은 일본의 대한 경협제도는 70 년대 후반부터 민간베이스의 경제협력이 위주였다는 점이다. 1975 년~76 년 사이에

¹³⁸ 『동아일보』, 1981년 9월 11일. 「안보경협 결렬」.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ODA 차관공여를 감축시키고 민간베이스의 경제협력으로 이전할 방침을 내세웠다. 이와 같은 일본의 ODA 감축 방침은 한국이 이미 졸업국 원칙(graduation principle)에 해당되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¹³⁹ 이에 따라 70년대 후반의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방식은 민간베이스를 주체로 진전되어왔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도 당연히 이 같은 방향 하에 일본의 대한 경협이 유지 및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일본의 대한 ODA 차관 공여 조건은 “졸업국 원칙”에 따라 공여금액이 제한적이었다. 일본정부가 ODA 공여조건에서 졸업국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들이다. 이 원칙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ODA 공여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졸업국 원칙은 두 측면에서 그 기준을 결정하는데, 첫째는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이며, 일본은 저발전국가에 대해서 전체 ODA 중 큰 비율로 배분하고, 발전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은 ODA 자금을 공여하는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칙을 유지하였으며, 1979년, 일본정부는 1인당 연간 GNP가 1,000달러 또는 그 이하인 국가들에 대해 전체 ODA 중 95%를 공여했는데, 당시 한국의 1인당 연간 GNP는 1,580달러였다.¹⁴⁰ 이는 졸업국으로 간주된 한국에게는 더 이상 거액의 공공차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크게 제한되는 것이며, 5차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베이스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시로서는

¹³⁹ Kim, H. 1986. “Policy - Making of 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1965--1983.” Michigan U. PhD dissertation.

¹⁴⁰ 위의 논문.; 같은 논문에서 OECF, Japan. “kaigai Keizai kyoryoku benran(Digest of oversea economic cooperation).” various issue.; MITI. “white paper on economic cooperation.” various issues.; EPB, ROK. “major statistics of korean economy.” various issue. 재인용.

정상이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안보’ 근거 없이 5차계획에 충당하기 위한 공공차관을 거액으로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었다.¹⁴¹

이러한 일본의 대한 경협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 요청의 특징을 살펴볼 때 5차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에 보다 현실적인 민간베이스라는 본래의 지원형태를 거부하고 공공차관 확보에 노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군사적 협력이 어려워 일본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자동적으로 5차계획을 정부차관으로 지원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5차계획의 관점을 동시에 주목한다면, 본래 경협형식이었던 민간베이스를 통한 지원을 원하지 않고 안보 명목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으며, 5차계획의 안보경협 연계경로를 동시에 관찰해야 한다.

교섭 초기단계부터 정기각료회의 시기까지의 한일교섭은 안보를 근거로 하여 총액 선타결을 강조해온 한국측과 구체적인 프로젝트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일본측 사이에 의견차이가 불거지고 있었지만 이후 1982년에 들어 2차에 걸쳐 이루어진 한일 실무자협약에서 한일 양국이 처음으로 타협적인 자세를 표시함에 따라 교섭에 진전을 보이게 된다.

제 3 절 82년 스키 내각 협상 시기 - 경협방식 교

¹⁴¹ 이와 같은 거액 공공차관 확보를 위한 ‘안보’ 명목의 중요성은 당시 일본의 아시아과장이었던 오구라 카즈오가 자신의 저서에서도 이미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오구라는 일본측 여러 외교자료를 통해 안보의 의미를 분석했다. 당시 중진국으로 인식된 한국에게는 일본정부의 대한경협 조건 상 거액 공공차관을 공여할 수 없었으며, 안보 명목이라는 것이 그러한 일본의 대한경협의 한계를 극복하여 거액차관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안보 명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 70. 오구라가 저서에서 분석한 ‘일본의 대한경협의 한계 변수’를 넘어, 본 논문에서는 당시 한국의 외환사정을 관찰하므로 ‘대외금융사정 변수’에 따라 차관확보자체가 어려워, 대일 안보경협이라는 것이 그러한 협력조건을 극복하여 양질의 차관을 확보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었음을 주장하는데 차이가 있다.

접과정

1. 제1차 한일 실무자협의

1981년 11월 30일 소노다 외상은 경질되고 후임에는 사쿠라우치 의원이 임명되었다. 12월경부터는 경험의 조기타결을 위하여 비공식 채널도 가동되었다. 한국측에서는 민정당의 권익현 의원이, 그리고 일본측에서는 이토추상사의 세지마 상담역이 각각 지명되어 비공식 접촉을 계속하였다.¹⁴² 세지마는 행정개혁사무 등을 통해 일본정부의 요로(要路)에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이토추상사 시기부터 한국의 삼성물산의 수뇌 이병철과 친분이 있었으며, 1980년 6월 토큐(東急)의 고토 노보루와 함께 방한하여, 전두환 대통령과 면담한 경험이 있었다. 이래 세지마는 본래 전두환이 군인 시절 친구이자 당시 삼성물산의 상무를 담당했던 군출신의 권익현과도 교류를 가지게 되면서 세지마-권익현 루트는 한일정상 간의 커뮤니케이션 비공식 루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사쿠라우치 외상은 1981년 12월, 세지마에 대해 “비공식 특사로서 방한하고, 전 대통령과 회담하여 정부간 교섭을 위한 사전 공작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세지마는 1982년 1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전두환과 면담을 가져 이에 따라 이후 교섭 순서의 대략적 흐름이 정해져 1월 중순 서울에서 한일 실무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¹⁴³

¹⁴²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p.297-299

¹⁴³ 小倉和夫, 2013. 『秘錄·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p.170-171.

한국 정부는 권익현과 세지마 간의 비공식 루트를 고위실무자 예비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협교섭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고, 일본측에 제시할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1982년 1월 9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김준성 부총리와 노신영 장관이 배석하였으며, 다음 사업내용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수도사업 4억 2천만달러, 하수도 사업 2억 7천만 달러, 도로사업 5억 7천만 달러, 다목적댐과 홍수대책 2억 2천만 달러, 교육시설확충 6억 달러, 의료시설확충 2억 달러, 공해방지시설 1억 2천만 달러, 부산지하철 2억 달러, 경인지구 LNG 공급만 3억 달러, 철도시설 현대화 2억 달러, 주택건설 4억달러, 그리고 상품차관¹⁴⁴ 25억 달러, 합계 60억달러였다. 청와대 회의에서는 또한 경협총액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액수가 되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실무자협의를 1~2회 개최한 후 3월에는 외상회담에서 경협문제를 일괄 타결하고 5월에는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등의 일정도 계획되었다.¹⁴⁵

제 1차 한일 실무자협의를 1982년 1월 14일, 15일 양일에 걸쳐 서울 한국외무부에서 개최되었다. ¹⁴⁶ 이 날 한국측에서 외무부의 공노명 제 1차관보 최동진 아주국장, 이기주 국제경제국장, 이재춘 동북아 1과장등

¹⁴⁴ 상품차관이란 외자준비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물자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도상국의 경제안정에 관한 계획의 지원을 행하는 비프로젝트형 차관이다. 国際協力銀行. 国際協力銀行(JBIC) が 実施 する 円借款 の 概要 と 実績.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hiryu/hakusyo/01_hakusho/ODA2001/html/siryou/sr30200.htm#:~:text=%E5%95%86%E5%93%81%E5%80%9F%E6%AC%BE%E2%80%A6%E2%80%A6%E5%A4%96%E8%B2%A8%E6%BA%96%E5%82%99%E4%B8%8D%E8%B6%B3,%E3%81%AE%E6%94%AF%E6%8F%B4%E3%82%92%E8%A1%8C%E3%81%86%E3%82%82%E3%81%AE%E3%80%82(접속일:2020.12.9)

¹⁴⁵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299.

¹⁴⁶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173.

4 명이 그리고 일본측에서 기우찌 아시아 국장, 나까무라 경제협력국참사관, 오구라 북동아 과장, 무라오까 주한일본공사, 야나이 주한일대사관참사관 등 5 명이 각각 참석했다.¹⁴⁷

양국은 이 자리에서 한결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다. 일본은 한국이 주장하던 ‘총액타결’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반면 한국은 더 이상 ‘안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¹⁴⁸ 지난 1981년 11월에도 노신영 장관은 코리아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대한경제협력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차관은 일본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의 군사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5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데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었다.¹⁴⁹ 한국측은 외자 465억 달러에 포함되는 제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의 11개 각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러한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비공식적으로 일본측에 전달된 바 있었으나, 이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대일 차관요청의 근거로서 프로젝트 항목이 설명된 것이다.¹⁵⁰ 이에 따라 일본측의 종래 주장, 즉 한국의 대일 경제협 요청은 어디까지나 제 5차 5개년계획에 기반한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한 요청이고, 방위협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단 인정된 형태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측은 일본에 대해 상품차관을 요청하여, 그 비용을 가지고 내자분의 수당을 한다는 의도를 밝혀 여전히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의 방침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큰 차이였던 것은 다년도에

¹⁴⁷ 『매일경제』. 1982년 1월 15일. 「외상회담 조기개최」.

¹⁴⁸ 이장규. 1991. 『경제는 당신이 大統領이야 : 全斗煥 시대의 經濟秘史』. 서울: 중앙일보사. p.278.

¹⁴⁹ 『매일경제』. 1981년 11월 2일. 「노외무 한일정상회담 조기개최 희망」.

¹⁵⁰ 『日本經濟新聞』. 1981년 1월 16일. 「日韓実務者協議、借款問題で韓国が1項目提示－經濟ベース認める」.

다른 일본의 경제협력의 ‘총액’에 대한 제시 문제였다. 일본 측으로서는 5 개년계획 중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이 정해지면 많은 프로젝트는 다년도에 따라 실시되는 이상(형식적으로는 매년 마다 협력의 금액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년도에 따른 협력 총액은 스스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한편 한국측은 전체 액수에 대한 제시는 말하자면 정치적 합의를 위한 것이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그러한 정치적 합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여전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교섭은 일단의 진전을 보인 것이며, 외상회담 개최를 위해 제 2 회 실무자회의를 가까운 날에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¹⁵¹

2. 제2차 한일 실무자협의

제 2 차 한일 실무자협의를는 2 월 18 일, 19 일 양일간에 걸쳐 일본 외무성에서 열려 한국 측이 지난 1 차회담 때 제시한 11 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특히 외무성과 함께 일본의 대외 경제협력주관 부처인 대장성 통상성 경제기획청 관계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5 차계획 내용과 한국 측이 이미 요청한 11 개 프로젝트 및 상품차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¹⁵² 이 날 한국측에서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실무자도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대장성, 통상성, 경제기획청의 실무자들이 배석하였다.¹⁵³

¹⁵¹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p.173-174.

¹⁵² 『매일경제』. 1982년 2월 19일. 「2차회담 이해높여 한일경제협력 총규모 외교경로로 절충」.

¹⁵³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p.299-300.

일본 측은 이 회담을 통해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몇 개의 곤란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한다. 먼저 한국측이 1 차 회담을 통해 제시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첫째로, 한국측의 요청 안건 중에는 부산지하철 건설사업이나 경인지역 LNG 공급망 건설사업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포함되어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정부자금인 ODA 를 공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로는 한국측 프로젝트에는 주택건설이나 택지개발과 같은 거의 자국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실행 가능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원조 대상이 되기 어려운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일정의 프로젝트의 상업성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LNG 공급망 정비는 공업용이 아닌 일반가정용이기 때문에 채산하기가 어려워 상업베이스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외 주택건설 등 일본측이 외자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명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국의 주택건설, 특히 공공주택의 공급은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이 있는 프로젝트라는 설명이었다.¹⁵⁴

2 차에 걸쳐 이루어진 한일 간 실무자협의를 통해 한국은 총액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여전히 강조하였지만, 말하자면 양국은 공식적인 프로젝트 논의와 경제협력 방식 논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3. 최동진-무라오카 면담과 일본의 경험방식 제안

2 차의 실무자협약에 따라 한국의 대일경협 요청 60 억 달러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또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¹⁵⁴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p.175-177.

정리되면서 일본정부 당국은 다가오는 외상회담에 대비해 제안 작성에 착수했다. 그 제안은 첫째로 한국측의 대일 요청 프로젝트를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협력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즉 LNG 공급망 정비나 철도관련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수출입은행의 용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한 주택이나 도로건설은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일본의 시중은행과의 협조용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 외 사업은 소위 ODA 엔차관의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로, 엔차관의 전체 액수의 대략 목표로서 3 가지 안을 책정하기로 되었다. 이는 제 1 안으로서 과거 5 년간(1976~80 년)의 대한 경제협력의 위탁총액 1 천 65 억엔을 증액하여 향후 6 년에 걸쳐 공여한다(하지만 매년 공여액은 1981 년도의 225 억을 베이스로 점증한다)는 것. 제 2 안으로서는 당면의 1981 년도의 공여액을 전년도의 두 배(380 억엔)로 하여 다가올 1982 년도부터 86 년도의 5 개년간 공여액의 총액을 지금까지의(제 4 차) 5 개년계획(1977~81 년) 중의 공여총액의 두 배인 2 천 420 억엔으로 한다(그렇게 되면 1981 년~86 년의 6 년간의 공여총액은 2 천 800 억엔이 된다). 제 3 안으로서는 1981 년도의 공여액을 전년도의 두 배인 380 억엔으로 하여 그것에 적당한 신장률(예를 들어 ODA 배증계획에 따르면 매년 엔차관 전체는 2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대한 엔차관의 신장률을 15%정도로 한다)을 전체로 하여 6 년간의 공여액이 약 15 억 달러(3 천 330 억엔 전후)가 되도록 계상한다. 이 3 가지 안은 전부 전체의 공여액이 10 억 달러에서 15 억 달러가 될 것을 상정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 단계에서 일본측은 향후 6 년간에 최대한 15 억 달러 정도까지의 대한 엔차관 공여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일본정부는 하나의 ‘포괄적 제안’(엔차관 15 억달러, 수출입은행 22 억달러, 전체로서 약 40 억달러)를 내밀히 계획한 것이었다.¹⁵⁵

이러한 방침을 일본정부는 3 월 19 일 주한일본대사관 간부를 통해 한국 외무부 아시아국 간부에게 전달했다.¹⁵⁶ 무라오까 구니오 주한일본 공사는 19 일 외무부로 최동진 아주국장을 방문하여, 한국이 제시한 60 억 달러의 11 개 프로젝트 및 상품차관에 대한 중간 검토 결과를 한국측에 제시했다. 무라오까 공사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상하수도정비, 의료사업, 댐 건설 등 6 개 프로젝트는 정부개발협력자금(ODA)으로, 철도현대화, 부산지하철, 저장시설, 공해방지 시설 등 3 개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차관으로, 주택건설, 도로건설 등 2 개 프로젝트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과 협조융자하여, 상품차관은 저개발국가에만 공여하는 것인만큼 한국에 제공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11 개 프로젝트와 상품차관이 모두 5 차 5 개년계획 중 사회개발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60 억 달러 전액을 정부 개발협력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부산지하철 건설이나 철도현대화 등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워 ODA 자금으로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¹⁵⁷

4. 경협규모를 둘러싼 양국갈등

이러한 경위를 거쳐 일본은 경협규모의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한국 또한 일본안에 대한 신제안을 제시하였다.

¹⁵⁵ 위의 저서. pp.186-187.

¹⁵⁶ 위의 저서. p.188.

¹⁵⁷ 『경향신문』. 1982년 3월 20일. 「일 상품차관 거절」.

먼저 일본 정부는 한일외상회담에서의 실질합의를 위한 사전공작으로서 구체적인 일본안 작성에 나섰다. 그 제안은 A 안과 B 안의 두 가지 구성이었으며, 우선 A 안부터 교섭하고 한국측이 현저히 난색을 표시할 경우에는 B 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최종안인 것을 단언하겠다는 것이었다.¹⁵⁸

A 안은 전체의 경제협력총액을 6 년간 40 억달러로 하고, 그 중 엔차관을 13 억달러, 수출입은행융자 22 억달러, 민간자금 5 억달러였고, B 안은 전체의 경제협력총액을 6 년간 40 억달러로 하고 그 중 엔차관 15 억달러, 수출입은행융자 25 억달러로 작성했다. 또한 두 가지 제안 모두 수출입은행 융자 금리는 기본적으로 7.75%로 하였다. 사전공작이 이루어진 후 차관급 특사로서 외무심의관이었던 야나기야 켄스케가 4 월 29 일부터 5 월 1 일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노신영 장관, 김준성 경제기획원장관, 이범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회담해 일본의 ‘최종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¹⁵⁹ 일본이 이처럼 작성한 최종안은 한국과의 교섭단계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월 29 일부터 3 일 간 방한한 야나기야 심의관은 노신영장관과 세 차례 면담하였다. 4 월 29 일 제 1 차 회담에서 야나기야는 향후 5 년 간에 총 40 억 달러를 공공차관 형식으로 제공하며 차관의 평균금리는 6.1%이고, 자금의 구성은 ODA 13 억 달러, 수출입은행자금 22 억 달러, 민간자금 5 억 달러라고 하였다. 이어 야나기야는 일본의 경험은 단년도 방식이나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전체규모를 비공식으로 알린다는 것도 첨언하였다. 그러나 한국 측 거절로 야나기야는 4 월 30 일 제 2 차 회담에서 ODA 15 억 달러, 수출입은행자금 25 억 달러, 차관기간 1 년 연장이라는

¹⁵⁸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215.

¹⁵⁹ 위의 저서. pp.215-217.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5 월 1 일 제 3 차 회담에서 한국측은 ODA 는 30 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고 경험의 평균금리와 공여조건, 그리고 상환기간 등은 ODA 에 준할 것과 상품차관은 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야나기야 심의관은 난색을 표명하며 도쿄로 돌아갔고, 5 월 20 일 일본측은 야나기야 안이 일본정부의 최종안임을 통고하였다. 이리하여 한일 경험 교섭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¹⁶⁰

6 월 2 일에는 한국내에서 외무부장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일시 중단되었던 한일경험 교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하여, 안기부장에 노신영 외무부장관을, 외무부장관에는 이범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각각 임명했다.¹⁶¹ 이에 따라 한국은 4 월말 일본측이 제시한 경험안에 대해 6 월 22 일 양국 면담 자리에서 한국측의 신제안을 제시했다. 이범석 외무부장관은 이날 마에다 토시카즈 주한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지난 4 월말 경험사절로 방한한 야나기야 일본 외무심의관이 제시했던 평균금리 6%선의 40 억달러(정부차관 15 억달러, 수출입은행차관 등 혼합융자 25 억달러) 경험안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안을 통보했다.¹⁶²

한국측의 '신제안'은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전체 협력액을 40 억달러로 하면서도 엔차관의 증액과 금리조건의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야나기야 방한 시에 일본이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이를 최종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교섭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40 억달러 중 그 반 이상, 즉 약 23 억 달러를 엔차관으로

¹⁶⁰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302.

¹⁶¹ 『경향신문』. 1982년 6월 2일. 「안전기획부장에 노신영씨」.

¹⁶² 『동아일보』. 1982년 6월 22일. 「교섭재개합의 경험 대응안 일에 통보」.

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품차관 또는 저리로 유연하게 사용가능한 차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범석은 일본을 방문하여 사쿠라우치 외상과의 면담을 통해 한일양국은 경제협력 전체의 규모를 40 억달러로 하고, 동시에 상품차관 대신 한국측 프로젝트의 내자(외자에 의한 조달이 아닌 한국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한 자금)분으로서 엔차관이나 수은용자를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자레벨에서 토의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엔차관도 보통 30%까지 국내 경비충당분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 그리고 수은용자의 일부는 각각 프로젝트에 대한 용자가 아닌 한국측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용자하기 위한 자금을 일본이 뱅크론 형태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여러가지를 모색한 ‘일본안’ 작성에 나섰다. 그 결과, 내자조달의 편의를 담은 일본안이 7 월 23 일, 재한일본대사관 고토 공사를 통해 한국외무부 최동진 아시아국장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한국측은 일본의 엔차관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40 억달러 중 15 억 달러)에 의해 결국 전체의 금리나 내자분의 조달 등에 대해 제약이 있어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¹⁶³

이처럼 한일교섭은 총액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교섭이 일진일퇴 거듭하였으나, 그해 여름에 일어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가 양국 간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수개월간 휴면상태로 들어갔다.¹⁶⁴

1982 년에 들어가 계속된 한일교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요청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¹⁶³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p.228-229, 240-241.

¹⁶⁴ 이재춘. 2011.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 : 온 몸으로 부딪힌 격동의 세월 36 년』. 서울: 기파랑. P.156.

첫째, 한국이 81년 교섭시기까지 견지해온 안보 명목이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82년 초 2차에 걸쳐 이루어진 한일 간 실무자협의를 통해 일본이 한국이 주장해온 ‘총액 타결’을 인정한 가운데 한국은 대일 경협 명목이었던 ‘안보’를 더 이상 경협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을 것을 밝혔다. 또한 이전에는 노신영 장관이 대일경협을 통해 충당되는 비용은 안보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제사회발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었다. 이에 따라 한일 경협은 안보 명분이 아닌 순수한 경제목적으로 전환되었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 및 대표적 저서가 설명해온 바와 같이 안보명목은 거액 공공차관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분이다. 양국이 교섭초기에 주장해온 서로 다른 입장이 타협점을 공유하면서 공식적인 프로젝트논의와 총액규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게 된 시기가 되었다.

둘째, 한국이 제시한 공공차관 경협내용을 보면, 차관 사용방도의 유연성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국은 제 2차 실무자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항목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바 있었으나, 프로젝트 항목 제시의 근거는 60억 달러 총액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위한 것이라는 반복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특히 한국이 보고한 60억 달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5억 달러의 프로젝트 비용과 25억달러의 상품차관이었으며, 60억 달러의 전체 비용은 순수한 프로젝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은 그러한 상품차관을 국내자본으로서 활용할 것을 언급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최저 소득수준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만 상품차관을 공여한다는 방침이었다. 일본정부가 상품차관 공여를 제한하는 것은 공여 받은 차관을 한국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본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혜국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국내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수입품을 판매할 때, 그것을 지역

자본으로 만들어 수혜국의 예산에 넣을 수 있다. 자본을 예산으로 확보한 수혜국은 그 자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ODA 사용 금지사항과는 달리 수혜국은 그러한 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다.¹⁶⁵ 경험규모를 40 억달러로 결정하는 일본의 제안이 있는 후에도 40 억 달러 중 23 억달러의 엔차관을 요청하는 동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사용가능한 저리차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¹⁶⁶ 즉 한국이 실제 요청하는 금액내용이 애초부터 프로젝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전략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총액타결에 대한 교섭단계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안보명목 없이 거액차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81 년 교섭초기에 프로젝트 논의를 했을 경우, 한국은 프로젝트 비용인 35 억 달러만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총액타결에 들어감에 따라 프로젝트 비용을 넘은 더 포괄적 비용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초기 단계에서 60 억 달러를 두고 교섭이 이루어져왔던 경험규모는 일본의 제안으로 인해 40 억달러까지 축소되어갔다는 점이다. 안보를 근거로 하여 양질의 거액차관을 확보하고자 했던 한국의 목적은 안보 명목이 사라짐에 따라 점점 더 일본이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 그 목적 달성에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81 년 교섭초기 한국은 안보를 근거로 5 차계획에 소요되는 465 억달러의 일부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그것은 군사적 협력이 어려운 일본의 국내사정을 고려한 나머지 경제형태의 비용을 요청한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¹⁶⁵ Kim, H. "1986. Policy - Making of 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1965--1983." Michigan U. PhD dissertation.

¹⁶⁶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p.228-229.

한국은 프로젝트논의보다 우선적인 총액에 대한 정치적 선택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안보역할분담적 논리에 의한 협력이 어렵고 총액타결보다 구체적인 지원프로젝트 내용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양국간 경험교섭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나 일본은 70년대 후반부터 일반적으로 진행되던 민간베이스의 협력을 제시하였고, 공공차관으로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공여대상 졸업국으로 간주된 한국에 대한 거액 공공차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82년에 들어와서는 한국이 거액차관을 요청하는 전략을 보다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이 요청하는 거액차관의 내용은 5차계획 프로젝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일경협 요청을 통해 한국은 일본의 관여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적 차관을 요청하였다. 한국이 교섭초기에 프로젝트논의를 거부한 이유는 실제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60억달러라는 요청금액을, 프로젝트 내용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요청하는 경제협력의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 협력자금을 안보비용으로 쓰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후 안보근거가 상실되고 순수한 경제협력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실제 프로젝트비용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무엇이며, 그러한 자금을 실제 어디에 도입하고자 계획하였을까? 주목할 점은 안보와 경제의 연계성을 둘러싼 경제적 관점이다. 한국이 교섭초기에 일본에게 요청한 경험내용은 다시 말해 안보를 근거로 하면서도 465억 달러의 5차계획 외자소요에 대한 지원자금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경험내용이 5차계획에 대한 지원자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진행되었던 민간베이스를 통한 지원을 원하지 않고 안보 명목을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한국이 설명하는 안보협력적 관점에서 본다면,

군사적 협력이 어려운 일본 사정을 고려한 나머지 하나의 다른 방법으로 5 차계획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서 민간베이스가 아닌 정부베이스의 공공차관을 자동적으로 요청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5 차계획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본래 민간베이스로 요청이 되어야 할 것이 정부베이스로 요청이 된 것이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한국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안보와 경제를 연계시켰는가하는 문제이다. 표면적으로 질문을 제기한다면, “안보경협에 왜 5 차계획을 연계시켰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답은 한국측이 설명하는 대로 “일본의 헌법구조를 고려한 결과로서의 5 차계획과의 연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경제적 변수에 주목한다면, “5 차계획을 왜 본래형태의 민간베이스가 아닌 대일 안보경협을 통해서 요청하게 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 즉 한국이 안보경협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일본에게 5 차계획의 경제형태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5 차계획의 연계 배경을 동시에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은 한국이 제시한 465 억 달러의 5 차계획 외자소요의 의미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이 요청한 자금은 프로젝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즉 교섭과정에서 한국이 요청한 거액차관의 도입목적은 안보적 비용도 프로젝트비용도 아닌 그 외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필요했던 465 억 달러의 5 차계획 외자소요의 실제 의미와 그러한 외자의 도입상황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안보’에 5 차계획을 연계시킨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이 언급한 465 억 달러의 외자소요의 의미는 무엇이며, 프로젝트 이외의 자금이란 무엇인가? 즉 한국은 공공차관을 어떤 목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어떻게 충당할 계획을 세웠는가? 다시 말해 한국이 안보경협을 통해서 실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안보경협에서 확보하고자 했던 이러한 거액차관의 활용계획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달성을 왜 안보를 명목으로 하였는지, 즉 5 차계획을 대일안보경협에 연계시킨 요인이 무엇인지를 논의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전략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 4 절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연계경로와 안보경협의 경제적 목적에 대한 논의

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외자소요의 의미

여기서 다시 한 번 80년대 초기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개요를 파악하고 이에 소요되는 외자의 의미를 살펴봄으로 한국이 한일 안보경협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 거액차관의 도입목적을 논의한다.

한국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이룩해 왔으나 1979년 이후 2차 석유파동, 사회적 불안정 등에 따라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80년에는 미증유의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의 어려움을 겪었다. 1980년 9월 이후에는 원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그 여파는 아직도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은 2차 석유파동, 사회적 불안정, 추곡의 작황불진과 같은

경제운용외적인 원인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당시 정부는 한국 경제, 사회조건이 악화하여 개발초기에 성공을 가져왔던 경제운용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몇 가지 부작용이 파생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인플레이의 누적이다. 단기간에 경제건설을 위하여 취했던 양적 확장정책은 경제규모가 적고 단순했던 개발초기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통화증발을 초래하여 인플레이가 유발되었고 이는 국내 저축 능력을 잠식하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국제수지적자 폭이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기술발전을 지연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발전을 어렵게 하였다. 둘째로 한국 경제, 사회에 비능률 요인이 잠재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주도에 의한 사업추진과 수입억제 등 보호정책은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위하여 불가결했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켰으며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저해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의 창의적인 노력을 해쳐 전반적인 사회능률을 떨어뜨렸으며 특정분야에 투자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로 소득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이 확대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절대빈곤 문제는 크게 해소되었지만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대도시 집중이 심화되어 상대적인 불만감이 높아졌고 국민의 기본수요 및 생활편익 시설의 부족으로 국민 각각의 평균발전 요구와 새로운 복지 욕구가 확대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은 60~70 년대의 경제도약에 이어 이러한 전환기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80 년대에는 선진사회를 향한 제 2 의 도약을 모색하여야 했다. 그러나 80 년대 제 2 의 도약은 60~70 년대와 같은 양적 도약에서 한걸음 나아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질적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⁶⁷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던 신병현은 5차계획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은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삼고 의욕적인 여러가지 정책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 10% 수준에서 물가를 안정시켜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개방화, 자율화, 분권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7~8%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였다. 나아가 경제발전에 맞추어 사회개발의 추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큰 비중을 둬으로써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여 경제발전과정에 진흥기반을 확대하고 과실이 보다 균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획의 명칭도 과거와 달리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꿨다.¹⁶⁸

이어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계획안에서는 5 차계획의 목표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그 목표는 첫째, 경제안정기반을 정착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쟁력 강화와 국제수지 개선을 이룰 것, 둘째,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것, 셋째, 소득계층간, 지역간 균형방진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었다.¹⁶⁹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은 5 차계획의 주요과제로서 인플레이 경제의 탈피, 중화학 공업의 경쟁력 확보, 농수산업 구조의 개선, 에너지 제약의 극복, 금융제도의 개선, 정부기능의 재정립과 재정운용의

¹⁶⁷ 대한민국 정부. 198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82~1986」. pp.10-12.

¹⁶⁸ 위의 자료. p.5.

¹⁶⁹ 위의 자료. p.14.

합리화, 경쟁체제의 확립과 개방정책의 추진, 교육 및 인력개발과 과학 기술의 진흥,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토지자원 이용의 합리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 사회재발의 충족을 계획하였다.¹⁷⁰

이처럼 거대한 국가적 계획목표의 달성은 계획된 재원이 충분하게 조달될 때 가능하다. 어느 나라이건 경제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국가의 재정수요는 누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¹⁷¹ 특히 한국은 거의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이를 가공하여 세계시장에 팔고, 이에 필요한 자본의 부족분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외자 의존적, 대외지향 공업화전략을 일찍부터 추구해왔다.¹⁷² 그만큼 한국에게는 외자의 조달 여부가 경제정책의 성공적 진행을 좌우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 1981년 발표된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지침을 통해 동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465억 달러의 외자가 소요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동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앞서 제시한 대로, 한일 안보경협 교섭과정에서도 한국은 외자소요액이 465억 달러가 소요됨을 언급하면서 일본에게 이러한 외자소요 충당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바 있으나, 실제 한국이 요청하는 경협내용은 개발프로젝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언급한 465억달러의 외자소요 목적은 무엇이며, 한국이 요망한 거액 공공차관의 도입계획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

한국정부는 1981년 발표한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 외자소요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¹⁷⁰ 경제기획원, 1980.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작성 지침(안) 요약」. P.24.

¹⁷¹ 『동아일보』. 1981년 8월 25일. 「「안정목지」의 기대 5년 5차경제계획 부문별 점검 <1> 재정과 금융」.

¹⁷²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70.

계획 기간 중 경제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7~8%의 성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율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국내저축동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상당한 수준의 해외저축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외채증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외신용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⁷³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한 해외저축의 활용으로 계획기간 중 경상수지적자는 208 억불에 달할 것이다. 이외에도 연불수출, 외채원금상환, 외환보유액 증가를 고려하면 계획기간 중 총 외자소요는 465 억불에 이를 것이다. 늘어나는 외자소요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경제운용으로 대외신용도를 제고시키고 국제금융시장의 정보수집과 대외교섭능력의 재양에 노력하는 한편 외자도입방식을 다양화하여 외채를 건실하게 관리할 것이다. 조건이 나쁜 단기차입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으로부터 장기저리의 공공성차관을 적극 도입함과 아울러 민간차입의 확대와 외화채권시장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계획기간 중 차관, 뱅크론으로 333 억불을 도입하고 외화채권으로 17 억불, 단기차입 등 기타재원으로 115 억불을 도입할 것이다. (도합 465 억 불) 도입된 외자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외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한편 중장기원리금의 경상수입에 대한 비율인 원리금상환부담율은 1980 년의 13.2%에서 1986 년에는 11.1%로 낮아질 것이다.¹⁷⁴

〈표 1.1〉. 외자소요와 조달

(경상가격: 백만불)

	1980	1986	1982~1986	
			금액	구성비

¹⁷³ 대한민국 정부. 1981.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1982~1986」. P.36.

¹⁷⁴ 대한민국 정부. 1981.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1982~1986」. pp.44-45. 하선 및 괄호내용은 필자가 작성했다.

외자소요	경 상 적 자	5,321	3,600	20,800	44.7
	원 금 상 환	1,568	4,150	15,900	34.2
	연 불 수 출 (순)	243	1,750	5,810	12.5
	외 환 보 유 액 증	863	1,200	4,000	8.6
합 계		7,995	10,700	46,510*	100.0
외자조달	차 관	3,432	7,800	33,315*	71.6
	외 화 채 권	46	500	1,670	3.7
	기 타	4,517	2,400	11,515	24.7
원리금상환부담율(%)		13.2	11.1	-	-

자료: 대한민국 정부, 1981.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1982~1986」. P.45.

주: 차관은 뱅크론 포함.

위의 인용내용 및 <표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계획했던 5 차계획에 충당하기 위한 465 억 달러의 외자라는 것은 208 억 달러의 경상수지적자 보전액, 159 억 달러의 외채원리금상환액, 58.1 억 달러의 연불수출에 드는 비용, 그리고 40 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총액을 상정해서 계상한 금액으로서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다. 차관규모는 뱅크론을 포함하여 약 333 억 달러가 계획되었다. 특히나 정부는 늘어나는 외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양질의 차관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후에는 5 차계획 기간 중의 도입할 공공차관의 규모를 46 건 사업 79 억 5 천 5 백만달러로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¹⁷⁵

¹⁷⁵ 『동아일보』. 1982년 7월 26일. 「5차계획 공공차관 79억달러로」.

정부는 외채원리금 상황이 국내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어온 점을 감안하고 당초 5 차계획 기간 중의 경상거래적자폭 208 억달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품목에 대한 수입억제를 위해 관세율을 높이는 등 국제수지방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외채원리부담은 81 년에 35 억 8 천 7 백만 달러에서 82 년에는 원금 21 억달러, 이자 20 억 달러 등 모두 41 억 달러로 14.3%가 늘어날 전망으로 465 억 달러 중 208 억 달러는 경상수지적자 보전을 위해, 159 억 달러는 원금상환에 소요되는 것으로 이자부담액만도 100 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외채부담의 증대는 실질적으로 국내경제에 막중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거래적자폭을 축소키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했다.¹⁷⁶

1980 년 한국은 무역수지에서 46 억 6 천 2 백만 달러, 무역외수지에서 12 억 9 천 6 백만 달러 적자로 경상수지는 55 억 2 천 5 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원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국제원자재 값 등에 따른 것이다.¹⁷⁷ 한국은 그 동안 경상수지는 1977 년에 균형을 잠시 이루었을 뿐 그 이후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78 년에 11 억 달러, 79 년에 42 억 달러, 80 년에 57 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고 80 년 말에는 55 억 달러가 추가되며 이와 같은 경상적자의 누적으로 80 년말 외채 잔액은 272 억 달러로 늘어났다. 경제기획원은 1981 년 4 월 21 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무역진흥원례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국제수지동향과 전망」이라는 특별보고를 통해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세계경기, 원유·양곡 등 대규모의 경직적인 수입수요 그리고 국내경기의 증대 가능성 등의 요인이 있어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국고수지가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나아지지

¹⁷⁶ 『매일경제』. 1982년 1월 21일. 「불요불급품목 수입최대억제」.

¹⁷⁷ 『매일경제』. 1981년 1월 13일. 「작년 국제원자재가 올라 경상수지 55억달러 적자」.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80 년분 경상적자는 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거 몇 년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대외채무가 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¹⁷⁸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은 외국차관이나 정부 보유의 외환을 도입하는 일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가 발표한 5 차계획의 외자소요액 465 억 달러 중 208 억 달러를 경상적자 보전액으로 계획한 것이었다.¹⁷⁹

외채원리금에 대해서는 70 년대말 높은 외자의존도에 따라 외자도입규모가 확대되어 이자지급도가 점차 늘어났다.¹⁸⁰ 80 년대 초 한국의 외환사정은 해외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많이 쌓여 외채망국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심각했다.¹⁸¹ 78 년 이전의 외자가 성장투자나 시설투자 확대용이었다면 79 년 이후의 것은 외환적자를 우선 메우는 외채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¹⁸² 즉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채상환을 위한 외자 도입이 불가피했으며, 말하자면 빚을 갚기 위하여 빚을 얻어야 하는 형편이었던 것이다.¹⁸³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둔화되고 실업이 느는 어려움 속에서도 79~81 년간에 58~78 년간의 20 년간의 외채와 같은 액수의 엄청난 외채를 쓰는 모험을 무릅쓰고 있었다.¹⁸⁴ 특히 국제고금리의 여파로 국제금융기구들이 잇달아 대외차관 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한국의 주요

¹⁷⁸ 『매일경제』. 1981년 4월 22일. 「기획원 보고서 경상수지적자 개선 어려워」.

¹⁷⁹ 김철환. 경상수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iebeljd&logNo=6012754756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검색일: 2020. 9. 7).

¹⁸⁰ 『매일경제』. 1981년 5월 12일. 「외채이자 부담 크게 늘어나 과실송금도 ... 국제수지 큰 압박」.

¹⁸¹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26.

¹⁸² 『동아일보』. 1980년 6월 27일. 「한국경제와 국제신용」.

¹⁸³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71.

¹⁸⁴ 『동아일보』. 1980년 6월 27일. 「한국경제와 국제신용」.

차관도입선인 미수출입은행이 차관금리를 대폭 올림에 따라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¹⁸⁵ 한국은 새로운 경제 여건에 따라 수입과 대외이자 지불 부담이 급격히 느는 반면 수출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국제수지 적자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문제는 급증하는 외채였고 당시의 세계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 부담을 감당해낼 만큼 한국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했다.¹⁸⁶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채문제 해결이라고 지적하고, 5 차계획 기간 중 국제수지방어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¹⁸⁷ 외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적자를 줄여야 하고 국제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줄이면 된다.¹⁸⁸ 하지만, 당시 한국은 국제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수출이 증가될 보장이 없었으며, 다시 말해 투자재원을 얻기 전에 먼저 외채상환을 위한 재원확보가 우선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5 차계획의 외자소요 계획 내용에서도 외채원금상환에 대한 자금을 159억 달러의 높은 금액으로 계획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5 차계획에서 책정한 이와 같은 거액의 외자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었는가? 대일 교섭과정에서 한국이 5 차계획에 소요되는 공공차관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이 프로젝트만을 위한 것이 아이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그러한 요인이 이와 같은 5 차계획의 외자소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¹⁸⁵ 『매일경제』. 1981년 8월 18일. 「국제금융기구 이어 미수는 금리올려 외채이자 부담 가중」.

¹⁸⁶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70-71.

¹⁸⁷ 『매일경제』. 1981년 1월 8일. 「외채비율 높아져」.

¹⁸⁸ 『동아일보』. 1982년 2월 3일. 「성장은 해야되고 ... 재자는 부족하고 「외채축소」 고민」.

한국의 대일안보경협 의미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그러한 5차계획 외자소요를 대일 안보경협을 통해서 확보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5 차계획을 의도적으로 대일 안보경협과 연계시키고자 한 것인지, 즉 군사적 협력이 어려운 일본의 헌법구조를 고려한 결과 그 대신에 필요했던 5 차계획 외자를 요청하게 된 것이 아니라, 5 차계획에서 책정된 외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보명목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외자도입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

2. 양질 차관의 중요성과 80년대 초 한국의 외자도입 상황

외채위기에 직면한 한국은 외자도입 방식으로서 양질의 장기저리 차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80년대 초 조건이 좋은 공공차관이나 중장기차관의 비중이 줄어들고 악성고리의 단기상업차관 비중이 커지고 있었다. 중장기차관 대 단기차관의 비중은 72년에 83대 17이었으나 75년에 75대 25, 그리고 81년에는 70대 30으로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한 대로 빚을 갚기 위해 다른 빚을 새로 얻는 경우도 상당했다. 장기차관 도입액 가운데 빚을 갚는데 도입된 돈의 비율은 79년에 41.7%, 80년에 36.9%, 81년에는 42.2%로 추정되었다. 쉽게 말해 100 원을 빌려와 40 원을 다른 빚을 갚는데 쓰는 상황이었다.¹⁸⁹ 특히 그 동안 경제개발수행에 소요된 외자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원리금상환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의 외자도입은 장기저리의 재원으로의 차입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한층

¹⁸⁹ 『동아일보』. 1982년 2월 3일. 「성장은 해야되고...내자는 부족하고 「외채 축소」 고민」.

강해졌다. 정부에 의하면 81년 초 외채잔액은 2백 37억달러로 5차계획이 끝나는 86년의 대외채무잔액은 6백 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외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상환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입단체 및 차입방식을 다양화시켜 위험을 분산시키고 국제금융전문가 양상을 통해 차입비용을 절감시키기로 했다.¹⁹⁰ 또한 국제수지 개선책의 일환으로는 수출촉진책의 강구와 함께 불요불급한 수입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며 외자도입에 있어서도 장기저리 차관 확보에 주력하며 단기차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제고금리 추세에 따른 외채기업들의 원리금상환부담이 한층 가중되어 온 경험에 비추어 외자의 선별도입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차관도입조건이 불리한 자금은 도입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¹⁹¹ 이처럼 당시 한국은 원리금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장기저리의 조건이 좋은 차입방식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외자의 조달여부는 한국경제가 난국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¹⁹² 5차계획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출신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자원확보 또한 안정적으로 이뤄야 함은 물론이었다.¹⁹³

첫 번째로 관찰해야 할 점은 한국정부가 계획한 약 79억 달러의 공공차관 도입 상황이다. 정부는 1982년~86년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의 공공차관 도입규모를 46건 79억 5천 5백만 달러로 확정하고 이들 차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과 연결하기로 했다.¹⁹⁴

¹⁹⁰ 『매일경제』. 1981년 6월 3일. 「정부, 공공차관 도입 확대 165억불 상당」.

¹⁹¹ 『매일경제』. 1982년 1월 21일. 「불요불급품목 수입최대억제」.

¹⁹² 『경향신문』. 1980년 6월 28일. 「한국경제의 긍정적 평가」.

¹⁹³ 『매일경제』. 1982년 1월 12일. 「실속있는 경제외교」.

¹⁹⁴ 『동아일보』. 1982년 7월 26일. 「5차계획 공공차관 79억달러로」.

당시 한국정부가 5 차계획 동안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도입키로 한 공공차관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면, 50 억 달러이상으로 측정된다.¹⁹⁵ 이는 약 79 억달러의 공공차관 도입 계획 중 약 29 억 달러만이 부족한 계산이 된다. 즉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요청한 60 억 달러의 공공차관은 본래 한국이 계획했던 공공차관 개발프로젝트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보다 더 많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이 일본에게 요청한 경험목적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분이다.

정리하자면 한국이 계획했던 79 억 달러의 공공차관은 이미 대부분이 충당된 상황이었으며, 한국이 일본에게 요청한 60 억 달러의 공공차관이라는 것은 사회경제개발 프로젝트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과 더불어 다른 용도로 소요되는 비용을 목적으로 했거나, 혹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공공차관으로 협력이 어려운 수익성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한 충당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나아가 프로젝트에 충당하기 위함이 아닌 또다른 용도를 목적으로 요청한 금액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개발 사업공공차관을 대부분 차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5 차계획의 외자소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공차관의 충당 내역뿐만이 아닌 보다 전반적인 외자도입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333 억 달러의 차관 계획 중 겨우 79 억 달러만이 공공차관 도입계획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이외의 차관소요 충당상황을

¹⁹⁵ 한일협상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도입키로 한 5 차계획 공공차관의 전체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발표된 여러 기사를 통해 대략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협상기간 동안에 이 같은 공공차입이 이미 합의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세계은행 외 기간으로부터의 차입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바, 50 억 달러보다 더 많은 차입이 합의되었음을 측정할 수 있다. 『조선일보』. 1981 년 10 월 15 일. 「공공차관 사업 22 억불 확정」. ; 『매일경제』. 1983 년 1 월 6 일. 「IBRD 차관 5 년간 36 억불」. ; 『매일경제』. 1986 년 10 월 22 일. 「내년 공공차관 축소」.

확인하기 위해서는 80년대 초 한국정부가 직면해야 했던 외환사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당시 한국은 외채원리금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계획된 외자소요에 있어서 양질의 차관을 조달하는 것이 경제정책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정부가 바라던 그러한 차입방식을 실현하기 어려운 환경조건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첫째 80년대 초에 발생한 국제고금리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차관 도입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각국은 공통적으로 경기침체 심화, 인플레이션 가속화, 국제수지 불균형 확대 현상을 맞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1979년 이래 세계는 고금리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고금리 추세는 1980년 말 최고에 달한 후 일시적인 후퇴를 보여 한 때 안정기를 맞는 듯하였으나 81년 4월 이후의 미국 통화팽창을 주인으로 한 달러표시금리의 급상승으로 전세계로 하여금 80년 중 경험하였던 사상 유례없는 고금리현상의 재확산을 일으켰다.¹⁹⁶ 금리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80~82년의 금리는 16~20%사이에서 움직였고 잠깐이지만 20%를 넘어서기도 했다.¹⁹⁷ 이러한 세계고금리 추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 대외채무금리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국제금리의 상승으로 한국의 대외채무의 지급자액을 크게 증가시킨다.

¹⁹⁶ 『매일경제』. 1981년 5월 21일. 「대외차입여건 나빠져 국제수지 조정곤란 국제고금리와 한국경제 하」.

¹⁹⁷ 『한국경제』. 1994년 5월 19일. 「국제금리] 오일쇼크 등 여파 6차례 고금리시대.. 전후 변천사」.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4051901491>(검색일:2020. 11. 15).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한 대외차입여건의 악화를 들 수 있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악조건 차입의 감수로 인한 차입 코스트의 상승을 의미하며 또한 금리의 움직임과 명확한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증권시황의 악화로 차입원의 선택범위가 축소됨을 나타내기도 한다. 지속적인 적자확대를 거쳐 80년 중 약 57억 달러에 달한 경상수지적자, 80년말 약 270억 달러에 달하여 75년 이래 무려 3배 이상 누적된 대외채무잔액 및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이러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었다.¹⁹⁸

특히 경상수지적자가 지속적이고 우려할 수준에 이르면 해외로부터의 차입은 어려워지고, 기존의 채권자 가운데 일부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기존 채무의 연장도 어려워지고 신규차입은 더욱 더 불가능해진다.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정부가 보유한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 정부가 보유한 외환보유액마저 고갈되면 기존에 차입한 외채에 대한 지급불능이나 국가부도의 사태에 이르게 되어 국민경제는 도탄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¹⁹⁹ 80년대 초 한국은 특히나 경상수지 적자 폭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대외차입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국가파산의 위기까지 대비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두환 대통령의 증언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¹⁹⁸ 『매일경제』. 1981년 5월 21일. 「대외차입여건 나빠져 국제수지 조정곤란 국제고금리와 한국경제 하」.

¹⁹⁹ 김철환. 경상수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iebeljd&logNo=6012754756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검색일: 2020. 9. 7).

외환사정도 악화일로였다. 국제금리가 7%에서 14~15% 수준으로 급등했는데 이처럼 높은 금리를 지불해가면서 해외에서 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매년 부족 자본 70 억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했던 우리 입장에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해외차관의 만기도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었다. 연말이 되면 경제 장관들이 차관을 얻으러 해외에 나가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오곤 했으나 그나마 이율은 높고 액수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외국투자자들은 10.26 사태에 이후 한국의 경제위기와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이유로 기존 차관의 상환기한 연장을 거부하는가 하면 새로운 차관 제공을 꺼려하고 있었다. (...) 최 대통령 시절 경제기획원 실무진에서는 외환 부도에 따른 국가파산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냈었다고 한다. 세상에 알려지면 자칫 나라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 극소수의 관계공무원이 쉬쉬하면서 작업한 것인데 어쨌든 외환사정은 그만큼 심각했다.²⁰⁰

앞서 제시한 대로 한국은 원리금상환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기고리의 조건이 나쁜 차관을 도입한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억제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80년대 초 최고에 달한 국제고금리 현상은 한국이 바라던 증장기저리의 차관도입 정책을 실현하기에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은 우선적으로 계속 쌓인 외채원리금을 상환하는 일에 시달려야 했고, 높은 금리를 지불해가면서 새로운 차관을 도입하는 일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겨우 새로운 차관을 확보하더라도 높은 이자와 적은 액수에 불과하였으며, 좋은 조건으로 거액의 차관을 얻어야 할 한국의 경제상황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²⁰⁰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p.32-33. 하선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두번째로 한국의 차입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은 대외신인도의 손상이다. 위에서 살펴본 전두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들은 당시 한국의 경제위기와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이유로 기존차관의 상환기한 연장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차관 제공을 꺼려했다.²⁰¹ 80년대 초 잇달아 일어나는 대학생들의 가두시위·노사분규와 시국불안으로 한국의 대외신인이 손상돼 외환수급에 차질이 일어난 것이다. 특히 미지를 비롯한 주요 신문들이 한국의 사태를 연일 크게 보도하는 가운데 유력한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지가 “한국은 정치는 물론 경제부문에서 시련에 부딪히고 있어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처방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논평하고 정치·경제불안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이 대한투자를 꺼리는 빛을 나타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각 금융기관들의 주요 외자차입선들이 대한신용 공여를 신중히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²⁰² 무역협회가 발표한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와 진로」라는 보고서에서는 외자 소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입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자상환의 대 경상수입비율도 80년에는 6.6%에 달해 77년 3.1%, 78년 4.1%, 79년 4.9%에 비해 크게 늘어나 81년 외채규모가 3백 41억달러에 이를 한국경제가 신용 공여대상국으로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²⁰³ 이장규는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김재익의 경제정책 등을 담은 저서를 통해 당시 한국의 대외신인도 문제를 이같이 서술하고 있다.

²⁰¹ 위의 저서. P.33.

²⁰² 『매일경제』. 1980년 5월 17일. 「시국불안 대외신용도 손상우려」.

²⁰³ 『매일경제』. 1980년 6월 20일. 「올 소요외자 88억불 국제수지 방어·실업 대책 시급」.

외국은행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국에 빌려주고 있는 돈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므로 더 이상 빌려주긴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좀 더 두고 봐야겠다’는 분위기가 서울 주재 외국은행들 사이에 확 퍼져 있었던 셈이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민간은행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승윤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아 무 리 작은 나라의 재무장관이기로서니 돈을 얻으러 은행마다 돌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보니 참으로 창피스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한국경제가 부도를 내게 생겼으니 뉴욕 시카고 등의 되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뱅커들을 만나 통사정을 했지요.”(…) 외국은행들이 이즈음의 한국경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바뀐 것은 당시의 국내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기업인들의 우왕좌왕은 물론이고 경제부처와 금융계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²⁰⁴

한국은 지속적으로 쌓인 외채가 많은데다가 그러한 외채의 원리금상환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수많은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한국의 공신력으로는 정식으로 국제금융기관에서 돈을 도입하기가 어려운 나머지 사채라도 써볼 생각까지 나오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²⁰⁵ 그만큼 당시 한국의 외환사정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 안보경협의 경제적 목적

²⁰⁴ 이장규. 1991. 『경제는 당신이 大統領이야 : 全斗煥 시대의 經濟秘史』. 서울: 중앙일보사. pp.69-70.

²⁰⁵ 위의 저서. p.69.

이상과 같이 5 차계획의 외자소요의 의미와 도입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안보를 근거로 요청한 거액 공공차관의 성격은 경제사회개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5 차계획에서 한국정부가 발표한 외자소요 총 465 억 달러의 포괄적 내용 중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일 교섭과정에서 한국은 5 차계획에 필요한 외자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 465 억 달러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계, 전자, 에너지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에 중점이 두어져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60 억 달러를 일관하여 결정 및 제공해줄 것을 희망했다.²⁰⁶ 즉 한국은 일본에게 465 억 달러의 외자는 경제사회개발 프로젝트에 충당하는 금액의 일부라고 설명하면서 총액 선택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5 차계획안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언급한 465 억 달러의 외자도입의 계획내용은 그러한 구체적인 경제사회 프로젝트 내용을 고려했다기보다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었다. 물론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조달되는 외자는 추후 해외저축 재정관리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도입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일본에게 요청한 60 억 달러의 거액 공공차관의 사용목적은 반드시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즉 이미 개발프로젝트에 필요한 외자가 거의 확보된 상태였으며, 앞서 관찰한 바와 같이 한국이 요청한 경험내용은 프로젝트 비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 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프로젝트에 충당할 자금을 떠나서 당시 한국은 다른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자체를 조달할 수 있는 조건이 잘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80 년대

²⁰⁶ 『경향신문』, 1981년 8월 24일. 「60억불 차관 합의점 못찾아」.

초 한국은 대외신인도의 불안과 국제고금리 현상으로 인한 외채원리금상환부담 및 이에 따르는 새로운 외자도입의 어려움에 시달렸다. 즉 한국은 프로젝트 진행을 떠나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외자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이 프로젝트논의를 거부하고 총액에 대한 선택결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프로젝트 이외의 자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전략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프로젝트에 충당하는 금액보다는 465 억 달러라는 한국의 금융적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계상된 포괄적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자를 되도록 좋은 조건으로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공공차관이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 정치목적에 한정되는 정치차관과 철도·고속도로 건설 또는 전력개발 등 경제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제차관으로 나누어진다. 공공차관은 정부보증으로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것으로서 대부분 항만이나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을 위하여 도입이 된다.²⁰⁷ 공공차관의 경우 개발계획과 직결되어 도입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공여국은 각종 정책이슈나 주문을 겸하기 때문에 외자의 입출이나 단순한 금맥관리의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²⁰⁸ 즉 공공차관은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투자가 아닌 내용의 산업성이 강한 투자이거나 원리금상환과 같은 금융적 성격 등 한국이 필요했던 개발사업

²⁰⁷ 김희호. 공공차관.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7765>(검색일: 2020. 9. 20).

²⁰⁸ 『동아일보』. 1981년 11월 4일. 「대이동 고급공무원 조직정비 이후 명암 엇갈린 관가 <2> 없어진 자리·기구의 허실」.

의외의 성격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프로젝트 이외의 자금으로서 상품차관이나 유연적 사용이 가능한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공여국 일본의 관여 또는 관리없이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거액차관에 대한 총액타결을 함에 따라 포괄적 의미의 465 억 달러의 일부로 도입할 것을 생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나 실제로 한국은 일본과의 교섭자리에서도 한국의 외채누적 및 원리상환의 부담을 전달한 바 있다. 1981년 9월 10일에 열린 정기각료회담 자리에서 한국의 이승윤 재무부장관은 한국의 경제정세와 함께 안보경협을 설명했는데, 이때 이승윤 장관은 외채의 누적과 원리상환 부담에 직면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60 억 달러의 공공차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²⁰⁹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확보되는 차관은 추후 투자비용으로서 경제사회개발 사업에 충당될 수 있지만, 그러한 공공차관의 조달은 이미 다른 기관으로 인해 대부분이 해결되었으며, 본래 공공차관 지원이 어려운 수익성이 높은 투자재원이나 원리금상환과 같은 금융적 내용에 도입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이 일본에게 요청한 거액차관의 성격은 포괄적인 의미의 ‘경제적’ 차관을 의미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국제고금리 현상 및 대외신용도 손상으로 인해 한국의 외자도입 계획은 많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기존의 이유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좋은 조건으로 외자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외자의 선별도입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차관도입조건이 불리한 자금은 도입을 억제할 방침임을 발표해

²⁰⁹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117.

양질 차관도입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²¹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양질의 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타당한 명분이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으며, 한국에게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둘러싼 안보 명목은 그러한 어려운 외자확보를 가능케 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에 총당하는 자금 이전의 한국정부가 필요로 했던 경제적 차관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의 거액차관 교섭을 통하자는 생각에 도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안보 명목을 가지고 되도록 많은 공공차관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말하자면 한국은 경제난 속에서 대일 안보경협을 통해 더 많은 외자를 확보하고자 했다는 선행연구와 대표 저서의 분석을 넘어 한국이 계획한 장기저리의 차입방식을 실현하는 방법이 없는 외자도입난 속에서 안보 명목이라는 것이 그러한 양질의 외자도입을 가능케 하는 최선의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안보경협에서 안보와 경제형태를 연계시킨 목적이 군사협력이 어려운 일본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경제형태로 60억 달러를 요청했다는 안보중심의 목적보다는, 외자조달이 어려운 한국의 대외거래적 상황 속에서 대일 안보경협이라는 것이 그러한 외자도입난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질의 차관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는 입장을 언급할 수 있는 점이다. 물론 조건 좋은 차관이 보다 많이 총당되면 될수록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그만큼 국내저축을 안보비용으로 총당할 수 있어, 안보비용과 경제비용은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지만 안보비용이 우선적으로 총당되었다 하더라도 5차계획에 소요되는 거액차관을 총당하는 일은 80년대 초 국제금융환경 상 애초부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안보와 경제의 연계성의 의미는 안보를

²¹⁰ 『매일경제』, 1982년 1월 21일. 「불요불급품목 수입최대억제」

위한 5 차계획외자 요청이 아니라 5 차계획 외자를 위한 안보가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같은 본고의 해석은 ‘안보경협’ 그 자체에 대한 주요인물들의 증언이 아닌 당시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라는 말하자면 간접 요소를 통해서 분석한 것으로 ‘추측’이나 ‘가설’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한계를 드러내며,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주요관계자들의 증언 없이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한일교섭에서 협력자금을 안보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안보’근거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은 유연적 차관을 확보하고 그러한 자금을 안보비용으로 사용할 전략을 가졌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거액차관 목적이나 안보와 경제형태의 연계요인은 말하자면 본래 공공차관 지원이 어려운 수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목적으로 했거나, 5 차계획 외자소요 내용에서 확인한 외채원리금상환 금액과 같은 한국의 대외경제적 어려움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목적으로 했거나, 또한 5 차계획 외자소요를 위한 것이 아닌 본래 한국이 계획했던 순수한 안보비용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라는 크게 세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어지는 한일 교섭단계에서 80년대 초 독재정권 하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일안보경협을 간행했던 전두환 대통령의 증언을 확인하면서 한국의 거액 공공차관의 실제 목적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 5 절 나카소네 내각 협상 시기와 대일경협의 실제목

적

1. 세지마-권익현 비공식 루트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한일경협 교섭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스즈키 젨코 총리가 퇴진하고 후임으로 위임하게 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정권이 출범한 시기부터였다. 82년 11월 중순에 일본 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 나카소네 간사장이 자민당 총재에 선출되고 곧이어 의회의 인준을 받아 내각총리 대신에 취임하게 되었다.²¹¹ 나카소네 총리는 발족하고 바로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각국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 인사를 했다.²¹² 특히 나카소네는 아시아국가들과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일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²¹³ 나카소네는 한국과 관련해 취임 초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고, 한일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표시했다.²¹⁴

나카소네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을 결심했으며, 취임 후 3일이 지난 11월 30일에는 세지마 류조를 불러 한일 경제협력차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밀사를 맡아달라고

²¹¹ 이재춘. 2011.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 : 온 몸으로 부딪힌 격동의 세월 36년』. 서울: 기파랑. P.164.

²¹² 中曾根康弘. 1992. 『政治と人生 : 中曾根康弘回顧録』. 東京 : 講談社. p.312.

²¹³ Shinichi, K. 2020. "The Making of Nakasone Yasuhiro's Diplomacy." *Asia-Pacific review*, 27(1); 6-15.

²¹⁴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359.

부탁하였고, 동시에 40 억 달러의 대한 경제협력을 둘러싸고 각 성청과의 협의를 시작했다.²¹⁵ 세지마를 수상자택에 초치한 나카소네는 “나는 전부터 정권 자리에 오르게 되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임해야 할지 늘 생각해왔다. 나의 생각은 우선 일본을 둘러싼 외교문제, 특히 긴급으로 해결해야 할 외교사항을 다루고 그 다음에 내정의 중요문제를 다루는 순서로 임할 생각이다. 그 관점에서 현재 긴급해결을 요하는 외교문제는 하나는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이고,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다. 더욱이 연초 1 월 중순의 방미는 내정되었으나, 그 전에 될 수 있으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달성하고 싶어,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나카소네 총리의 생각은 한일양국의 의견이 정리되면 수상으로서 연내(1982 년) 또는 내년(1983 년) 초에 한국을 방문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 양국관계 확립에 노력하고 싶다는 것이었다.²¹⁶

이에 대해 세지마는 한일 경협문제와 관련해서 “양국관계의 정상화에는 지난 2 년간 복잡해진 경제협력문제를 타결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경제협력문제에 관해 양국정부는 각자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해 왔으며, 심지어 총액이든 내용이든 상당한 격차가 있다. 나는 이 문제의 처리에 대해서는 일본측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것,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나, 관계정상화의 대극적 견지(見地)에 서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없으면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본다. 이 점에 관해서 수상의 생각을 묻고

²¹⁵ 中曾根康弘. 1992. 『政治と人生：中曾根康弘回顧録』. 東京：講談社. p.312.; 위의 저서. P.359.

²¹⁶ 瀬島龍三. 1995. 『幾山河：瀬島龍三回想録』. 東京：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pp.425-426.

싶다.”고 언급해, 이에 대해 나카소네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대응해도 된다.”는 생각을 제시했다.²¹⁷

세지마를 밀사로 선택한 일과 관련해서 나카소네는 대담 형식으로 된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세지마 씨는 임시행정조사회의 유력한 멤버로서 도쿄 회장을 보좌해서 야당과 각 성의 절충에 힘쓴 솜씨는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쟁 중 대본영(통합참모본부)의 참모를 지냈는데, 일본 육사 때의 관계였는지 한국군부에 친지가 많아 가끔 한국에 초대되어 일본의 정치정세와 국제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과도 친했습니다. 대통령의 밀사로 최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방문이 실현되도록 의뢰한 것입니다.”²¹⁸

특히 세지마는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일 협력관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세지마는 한일관계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동아시아안정을 위해서도 소이(小異)를 버리고 합동하여(大同につき) 한일양국의 관계를 안정발전시켜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믿고 있다. 제 2 차세계대전 후 분할되어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장래 어느 날 통일이 되어 조선민족이 일국을 형성하는 일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도 그 실현에 협력해 나아갈 것이 필요하다. 그것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먼저 한국(자유와 민주주의의 국가)이 성장발전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되는 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야 자유와 민주주의를 축으로 하는 반도의 통일국가가 창생될 것이다. 일본은 이 관점에 서서 한국과의 경제교류,

²¹⁷ 위의 저서. p.426.

²¹⁸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359.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GNP 의 약 6%를 국방비로 투입해야 할 국방국가
한국의 경제안정에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 또한 일본과의
우호협력강화가 자국의 국익과 합치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²¹⁹

세지마는 ‘동 아 시 아 의 안정=우선 한반도의 안정이며, 그것은 한일
양국관계의 안정’이라는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²²⁰ 이처럼 한국과
오랜 친분이 있으면서 동아시아의 안정이 한일 우호관계 구축과 직결된다는
사고를 가진 세지마 특사의 교섭능력에 따라 양국교섭은 빠른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나카소네 총리의 요청으로 세지마 특사는 12 월 중에 두
번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²²¹

(1) 부산회담

세지마는 나카소네 수상의 요청을 실행하기에 앞서 한국과의 회담을
3 단계로 추진해 나갈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 제 1 단계는 한국 대통령이
관계정상화에 대해 현재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 제 2 단계는 그 결과 양측 수뇌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²¹⁹ 瀨島龍三, 1995. 『幾山河：瀨島龍三回想録』. 東京：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p.419.
인용내용은 필자가 번역했다. 본문: 東アジア安定のためにも小異を捨てて大同につき、日韓
両国の関係を安定させていくことが絶対必要だと私は信じている。第二次世界大戦後分割さ
れ、南北に分裂した半島は、将来いつの日か統一されて、朝鮮民族が一国を形成することが
期待される。日本もその実現に協力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それに至る過程として、まず
韓国(自由と民主主義の国家)が成長発展し、国際的に信頼される国家となることが重要で、
これによってこそ、自由と民主主義を柱とする半島の統一国家が創生されるだろう。日本はこ
の観点に立って、韓国との経済交流、文化交流を進め GNP の約 6%を国防費に注入せざるを
得ない国防国家韓国の経済安定に協力していくべきである。韓国もまた、日本との友好協力
強化が自らの国益に合致することを深く認識すべきだ。

²²⁰ 위의 저서, p.432.

²²¹ 中曾根康弘, 1992. 『政治と人生：中曾根康弘回顧録』. 東京：講談社, p.313.

경제협력문제를 다루고 컨센서스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제 3 단계는 1,2 단계가 추진되었을 때 세지마 본인이 수상의 비공식 특사로 방한하여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전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이었다. 특히나 나카소네 수상의 의향으로서는 제 3 단계까지를 연내(1982년)에 달성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세지마는 민주정의당(한국여당)의 사무총장이면서 친구였던 권익현과 연락하여 일본의 새정권이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되도록 빠른 시일에 달성하고 싶어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측 대통령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 이에 대해 비밀리의 회담을 가지자는 의향을 전달했다. 그 결과 12월 8일의 부산회담이 결정되었다.²²²

세지마는 기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하네다에서 오사카 환승을 통해 부산으로 향하고 권익현은 선거구에 간다고 칭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고 부산공항 VIP 룸에서 3시간 회담을 가졌다. 부산회담에서 파악하게 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생각이 양국관계를 되도록 빠른 시일에 적극적으로 확립한다는 것과 경제협력문제에 대해서는 발족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카소네 수상이 곤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협력을 요청하고 싶다는 의견이었다. 즉 양측 수뇌의 생각이 조기해결, 경제협력문제의 탄력적 대처에 있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이에 따라 본 교섭의 전망에 있어 세지마는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권익현은 마지막으로 경제협력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서로 생각하고 다시 만나자는 입장을 전달하고 회담을 마쳤다.²²³

²²² 瀬島龍三, 1995. 『幾山河：瀬島龍三回想録』. 東京：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pp.427-428.

²²³ 위의 저서, P.428.

그 결과 일본 정부내부에서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세지마가 한국측에 전달할 일본측의 복안이 작성되어 엔차관을 17 억달러 정도까지 증액(다만 기한은 7 년)하기로 되었다.²²⁴ 한국측은 기간을 5 년으로 희망하고 있었으나 일본의 재정상 단년도 부담이 커지므로 기간은 7년으로 하는 것은 일본측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또한 한국은 상품차관 10 억 달러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의 제도상 중진국에 대한 상품차관은 공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반면, 타협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40 억 달러 중 엔차관에 대해서는 일본측은 종래 15 억 달러를 17 억 달러로 증액할 정도는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²²⁵ 이 복안을 기초로 세지마는 12 월 23 일 오사카에서 권익현과 재회하여 경제협력문제 해결 및 수상방한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었다.²²⁶

(2) 오사카회담

오사카회담에서는 세지마가 먼저 상품차관, 기간 7 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의사를 제언하고 권익현은 이를 승인했다. 엔차관의 금액에 대해서는 종래 한국측이 요청한 액수는 23 억 달러였으나, 이 자리에서 권익현은 20 억 달러를 제안했다. 종래 한국측 23 억 달러, 일본측 15 억 달러였지만, 이 자리에서 한국측 20 억달러, 일본측 17 억 달러로 좁혀진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측은 20 억 달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²²⁴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264.

²²⁵ 瀬島龍三, 1995. 『幾山河 : 瀬島龍三回想録』. 東京 : 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pp.428-429.

²²⁶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264.

아니었고 한편 한국측도 17 억 달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의 결과, 중간 금액인 18억5천만 달러로 좁혀졌다. 금리 문제나뱅크론 문제 등도 있었으나 전체로서 총액 40 억 달러, 그 중 엔차관 18 억 5 천만 달러, 수출입은행용자 21 억 5 천만 달러, 기간 7 년, 금리 6%대라는 골격에 대해 대강 합의했다. 또한 연말 12 월 30 일쯤 세지마가 수상의 특사로 친서를 가지고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 더욱이 그 결과 가능하면 나카소네수상 자신이 1 월 10 일 전후하여 방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²²⁷

2. 세지마-전두환 비공식 루트

이러한 경위를 거쳐 세지마는 12 월 29 일부터 30 일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였다. ²²⁸ 우선 세지마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권익현과 이범석 외무부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범석 장관은 일본의 제도상 상품차관이 불가능한 것은 이해하지만 연간 1 억달러, 7 년간 합계 7 억 달러의 뱅크론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지마는 뱅크론 문제는 일본측에게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이지만 어떻게 해서 개인으로서 한국측 요망의 2 분의 1, 즉 3 억 5 천만 달러를 노력에 보겠다고 답변했다. 회담 이후 동반했던 오구라 아시아과장과 가네코 대장성국제금융 과장과 상의하였으나 역시나 두 과장 모두 상당 엄중한 태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양국 관계전체의 정상화가 이제는 이 뱅크론에

²²⁷ 瀨島龍三, 1995. 『幾山河：瀨島龍三回想錄』. 東京：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P.429.

²²⁸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269.

있는 것으로 보아 세지마는 대극적으로 3 억 5 천만 달러로 낙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추후 세지마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3 억 5 천만 달러의 बैं크론을 한국측과 논의한 것에 대해 다케우치 대장대진 본인이 성내(省内)를 한데 모아 이 제안을 정식으로 승인했다.²²⁹

세지마는 다음날 30 일에는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수상의 친서를 전달했다.²³⁰ 세지마는 나카소네 총리의 요청에 따라 그의 밀사로 한국에 왔음을 밝히고 한일 간의 현안인 차관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제시한 40 억달러 선을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세지마는 일본의 정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만약 60 억 달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그 의견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했다. 만약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부결이 된다면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그렇게 될 경우 차관 문제의 추진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카소네 총리는 젊고 유능하여 장래가 크게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정치적 기반이 미약하여 이 사안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게 되면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손상될 거라고 했다. 그러니 장래가 촉망되는 나카소네 총리를 전두환 대통령이 좀 도와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리고 40 억 달러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면 현금 차관 이외에 기술지원 등 다른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건의를 받아줄 것을 약속해준다면 나카소네 총리가 미국 방문에 앞서 바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두환은 세지마의 진지한 설명을 듣고 보니 일본측의 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세지마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²²⁹ 瀬島龍三, 1995. 『幾山河：瀬島龍三回想録』. 東京：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pp.430-432.

²³⁰ 위의 저서, p.430.

접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카소케 총리의 진정성이 읽혀져서 세지마의 간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²³¹

세지마는 이범석 장관에게 수상의 방한 날짜를 1 월 10~11 일로 제안하고 이에 따라 나카소네 수상은 1 월 10 일 일본 수상으로서 전후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²³²

3. 나카소네 총리 방한과 40억 달러 타결

나카소네의 방한은 총리가 취임 초에 미국부터 공식 방문하는 관행을 바꾸어 이번에는 최초의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고자 한 것이며, 나카소네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최초의 일본수상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²³³ 미일관계 구축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은 방문하여 동시에 다양한 외교문제를 다루던 이전의 일본수상들과는 대조적으로 나카소네 수상은 1980 년 초에 해외 공식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하므로 한일관계를 재구축하였다.²³⁴

전두환과 나카소네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40 억 달러 경제협력안을 최종 타결지음으로써 우호 협력의 새로운 한일 시대를 열어놓았다.²³⁵

²³¹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360.

²³² 瀨島龍三. 1995. 『幾山河：瀨島龍三回想錄』. 東京：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p.431.; 中曾根康弘. 1992. 『政治と人生：中曾根康弘回顧錄』. 東京：講談社, p.313.

²³³ 이재춘. 2011.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 : 온 몸으로 부딪힌 격동의 세월 36 년』. 서울: 기파랑, P.165.

²³⁴ Junya, N. 2020. "Strategic Japan-South Korea Cooperation: Prime Minister Nakasone Yasuhiro and Korean Peninsula Diplomacy." *Asia-Pacific review*, 27(1); 113-132.

²³⁵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361.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는 한일경협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지만, 나카소네 총리가 서둘러 방한해서 이 회담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40억 달러 차관 문제의 타결이었다. 전두환과 나카소네는 사전에 세지마와 조율한 대로 40억 달러에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²³⁶ 특히 양국 정상은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전대통령은 한국의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의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고 전하고 “나카소네 수상은 동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일본의 경제협력 기본방침 하에서 가능한 한 협력을 행할 의도가 있다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구체적인 협력의 방안으로 연차베이스의 장기저리 정부차관을 포함한 각종의 자금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40억 달러 경협문제가 합의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공동성명은 이어 경협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지도자는 그 제일보로서 금년도의 엔차관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조속히 양국 정부간에 협의를 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²³⁷ 양국 정상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진에서 계속 협의하여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뒤 다음날 협약서에 서명하기로 했다.²³⁸

한일 경협문제는 양국의 외교장관(일본의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외상과 한국의 이범석 외상) 간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²³⁶ 위의 저서, p.361.; 『매일경제』, 1983년 1월 12일. 「대한 경협 원칙타결 전대통령 중근 일수상 두차례 정상회담」.

²³⁷ 『동아일보』, 1983년 1월 12일. 「한반도안정 일안정에 긴요」.

²³⁸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361.

회담은 전두환-나카소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²³⁹ 양국 외상은 외무부장관실에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제반문제들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경험의 개괄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공여방법을 양국 아주국장이 서명한 합의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한일양국은 구체적인 원칙으로서 82년부터 7년에 걸쳐 총 40억 달러 규모를 목표로 장기저리 차관을 공여한다는데 합의하고 이 중 18억 5천만 달러는 엔차관으로, 나머지 21억 5천만 달러는 수출입은행차관(JEXIM)으로 각각 제공키로 하였다.²⁴⁰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경험의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40억 달러 목표의 공공차관을 평균금리 6%선으로 공여하여, 40억 달러의 구체적인 내역은 ODA는 18억 5천만 달러를 목표로 제공하되 구체적인 상환조건은 프로젝트에 따라 개별적으로 약정한다.

둘째, ODA 자금 18억 5천만 달러 가운데 프로젝트에 따라 일본의 대외경제협력자금 지침인 30% 이내에서 내자비용으로의 전용을 인정한다.

셋째, 40억 달러 가운데 ODA 18억 5천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1억 5천만 달러를 JEXIM으로 제공하되 개별계약에 포함될 경우 15%까지 내자동원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JEXIM 자금 21억 5천만 달러 가운데 3억 5천만 달러는 뱅크론으로 제공, 전액 내자비용으로 사용한다.

²³⁹ Junya, N. 2020. "Strategic Japan-South Korea Cooperation: Prime Minister Nakasone Yasuhiro and Korean Peninsula Diplomacy." *Asia-Pacific review*, 27(1): 113-132.에서
 世界平和研究所. 1996. 世界平和研究所(編). 『中曾根内閣史：日々の挑戦の朝鮮』. 東京:世界平和研究所. pp.159-160.를 재인용.

²⁴⁰ 『동아일보』. 1983년 1월 12일. 「40억 달러 7년 걸쳐 대여」.

여섯째, 연차별 공여는 일본예산의 단년제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프로 매년 집행한다.

일곱째, 제 1 차연도 ODA 차관 공여 협의를 위해 1 월 하순경 동경에서 실무자회의를 개최한다.²⁴¹

4. 대일경협외의 실제목적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한일 양국은 이어 협약서 작성 작업에 들어갔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측이 일본에게 요청한 거액 공공차관의 실제 도입목적은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정상회담 이후 실무자회담 자리에서 일본측이 협약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어려움을 표시한 한국 사정에서 드러난다. 이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증언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 날(정상회담) (...) 밤 1 시에 이범석 장관을 만났다. 그는 펍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실무회담에서 타결이 되지 않아 서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 측에서 짧은 시간안에 작성할 수 없는 서류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양국 정상간에 정치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인데 그 세세한 내용을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면 어찌겠다는 것이냐. 일본이 달라는 서류를 내놓을 필요도 없고 같이 술이나 마시면서 내일 아침까지 끌고 가라. 내일 아침이 되면 서류에 사인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다. 서울 시내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실무회담은 한국에서는 공노명 외무부차관보가, 일본

²⁴¹ 위의 기사.

측은 기우치 외무성 아주국장이 각각 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기우치 아주국장은 두 나라 정상간에 경협의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지만, 협약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였겠지만, 한국 측으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과 관련된 사업의 성격상 그 내용을 상세히 밝히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측의 독촉을 받으며 새벽녘까지 밀고 당기고 하던 공노명 차관보는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핑계를 대고 회담장을 나가버렸다.²⁴²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측 기우치 국장도 결국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²⁴³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공식적으로 협약서를 교환하게 된 것이다. 인용문에서 표시된 부분에 주목하면 본고의 연구질문의 답이 되는 결정적 근거를 관찰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일경협의 목적은 마지막까지 안보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합의한 40 억 달러의 의미는 경제개발 프로젝트 이외의 안보적 사업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한국은 대일 경협을 통해 확보하는 차관을 안보적 사업에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한국이 교섭과정에서 보인 특징에 대해 재검토해보면, 프로젝트논의를 거부하고 총액 선택결을 견지하는 자세를 보였거나, 실제 프로젝트 비용보다 더 많은 공공차관을 요청하였거나, 상품차관이나 유연적 차관을 요청한 이유는 바로 경제개발 프로젝트 비용과 동시에 안보비용을

²⁴²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p.361-362. 하선 및 괄호내용은 필자가 작성했다.

²⁴³ 위의 저서. p.362.

충당하고자 하는 전략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며, 경협내용은 5 차계획 사업을 포함하면서도 그 목적의 중심은 타결 시기에 이르기까지 방위력 증강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유연적 사용이 가능한 차관을 충당하여 공여국 일본의 관여 없이 이를 안보적 사업에 도입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이 앞서 관찰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서, 한국의 거액차관 목적이 5 차계획의 수익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함이거나 한국의 금융적 보전을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안보와 경제의 연계요인 또한 한국이 표면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군사적 협력이 어려운 일본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제안된 5 차계획이었다.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한 중심 가설은 ‘한국의 대일 안보경협 요청은 안보적 달성보다는 한국경제 그 자체를 위한 경제회복적 달성이 목적이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관찰을 통해 이러한 가설은 증명되지 않았으며, 대일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국의 전략은 바로 100 억 달러 구상시기부터 타결의 마지막시기까지 안보적 목적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경협의 근거로서 ‘안보’가 상실되고 5 차계획의 순수한 경제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보비용을 챙기고자 하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안보명목이 거액공공차관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5 차계획이라는 근거 또한 안보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1981 년 4 월에 시작한 한일경제협력 교섭은 1 년 9 개월만에 끝을 맺었다.²⁴⁴ 추후 양국은 실무자회담을 통해 단년도 지원프로젝트에 대한

²⁴⁴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P.303.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처럼 계획했던 대일 경협이 실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어 실무자회담을 통해 합의된 자금의 도입내용과 사용원칙을 확인하고자 한다.²⁴⁵ 지금까지 관찰을 통해 확인한 한국의 전략적 목적과 실제 도입내용이라는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한일경협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 장 경협자금의 도입실적과 그 의의

제 1 절 경협자금의 사용원칙과 연차별 도입실적

1. 경협자금의 사용원칙

한국정부가 발표한 각종 일본 엔차관 도입계획 및 양국의 교환각서를 보면 한일 양국 사이에 성사된 40 억 달러의 자금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일본

²⁴⁵ 80년대 한일경협의 도입내용과 관련해서는 고모다 마유미(2013)가 자신의 논문에서 제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부분에서 고모다(2013)와 비교된다. 첫째, 한국의 대일 경협의 목적과, 그 결과로서의 실제 차관의 도입내용을 비교함에 따라 80년대 한일경협의 의의를 한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둘째, 고모다는 일본 외무성이 제공하는 자료로서 “国別援助実績(1990年までの実績) 韓国”를 참고하여 7년간 공여금액의 전체내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반면, 본 논문은 양국의 교환각서와 같은 정치적 공식합의문서 등 복수의 1차자료를 참조함에 따라 연구로서의 설득력을 보다 높이 부여한다.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1989 년)에 따르면 대일자금의 사용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2.1〉 자금운용에 관한 주요 합의 내용

구분	엔(OECF) 차관	수출입은행(JEXIM) 사업차관	수출입은행(JEXIM) 뱅크론
-금액	18.5 억 달러	18 억 달러	3.5 억 달러
-도입조건	매년 도입시 결정	OECD 수출신용조건	OECD 수출신용조건
-금리('89)	연 4.0%	연 5.7%	연 5.7%
-기간	25 년	10 년 이내	10 년 이내
사용분야	상·하 수도 등 10 개 분야 1)* (국제경쟁입찰)	일본기자재 구입*	기자재 구입*

자료: 재정경제원, 1989.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 p.1.

주: 1)는 상, 하수도, 댐, 교육, 의료, 공해방지, 철도, 농업개발, 중소기업지원 및 과학기술 분야

〈표 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금운용에 관한 주요 합의 내용 중 사용분야에서 엔차관에 대한 사용을 각종 5 차계획 사업으로 규정하고, 수출입은행(JEXIM) 사업차관에 대한 사용을 일본기자재 구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입은행(JEXIM) 뱅크론에 있어서도 기자재 구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차관에 대한 사용분야는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차관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일 양국 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종 교환각서에서는 엔차관 제공원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7 차에 걸쳐 이루어진 모든 도입연도에서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차관공여 첫 연도인 83 년도 엔차관 도입의 교환각서 내용을 인용문으로 제시한다.²⁴⁶

가. 일본은 한국에 451억엔의 차관을 제공함.

○ 사업별 제공액

- 삼천 다목적댐: 204억엔
- 서울대 소아과병원: 54억엔
- 서울시 하수처리장: 115억엔
- 상수도 확장: 78억엔

○ 제공조건

- 상환기간: 7년 거치 18년 분할상환
- 금리: 연 4.5%
- 인출기간: 삼천 다목적댐 6년, 기타사업 5년

나. 차관제공은 한국정부와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실시됨.

다. 차관금액은 상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지불하는 대금으로 사용됨.

라. 상기 차관에 의한 구매는 일본해경제협력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함.

마. 한국정부는 상기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의 자유와 선의의 경쟁을 보장한다.

²⁴⁶ 다만 이에 대한 내용은 수출입은행 자금을 포함하지 않은 18.5 억 달러의 엔차관에 대한 원칙에 제한된다.

바. 한국정부는 차관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조세의 부과를 면제한다.²⁴⁷

제시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엔차관에 대한 사용원칙을 양국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에 의해 실시할 것을 규정하거나 차관금액은 사업 수행을 위한 물자나 용역 구매에 대한 지불로 차관사용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차관에 의한 구매는 일본 구매지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말하자면 피원조국인 한국은 원조국 일본의 관리 하에서만 차관사용이 허락되는 것이다. 이는 전두환 대통령이 바라던 안보적 사업에 대한 차관 사용을 공여국의 허가 없이 실행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관의 사용원칙에 따라 양국간에 성사된 수출입은행 자금을 포함한 40 억 달러의 경험자금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2. 경험자금의 연차별 도입실적

7년간의 공여로 합의된 차관에 대한 공여조건은 연차별 실무자회담을 통해 협의되었다. 공여실적은 아래의 제 1~7 차로 구분된다.

제 1 차 차관공여 합의는 83년 1월~3일에 걸쳐 진행된 실무자회의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9월 8일 양측의 교섭이 완료, 문안 합의에 이르렀다. 체결의의는 한국의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실시에 따른 유리한 조건의 차관도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합의를 통해 일본은 451 억엔의

²⁴⁷ 총무처. 1983. 「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국 정부간의 82년도 엔차관도입에 관한 각서교환(제 616호)」.pp.2-3. 하선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차관을 제공할 것을 교환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표 2.2>에 나오는바, 섬천 다목적댐 204 억엔, 서울대 소아병원 54 억엔, 서울시 하수처리장 115 억엔, 상수도 확장 78 억엔이다. 이에 따른 제공조건은 상환기간을 7 년 거치, 18 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금리를 연 4.5%로 규정하였다.²⁴⁸

<표 2.2>. 1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구분	사업명	금액	
		백억엔	천불
1 차년도분	섬천댐 건설	20,400	88,696
	서울대 소아병원 건립	5,400	23,478
	서울 탄천 하수처리장 건설	11,500	50,000
	지반상수도 건설	7,800	33,913
	합계 (4 건)	45,100	196,087

자료: 재정경제원, 1989.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 p.4.

제 2 차 차관공여에 대한 합의는 83 년 8 월 10 일 한일 실무자회담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84 년 5 월 18 일에 양국은 교섭을 완료, 문안합의에 이르렀다. 체결의의는 한국의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실시에 따른 유리한 조건의 차관도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합의를 통해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495 억엔의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표 2.3>에서 알 수 있는바, 주암 다목적댐 건설사업 111 억엔, 하수처리장(서울, 부산) 확장 230 억엔, 도시상수도 확장 51 억엔, 농수산 연구정비 현대화

²⁴⁸ 위의 자료, P.2

33 억엔, 기상정비 현대화 42 억엔, 국립보건원 안정성 연구센터 건설 24 억엔, 도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장 4 억엔이다. 또한 제공조건은 상환조건을 7 년 거치, 18 년 분할상환으로 규정하고, 금리는 연 4.75%로 규정했다.²⁴⁹

〈표 2.3〉 2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구분	사업명	금액	
		백억엔	천불
2 차년도분	서울 중랑 하수처리장 건설	16,700	69,583
	부산 수영 하수처리장 건설	6,300	26,250
	쓰레기 처리시설 기술 용역	400	1,667
	국립보건 안정성 연구센터	2,400	10,000
	대구시 상수도 건설	2,200	9,167
	농수산 연구기자재 현대화	3,300	13,750
	기상정비 현대화	4,200	17,500
	서울시 사우도 건설	2,900	12,083
	주암댐 건설	11,100	46,250
	합계 (9 건)	49,500	206,250

자료: 재정경제원, 1989.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 p.4.

제 3 차 차관공여에 대한 합의는 84 년 11 월 1 일 한일 실무자회담 자리에서 협상이 이루어져 85 년 8 월 21 일 양국은 문안합의에 이르렀다.

²⁴⁹ 총무처, 1984.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3 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제 294 호)」. pp.1-2.

체결의의는 한국의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실전에 따른 유리한 조건의 차관도입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대한민국에 544 억엔의 차관을 제공할 것을 합의했다. 사업별 차관제공액은 아래 <표 2.4>에서 나오는데, 과학·계량표준연구용 기자재보강사업 27 억엔, 종합 해양조사선 건조사업 41 억엔, 교육시설 확충사업 152 억엔, 의료시설 확충사업 123 억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01 억엔이다. 제공조건은 상환조건을 7 년 거치 18 년 분할상환으로 규정하고 금리는 연 5%로 규정되었다.²⁵⁰

<표 2.4> 3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구분	사업명	금액	
		백억엔	천불
3 차년도분	측정표준 및 과학연구소 기자재 보강	2,700	11,013
	종합 해양연구조사선	4,100	16,724
	교육시설 확충	15,200	62,000
	의료시설 확충	12,300	50,000
	부산 장림 하수처리장 건설	9,260,	37,771
	광주 하수처리장 건설	7,560	30,837
	춘천 하수처리장 건설.	3,280	13,379
	합계 (7 건)	54,400	221,724

자료: 재정경제원. 1989.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 p.4.

²⁵⁰ 총무처. 1985.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84 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교환각서(제 394 호)」. pp.1-2.

제 4 차 차관공여에 대한 합의는 86 년 9 월 한일 외상회담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87 년 3 월에 차관도입내용 및 협정안이 합의되었다. 4 차 합의에서는 제공의 이유를 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도입하고자 함으로 되어있어, 82~86 년에 걸친 5 차계획 종료 이후 6 차계획에 대한 공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한민국에 466 억 3 천 3 백만엔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사업별 차관액은 아래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임하 다목적댐 사업 69 억 7 천 5 백만엔, 교육시설 확충 사업(2 차) 129 억 1 천 1 백만엔, 53 억 7 천 2 백만엔, 낙농시설 개선사업 38 억 7 천 5 백만엔, 중소기업 현대화 계획 77 억 5 천만엔, 농업기계화 계획 77 억 5 천만엔이다. 차관조건은 상환조건으로서 7 년 거치, 18 년 분할상환(단, 중소기업 현대화 계획은 7 년 거치, 13 년 분할상환)으로 규정하고 금리는 연 4.25%(콘설턴트 비용 지불 부분은 연 3.25%)로 규정하였다.²⁵¹

<표 2.5> 4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구분	사업명	금액	
		백억엔	천불
4 차년도분	임하 다목적댐 건설	6,975	45,000
	교육시설 확충사업	12,090	78,000
	종합과학관 기자재 도입	821	5,300
	유가공 공장 건설	3,875	25,000

²⁵¹ 총무처. 1987.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85 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제 12 회)」. pp.1-2, 4.

	농업기계화 지원	7,750	50,000
	중소기업 부문 금융 융자 전대	7,750	50,000
	쓰레기 종말처리 시설 정비	5,372	34,700
	합계 (7 건)	44,633	288,000

자료: 재정경제원, 1989.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 p.5.

제 5 차 차관공여에 대한 합의는 87 년 7 월 한일 실무자회담이 진행되어, 9 월 OECF 조사단의 방한을 거쳐 88 년 3 월 차관도입 내용 및 협정안이 합의되었다. 차관공여 이유는 한국의 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도입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한민국에 272 억 6 천 2 백만엔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사업별 차관액은 아래 <표 2.6>에서 알 수 있는바, 영산강지구 방조제사업 44 억 4 천만엔, 울산시 도시개발사업 44 억 4 천만엔, 교육시설 확충사업(3 차) 59 억 2 천만엔, 사립대 부속병원 확충사업 56 억 2 천 4 백만엔, 연구소 시설보강사업 26 억 7 천 9 백만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천주시, 광주시) 41 억 5 천 9 백만엔이다. 차관조건은 상환조건으로 7년 거치, 18년 분할상환이 규정되고, 금리는 연 4.25%로 규정되었다.²⁵²

<표 2.6> 5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구분	사업명	금액	
		백억엔	천불
5 차년도분	영산강지구(3-1) 농업종합개발	4,440	30,000

²⁵² 총무서, 1988.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제 5 차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DF)차관에 관한 교환각서체」. pp.1-4.

울산시까지 철도 이설	4,440	30,000
교육시설 확충	5,920	40,000
사립대 부속병원 시설 확충	5,624	38,000
연구소 시설 확충	2,679	18,000
- 유전공학 연구시설 확충	(681)	(4,600)
- 기계 연구시설 확충	(740)	(5,000)
- 신 물질 창출 연구기자재 구입	(666)	(4,500)
- 반도체 공용기술 지원	(592)	(4,000)
하수처리장 건설	4,159	28,100
- 청주시	(2,442)	(16,500)
- 제주시	(1,717)	(11,600)
합계 (6 건)	27,262	184,200

자료: 재정경제원. 1989.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 p 5.

제 6 차 차관공여에 대한 합의는 88 년 6 월 대상사업안 제시에 따라 89 년 1 월 일본정부조사단의 방한이 이루어지며, 89 년 5 월에 교환각서 안 문안이 합의되었다. 차관공여 이유는 한국의 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은 대한민국에 76 억 3 천 4 백만엔의 차관을 제공했다. 사업별 차관액은 아래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대전시 상수도 확충사업(3차) 14억3천4백만엔, 중소기업 현대화사업(2 차) 62 억엔이다. 차관조건은 상환조건으로서 대전시 상수도

확충사업을 7 년 거치, 18 년 분할상환으로, 중소기업 현대화사업은 7 년 거치, 13 년 분할상환으로 규정하고 금리는 연 4.0%로 규정되었다.²⁵³

〈표 2.7〉 6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구분	사업명	금액	
		백억엔	천불
6 차년도분	대전시 상수도 확충사업(3 차)	1,434	11,600
	중소기업 현대화사업(2 차)	6,200	50,000
	합계 (2 건)	7,634	61,600

자료: 재정경제원. 1989.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 p.6.; 총무처. 1989.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제 6 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교환각서(제 23 회)」. p.1.

차관공여의 마지막이 된 제 7 차 합의는 89 년 11 월 대상사업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90 년 1 월에 일본정부조사단이 방한하여, 90 년 6 월에 교환각서안이 문안합의되었다. 동 차관공여의 이유는 대한민국의 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의 원활한 수행에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한민국에 995 억 9 천엔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사업별 차관액은 아래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서울지하철 건설사업(2 차) 720 억엔, 의료정비 확충사업 43 억 2 천만엔, 수상운계 교육기관 실습정비 확충사업 21 억 6 천만엔, 배합사료공장 건설사업 54 억 1 천 4 백만엔, 낙농시설 확충사업(2 차) 24 억 4 천 8 백만엔, 육가공공장 건설사업 17 억 2 천 8 백만엔, 중소기업 현대화사업(3 차) 115 억 2 천만엔이다. 차관조건은 상환조건으로,

²⁵³ 총무처. 1989.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제 6 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교환각서(제 23 회)」. pp.1-3.

중소기업 현대화사업 7 년 거치, 13 년 분할상환으로, 그 외 사업은 7 년 거치, 18 년 분할상환으로 규정되었고 금리는 연 4.0%이다.²⁵⁴

〈표 2.8〉 7 차년도 OECF 자금사용내역 및 추진계획사업

구분	사업명	금액
		백억엔
7 차년도분	서울지하철 건설사업(2 차)	72,000
	의료장비 확충사업	4,320
	수·해운계 교육기관 실습장비 확충사업	2,160
	배합사료공장 건설사업	5,414
	유가공시설 확충사업(2 차)	2,448
	육가공공장 건설사업	1,728
	중소기업 현대화사업(3 차)	11,520
	합계 (7 건)	995,90

자료: 총무처, 1990.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제7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pp.1-2.

주: 달러화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40 억 달러 경험차관 중 일본 정부차관인 18 억 5 천만 달러를 전액 도입하였으며, 21 억 5 천만 달러로 책정되었던 일본수출입은행의 상업차관 중에서는 6 억 9 천 8 백 50 만 달러만이 도입되어, 평택 화력발전소의 LNG 화, 호남화력발전소 1 호기 건설, 광양제철소 건설, 포항제철소현대화 등에 쓰여졌다. 이후 외환사정이 좋아져 한국정부는 나머지 상업차관은

²⁵⁴ 총무처, 1990.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제 7 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pp.1-4.

도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총 25 억 4 천 8 백 50 만 달러의 경험차관이 실제로 쓰인 것이다.²⁵⁵ 특히 일본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상업차관 및뱅크론 도입억제 방침에 따라 JEXIM 사업차관은 1986 년부터, JEXIM 뱅크론은 1988 년부터 각각 도입이 중단되었다.²⁵⁶ 40 억 달러 경험자금에 대한 사용실적을 정리하면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한일 경험자금 사용 실적

(단위: 백억불)

구분	합의액(A)	사용(B)	소비율(B/A)	미사용 잔액	비고
- OECF 차관	1,850	1,850	100.0%	0 (0.0%)	전액 사용
- JEXIM 사업차관	1,800	625.0	34.7%	1,175 (65.3%)	86.8 이후 도입중단
- JEXIM 뱅크론	350	73.5	21.0%	276.5 (79.0%)	88.1 이후 도입중단
합계	4,000	2,548.5			

자료: 재정경제원. 1989.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 p.2.; 조갑제닷컴. 한국경험은 세지마의 발상.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730&C_CC=AC (검색일: 2020. 8. 31). 주: 일부 내용은 필요에 따라 필자가 편집했다.

제 2 절 한국의 대일경험 목적과 결과에 대한 고찰

²⁵⁵ 조갑제닷컴. 한국경험은 세지마의 발상.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730&C_CC=AC (검색일: 2020. 8. 31).; 재정경제원. 1989.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 p.2.

²⁵⁶ 재정경제원. 1989.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 p.2.

지금까지 한일 양국간에 성사된 40 억달러 차관의 사용원칙 및 실제 사용실적을 관찰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앞서 논의한 한국의 대일경협 목적과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두환 대통령이 본래 계획했던 안보적 사업에 대한 차관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사적 협력이 어려운 일본의 헌법상 한일양국은 안보 비용 대신 5 차 5 개년계획에 대한 경제적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 교섭이 5 차계획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를 중심으로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국이 ‘안보’를 근거로 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여 양국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한국 입장은 프로젝트논의는 총액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거액공공차관의 확보에 노력했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한국정부가 요청한 거액차관의 공여방식은 엔차관 이외의 공여국의 관여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차관이나 유연적으로 사용가능한 차관이었으며, 이는 추후 전두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 그러한 유연적 자금의 전략적 목적이 안보적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표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관사용의 원칙은 공여국 일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며, 40 억 달러의 성격은 OECF 엔차관을 포함해, 수출입은행 사업차관 및 수출입은행 뱅크론으로 이루어지고, 차관의 사용분야는 5 차계획의 경제사회발전사업에 대한 자금이나 이에 따른 기자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유연적 사용이 가능한 차관내용이 없다. 결과적으로 40 억 달러 중 실제 도입된 25 억 4 천 8 백 50 만 달러의 경협 내용은 제 5 차 5 개년계획 경제사회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사용되었으며, 안보적 사업에 대한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한국은 전두환 대통령이 바라던 안보적 비용의 확보를 대일경협을 통해 달성하지 못하였다. 특히 전두환 정권은 ‘5 차계획’이라는 근거를 통해 안보비용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당시 경제적 상황 상 조달조차 어려웠던 양질의 차관을 대일경협을 통해 확보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80년대초 일본의 대한경협조건은 민간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류였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게 안보협력과 별개로 애초에 5 차계획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를 요청했을 경우, 민간베이스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40억 달러의 거액 공공차관은 공여받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정부차관 공여가 이루어지더라도 40억 달러의 거액 차관은 본래 일본의 대한경협 조건 상 공여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979년을 기준으로 일본정부는 1인당 GNP가 1,000달러 또는 그 이하인 국가들에 대해 전체 ODA 중 95%를 제공하였다면, 당시 한국의 1인당 GNP는 1,580달러에 달하는 것이었다.²⁵⁷ 1983년 한국이 1인당 연간 GNP 2,000를 달했을 때 일본 정부는 40억 달러의 새로운 대규모 정부 경제협력 패키지를 약속했다. 이는 일본에서 차관 공여를 받는 개발도상국 중 한국이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²⁵⁸

²⁵⁷ Kim, H. “1986. Policy - Making of 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1965--1983.” Michigan U. PhD dissertation.; 같은 자료에서 OECF, Japan. “kaigai Keizai kyoryoku benran(Digest of oversea economic cooperation).” various issue.; MITI. “white paper on economic cooperation.” various issues.; EPB, ROK. “major statistics of korean economy.” various issue. 재인용.

²⁵⁸ Kim, H. “1986. Policy - Making of 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1965--1983.” Michigan U. PhD dissertation.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은 국내금융적 환경악화로 인해 단기고리와 같은 조건이 안 좋은 차관조달을 억제시켜야 했었다. 특히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양질의 차관은 커녕 외자를 충당할 일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국은 대일 안보경협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러한 조건 좋은 차관의 획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당시 한국은 외환사정에 악화에 따라 16~20%까지 치솟은 국제고금리 현상에 시달렸던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차관공여를 평균 금리 6%라는 저금리로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수 있는 점이다.²⁵⁹

셋째, 한국이 안보경협에서 확보한 경협자금을 통해 달성한 것은 사회발전 및 경제개발의 두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은 사회발전적 의미가 강하다는 점이다. 엔차관 협력의 내용은 모두 수익성도 모호하지 않은 순수한 한국의 사회 개발을 위한 협력이었던 반면, 수출입은행차관의 공여내용은 평택 화력발전소의 LNG 화, 호남화력발전소 1 호기 건설, 광양제철소 건설, 포항제철소현대화 등과 같은 상업성이 강한 내용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제 사용금액 중 절반 이상이 사회개발 사업으로 쓰여졌으며, 따라서 한국이 대일경협을 통해 달성한 결과로서는 안보적 달성도 직접적인 경제회복적 달성도 아닌, 사회개발적 달성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와 같은 근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은 ‘안보’ 명목의 역할이다. 한국의 대일 경협의 목적이 안보가 아닌 한국경제 그 자체를 위한 경제적 달성이 중심이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경제적 상황을 관찰함에 따라 당시 한국이 필요로 했던 양질의 차관 확보가

²⁵⁹ 국제고금리 상황에서 달성한 저금리 거액차관 도입에 대한 평가는 이정식(1985)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대일경협의 ‘안보’ 명목이 그러한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했던 거액차관의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발견은 현재까지의 ‘안보’역할에 대한 논의 중 새로운 발전이다. 거액공공차관의 도입목적은 안보에 있었지만, 말하자면 ‘안보’ 명목은 그러한 한국의 외자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결론 및 논문의 의의

본 논문은 1981년 4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한일 간 안보경제협력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거액의 안보경협을 왜 구상하였고, 경협자금을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였는지, 나아가 결과적으로 한국정부가 얻게 된 차관공여는 실제목적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면서 그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이와 같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주요 실무자들의 회고록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대통령 회고록을 통해 100억 달러 실제 구상자인 전두환 증언을 확인하고 또한 당시 한국정부가 계획한 경제정책 1차 자료를 확인함에 따라 새로운 발견에 기여하게 되었다.

1981년 4월 22일, 한국의 노신영 외교부장은 스노베 료조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에 불러 공적 개발원조 60억 달러, 일본수출입은행 자금 40억 달러, 총 100억 달러를 5년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정부는 경협차관 요청의 이유를 안보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련의 위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약 600억 달러의 GNP 중 6%, 국가예산의 37%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한국의 안보가 미-일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안보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²⁶⁰ 이후 1981년 8월 21일에는 한일외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60억달러의 안보경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양국 교섭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안보를 명목으로 경협을 요청하는 한국과, 국내 헌법상 군사적 협력이 어렵다는 일본의 입장 간에 갈등은 지속되었다. 이후 스즈키 내각 퇴진 후 출범한 나카소네 정권의 적극적인 협상에 따라 정부개발원조, 민간자금 등을 포함한 40억 달러의 경제협력이 1년 9개월만에 성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성사된 40억 달러의 경제협력의 명분은 안보 명분이 아닌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제 5차 5개년계획에 대한 경제지원의 형태가 되었다.

본고는 안보경협 교섭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관찰함에 따라 한국정부의 대일 안보경협 요청에 대한 모순성 및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질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 일본의 평화헌법을 근거로 볼 때 한국이 일본에게 ‘안보’ 명목을 가지고 100억 달러라는 거액의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 둘째, 당시 일본이 대북정책 즉 등거리외교와 북한과의 교류확대정책을 보면 한국이 일본에게 안보협력을

²⁶⁰ 김상준 외. 2013. 『韓日經濟協會 30年史 : 韓日經濟交流의 발자취』. 서울: 한일경제협회. P.122.

더욱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 셋째, 한국이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안보경협 의 형태는 실제 안보적 내용이 전무했으며,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에 대한 경제차원의 형태로 협상이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적 모순성에 주목해볼 때 한국정부의 전략에 초점을 두고 한일 안보경협의 의미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현재까지 중점이 되어온 ‘안보차원의 경제협력’이라는 틀에 대해 보다 거시적 관점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80 년대 초 당시 한국의 경제위기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경제정책과 안보경협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현재까지 다루어지지 않아온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 및 이에 따르는 경제정책에 대해 보다 본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안보경협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가설을 제시하였다. 80 년대 초 한국 정부는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에 소요될 외자의 총액을 465 억 달러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경제위기는 60 년대 이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복합적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과 동시에 심각한 국제고금리 현상이 중복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난으로 인한 상환능력의 저하와 국제고금리 현상으로 외자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만한 상황에 있었으며, 한국정부는 5 차계획에 465 억 달러의 외자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것임을 추측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측에 따라 본 논문은 한국은 안보명목을 통해서야만이 5 차계획에 소요되는 거액차관을 확보할 수가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 5 차계획 외자소요의 일부를 충당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것이 실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즉 본 논문은 ‘한국의 대일 안보경협 요청은 애초부터 안보적 달성보다는 한국경제 그 자체를 위한

경제회복적 달성이 목적이었으며, 한국정부는 안보경협이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의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라는 ‘안보경협의 경제목적 가설’을 제시하게 되었다.

제 3 장 1 절에서 본고는 전두환 대통령의 100 억 달러 상정요인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전두환의 100 억 달러 안보경협 구상의 근본적인 요인은 북한의 군력증강에 따른 안보위기에 맞서기 위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로서 미국으로부터의 군사무기 구매를 시야에 둔 순수한 안보적 목적이었다는 것이 증언에 따라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두환의 안보경협 구상은 과거 한국전쟁에서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낸 전쟁특수에 대한 심리적 변수가 작용했다. 즉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한 경제정책 외자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차관조달이라는 목적이 이 시점에서는 증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액 상정의 의미는 안보적 목적을 성취하자는 심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변수들의 역할로 인해 가능했으며, 그것은 관료나 외교관 출신이 아닌 군출신의 권위주의 정권의 일하는 방식과, 미국의 대일 안보경협 협조 의지에 따라 100 억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금액 상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전두환의 100 억 달러 안보경협 구상은 순수한 안보적 목적이 중심이 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복합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가능했던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한국정부가 안보를 근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형태의 협력을 60 억달러의 금액을 가지고 일본에게 요청하였는지, 즉 안보와 경제의 연계요인에 대해 관찰하고, 나아가 일본에게서 충당할 자금을 한국정부가 실제 어디에 도입하고자 하였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100 억 달러의 구상요인이 순수한 안보목적에 따른 것이었으나, ‘안보경협에 5 차계획을 연계시킨 요인’이 중요하듯이, ‘5 차계획에

안보경협을 연계시킨 요인' 또한 동시에 주목해야 할 쟁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장 2,3 절을 통해 교섭과정에서의 한국요청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4 절에서는 80년대 초 한국의 경제상황 및 경제정책 그리고 외자조달 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일자금의 실제목적을 추측하게 되었으며, 마지막 5 절에서 주요 인물의 증언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로 크게 세 부분에 나누어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우선 교섭과정에서의 한국요청의 특징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두환 대통령이 애초 100억 달러를 구상했을 당시 본래의 중심 목적은 북한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외상회담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대일경협은 안보를 근거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위한 경제적 내용으로 전환했다. 한국의 대일 안보경협 요청의 논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한국의 역할은 곧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안보 방파제역할로 인해 득을 보고 있는 일본에게 역할분담을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일본은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군사적 협력이 어려우므로 그 대신 이를 5차계획의 경제형태로 지원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요청에 대해 본고는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다. 즉 안보적 관점뿐만이 아닌 5차계획 입장에서의 관점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다.

우선 7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대한 정부차관 공여는 일본이 한국을 ODA 공여 대상의 졸업국으로 간주하면서 정부차관 공여를 크게 제한하였으며, 일본의 대한 경협제도는 70년대 후반부터 민간베이스의

경제협력이 위주였다. 즉 한국은 ‘안보’ 근거 없이 5 개년계획에 충당하기 위한 공공차관을 거액으로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5 개년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에 보다 현실적인 민간베이스라는 본래의 지원형태를 거부하고 공공차관 확보에 노력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경험내용이 5 개년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진행되었던 민간베이스를 통한 지원을 원하지 않고 안보 명목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한국이 설명하는 안보협력적 관점에서 본다면, 군사적 협력이 어려운 일본 사정을 고려한 나머지 하나의 다른 성격인 5 개년계획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서 자동적으로 민간베이스가 아닌 정부베이스의 공공차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5 차계획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본래 민간베이스로 요청이 되어야 할 것이 정부베이스로 요청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안보경협에 왜 5 차계획을 연계시켰는지’라는 표면적 질문이 아닌 ‘5 차계획을 왜 본래 형태의 민간베이스가 아닌 대일 안보경협이라는 정부베이스를 통해서 요청하게 되었는가’라는 관점의 중요성을 발견하여, 후술에서 요약할 5 차계획의 연계경로를 관찰하게 되었다.

둘째, 프로젝트 논의보다는 경협 총액의 일괄타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한국은 5 차계획에 소요될 외자를 465 억달러로 밝히면서도, 일본이 제시하는 단년제 프로젝트논의보다 경협총액의 정치적 일괄타결을 요망했다. 구체적인 경제개발협력 차관내용을 일본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60 억 달러의 총액 검토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우선하는 목적이었다.

셋째, 한국이 제시한 공공차관 경험내용을 보면 차관 사용방도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안보근거가 상실된 이후 한국이 보고한 60 억

달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5 억 달러의 프로젝트 비용과 25 억달러의 상품차관이었으며, 60 억 달러의 전체 비용은 순수한 프로젝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후에는 상품차관 이외에 수혜국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적 차관을 요청하였다. 즉 한국의 대일경협 요청은 실제로 프로젝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 외에 목적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었다.

제 3 장 4 절에서는 80 년대 초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외자조달 상황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추측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선 한국이 일본에게 요청한 5 차계획 465 억 달러 외자소요의 의미는 경상수지적자 보전액이나 외채원리금상환과 같은 포괄적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중 한국이 발표한 차관 금액은 333 억 달러이고, 이 중 사업 공공차관 금액은 약 79 억 달러였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세계은행 등의 협력기관으로부터 그러한 공공차관의 대부분을 충당한 상태였으며, 이는 한국이 요청한 60 억 달러의 금액이 그러한 공공차관 계획보다 큰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여기서도 한국의 60 억 달러 요청의 목적이 개발프로젝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외자조달 상황을 관찰함에 따라 당시 한국이 사업투자보다 먼저 외채상환과 같은 금융적 성격의 차입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으며, 또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장기저리의 양질차관 조달이 필요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직면해야 했던 국제 고금리현상 및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차관을 조달하는 일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한국이 5 차계획의 외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차입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타당한 명분이 존재해야만 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금융거래적 상황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한국의 대일경협 목적에 대한 가능성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추측에 대한 답은 추후 주요인물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세 가지 추측은 첫째, 한국의 거액차관의 목적은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이외의 본래 공공차관 지원이 어려운 협력자금으로서, 수익성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이거나, 둘째, 외채원리금 상환과 같은 금융적 성격의 비용이거나, 셋째, 100억 달러 구상 시와 동일하게 안보비용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추측과 중심가설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인물의 증언에 주목한 결과, 한국의 거액차관 요청의 목적 및 안보와 경제의 연계요인이 안보목적에 있었다는 것을 전두환 증언을 통해 밝히게 되었다. 이는 한일양국이 40억 달러의 경협 타결 이후 일본이 협약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한국에게 요구한 것에 대해 어려움을 표시한 한국 측 사정에서 드러났다. 전두환은 이 자리에서 “한국 측으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과 관련된 사업의 성격상 그 내용을 상세히 밝히기도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언급하였다.²⁶¹ 이와 같은 증언에 따라 밝힐 수 있었던 종합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정부의 대일경협을 둘러싼 전략적 의도에는 100억 구상시기부터 타결 마지막 시기까지 일관적으로 안보목적이 존재했다. 한국이 합의한 40억 달러의 의미는 경제개발 프로젝트 이외의 안보적 사업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경협의 근거로서 ‘안보’ 명목이 상실되고 5차계획의 순수한 경제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²⁶¹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p.362.

불구하고 끝까지 안보비용을 조달하고자 하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다.

둘째, 교섭과정에서 한국이 프로젝트논의를 거부하고 총액 선택결을 견지하는 자세를 보였거나, 실제 프로젝트 비용보다 더 많은 공공차관을 요청하였거나, 상품차관이나 유연적 차관을 요청한 이유는 바로 경제사회개발 프로젝트 비용과 동시에 안보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전략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한국의 거액차관 목적이 5 차계획의 수익성을 도모하는 사업에 충당하기 위함이거나 한국의 금융적 보전을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안보명목이 거액공공차관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실제 자금도입 결과와는 별개로 생각할 때 5 차계획이라는 근거 또한 안보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제 4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일경협 목적과 실제 자금의 도입결과를 동시에 관찰하여 안보경협의 전략에 관점을 두고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첫째, 전두환 대통령이 100 억 달러 구상시기부터 타결시기에 이르기까지 계획했던 안보적 사업에 대한 차관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국은 유연하게 사용가능한 차관을 조달하고자 하여 이렇게 확보한 차관을 안보적 사업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40 억 달러 차관공여 원칙에 관한 1 차 자료를 보면, 차관사용의 원칙은 공여국 일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며, 40 억 달러의 성격은 OECF 엔차관을 포함하며, 수출입은행 사업차관 및 수출입은행뱅크론으로 이루어지고, 차관의 사용분야는 5 차계획의 경제사회발전사업에 대한 자금이나 일본으로부터의 기자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유연적 사용이 가능한 즉 안보적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차관 내용은 전무했다. 결과적으로 40 억 달러 중 실제로 도입된 25 억 4 천 8 백 50 만 달러의 경험 내용은 모두 제 5 차 5 개년계획 경제사회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사용되었으며, 안보적 사업에 대한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전두환 대통령은 ‘5 차계획’이라는 근거를 통해 안보비용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는 실현되지 않은 것이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일경협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의 경제적 상황 상 조달조차 어려웠던 양질의 거액 차관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일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초 일본의 5개년계획 대한경협은 민간베이스가 주류였으며, 정부베이스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여 졸업국으로 간주된 한국에 대한 경험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였다. 또한 당시 16~20%까지 치솟은 국제고금리 현상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부터 평균 금리 6%라는 저금리 차입을 달성하게 되었다. 80년대 대일경협은 외환위기에 의한 차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이 원했던 양질의 차관을 확보할 수 있는 큰 기회로 작용했다.

셋째, 한국이 안보경협에서 확보한 경험자금을 통해 달성한 것은 사회발전 및 경제개발의 두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은 사회발전적 의미가 강했다. 차관의 실제 도입내용은 인프라구축이나 교육시설 확충 등과 같은 사회발전적 사업과 수익성을 도모하는 이른바 경제개발적 사업의 두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절반 이상이 사회개발 사업으로 쓰여졌으며, 양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이 대일경협을 통해 달성한 결과로서는 안보적 달성도 직접적인 경제회복적 달성도 아닌, 사회개발적 달성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고의 주장인 ‘안보경협의 경제목적 가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한국정부의 전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서 위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의 설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 80년대 한일경협을 이해하는데 있어 몇 가지 새로운 발견에 도달하여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종합적 결과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의미에 대한 시사점 및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요청의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두환 증언을 확인함에 따라, 교섭과정 중 한국의 표면적 설명과 실제 의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1981년 후반기 한국은 일본이 대한경제협력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차관은 일본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의 군사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5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데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 추후 실제로 안보경협 교섭에서 ‘안보’ 근거는 상실되었다.²⁶²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라 증명된 것은 이러한 한국의 표면적 설명과는 달리, 실제 의도가 5차계획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안보적 사업에 대한 자금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5차계획이라는 명분이 안보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일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국의 전략적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안보경협의 요청 목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대표 저서나 언론에서 ‘추측’으로 마무리하고 있었던 ‘안보목적 가설’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었다. 현재까지 한국의 대일안보경협의 목적을

²⁶² 『매일경제』, 1981년 11월 2일. 「노외무 한일정상회담 조기개최 희망」.

‘안보’ 중심으로 논의했던 선행연구들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설명되는 ‘안보목적’이라는 것은 한국이 요청한 대일 경제협력의 근거가 ‘안보’에서 시작되었다는 요인이나 한국측이 설명하는 북한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력증강이라는 요인에 따라 표면적 의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으며, 한국의 전략적 측면을 중심으로 타결시기에 이루기까지의 대일경협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한 대표 논문에서는 일본에게서 충당될 자금을 한국이 5차계획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명확히 밝히므로 일본이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체면을 지키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²⁶³ 본고는 보다 깊은 관찰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교섭 마지막까지 대일자금을 안보적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대표 논문의 설명에 대한 발전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대표 저서와 일본언론에서는 ‘안보’ 근거가 상실된 이후에도 ‘안보목적 가설’을 주장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일본 측의 독자적인 해석에 따른 ‘추측’에 머물러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한일경협 실무자였던 오구라 카즈오는 저서를 통해 한국측의 목적 특히 한국의 5 차계획과 대일경협 요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타진했다. 오구라는 교섭과정에서 ‘안보’ 근거가 상실된 이후에도 한국의 거액차관 요청의 사실적 목적이 5 차계획에 대한 경제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교섭 후반기까지

²⁶³ 고모다(2013)의 연구에서는 1982년 1월에는 한국이 5차계획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내용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이 요청하는 60억 달러를 “제 5차 5개년계획으로 산출한 소요외자 465억 달러의 일부”로 명확히 해준 점에 대해 평가하였고 일본측에 있어서는 제공하는 경제협력이 안보가 아닌 5개년계획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한국측이 명확히 해줌으로써 “군사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체면을 살리게 되었다고 제시한다. 고모다 마유미, 2013. 「한일 ‘안보경협’ 분석: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안보적 목적의 선택이 강했다고 분석한 바 있었다.²⁶⁴ 또한 최근까지도 일본의 유력한 신문에서 경협자금이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쓰여졌다는 보고가 존재했다.²⁶⁵ 그러한 언론의 짐작과는 달리 안보적 자금으로는 쓰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의 예측대로 전 대통령은 경제적 자금을 끝까지 안보적 자금에 사용하고자 의도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본고는 교섭과정에서의 한국요청의 특징과 한국의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추측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80년대 대일경협의 주도자였던 전두환 증언을 확인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추측’을 ‘사실’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발전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안보’ 명목의 의미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은 80년대 초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관찰함에 따라 당시 한국정부가 필요했던 양질의 차관 확보가 외환위기나 대외금융적 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대일경협의 ‘안보’ 명목이 그러한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했던 거액 공공차관의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발견은 현재까지의 ‘안보명목’ 역할에 대한 논의 중 새로운 발견이다. 거액 공공차관의 도입목적은 안보에 있었지만, 말하자면 ‘안보’ 명목은 그러한 한국의 외자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²⁶⁴ 오구라에 따르면 1982년 1월 이후 교섭과정에서 ‘안보’ 명목이 상실된 이후에도 한국이 일본에게 전달한 개발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이 요청비용과 맞지 않아, 요청금액을 억지로 5차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인식하였고, 안보와 정치적 이유에서의 대일요청을 억지로 경제적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협력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 애썼다고 하여 한국의 요청은 교섭 후반까지 경제적 요청이라기보다는 안보적 요청의 선택이 남아있었다는 일본 측 입장을 밝혔다.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pp.174, 179-180.

²⁶⁵ 이장규, 1991. 『경제는 당신이 大統領이야 : 全斗煥 시대의 經濟秘史』. 서울: 중앙일보사, p.274.

넷째, 실제목적과 자금도입 결과를 동시에 관찰함에 따라 안보경협이 새로운 의의를 제시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목적과 결과의 격차를 밝히는 것은 경협 요청 국가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실제목적을 밝히고, 이와 동시에 자금의 사용방도를 관찰함에 따라 80년대 한일 안보경협을 둘러싼 한국의 전략적 의미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발전적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다수의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우선 안보목적과 경제목적은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공공차관이 안보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경제회복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경협자금이 경제적 비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대신에 본래 경제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국내자본을 안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경제자금과 안보자금은 국내경제에 있어 뺄 수 없는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는 5차계획의 외자소요 및 외자도입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던 반면, 상대적 변수가 되는 안보비용의 외자계획과 조달상황을 관찰하지 못하였다. 안보와 경제라는 대상 간의 실질적 비교를 위해서는 그러한 균형적 자료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동시에 본고는 연구자료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않은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80년대 대일경협 주도자였던 전 대통령의 실질적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주도자 본인의 자료는 정치적 합리화의 가능성을 의심할 때 객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안보를 근거로 시작된 협상이지만 대일차관이 결국 사회발전적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여전히 이것이 ‘안보경협’이라는 이름 하에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본고의 논의와 연구결과는 추후 이루어질 후속연구에서의 보다 본격적 논의를 위한 밑바탕이 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관계를 둘러싼 국가들의 전략적 의미는 협력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 큰 의미로 작용된다. 각 국가들의 전략과 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관계나 협상의 의미가 좌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추후 정책교섭에 있어서의 국가들의 전략적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향후 본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관계 속의 국가들의 전략적 의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싶다.

참고 문헌

1. 1차 자료

< 회고록 >

공로명. 2019. 『한국외교와 외교관 - 대일외교, 북방정책, 북핵협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공로명.임성준. 2018. 『공로명.임성준 메모(1983) : 대일 경험교섭의 전말』

(국립 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노신영. 2000. 『盧信永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이재춘. 2011.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 : 온 몸으로 부딪힌 격동의 세월

36년』. 서울: 기파랑.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2 청와대 시절(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瀨島龍三. 1995. 『幾山河 : 瀨島龍三回想錄』. 東京 : 産経新聞ニュースサ

-ビス

中曾根康弘. 1992. 『政治と人生 : 中曾根康弘回顧錄』. 東京 : 講談社.

< 정부간행물 >

경제기획원. 1980.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작성 지침(안) 요약」.

대한민국 정부. 1981.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1982~1986」.

재정경제원. 1989.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도입 종결 계획」.

- 총무처. 1983.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국 정부간의 82 년도 엔차관도입에 관한 각서교환(제 616 호) 」 .
- 총무처. 1984.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3 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제 294 호) 」 .
- 총무처. 1985.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84 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교환각서(제 394 호) 」 .
- 총무처. 1987.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85 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제 12 회) 」 .
- 총무서. 1988. 「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제 5 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D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체」 .
- 총무처. 1989. 「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제 6 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교환각서(제 23 회) 」 .
- 총무처. 1990. 「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제 7 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
- 한국개발연구원. 1981. 「 경제안정화시책자료집(상): 1979.4.17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중심으로」 .

外務省. 「国別援助実績 (1990 年までの実績) 韓国」 .

EPB, ROK. “major statisties of korean economy.” various issue.

MITI. “white paper on economic cooperation.” various issues.

OECF, Japan. “kaigai Keizai kyoryoku benran(Digest of oversea economic cooperation).” various issue.

2. 2차 자료

< 단행본 >

김동호. 2019. 『대통령 경제사』 서울: HadA.

국가안전보장회의. 1981. 『일본방위력 증강과 한일안보협력 방안』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김두얼 외. 2017. 「1980년대 초의 외채위기」 『한국의 경제 위기와 극복』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상준 외 . 2013. 『韓日經濟協會 30 年史 : 韓日經濟交流의 발자취』 .
서울: 한일경제협회.

이장규. 1991. 『경제는 당신이 大統領이야 : 全斗煥 시대의 經濟秘史』 .
서울: 중앙일보사.

李庭植. 1989. 小此木政夫·古田博司 (訳). 『戦後日韓關係史』東京: 中央公
論社. (원제: Chong-Sik Lee,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imension,
1985).

小此木政夫. 2001. 「新冷戦下の日米韓体制: 日韓經濟協力交渉と三国戰略
協調の形成」. 小此木 政夫.文正仁. 『市場·国家·国際体制』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小倉和夫. 2013. 『秘録·日韓1兆円資金』. 講談社.

世界平和研究所. 1996. 世界平和研究所(編). 『中曾根内閣史: 日々の挑戦
』. 東京:世界平和研究所.

IIS 「The military Balance, 1981~1982」

< 학술논문 >

- 고모다 마유미. 2013. 「한일 ‘안보경협’ 분석: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곽양춘. 2001. 「 [6·25 전쟁과 일본의 전쟁특수] 일본경제 재생의 ‘카미카제(神風)’ 6·25 전쟁」. 『민족 21』 통권 제7호. pp.124-127.
- 박기주. 2018. 「1980년대 초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과정과 평가」. 『경제사학』 (경제사학회) 42권 66호. pp.3-35.
- 박선원. 2002. 「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 . 『 국제정치논총 』 (한국국제정치학회) 42 권 3 호. pp.249-271.
- 박영구. 2001. 「정부인가 시장인가 : 1980 년대 중화학공업조정 이후의 효율성과 시사점」. 『국제경제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7권 1호. pp.213-231.
- 박정진. 2016. 「 1980 년 한일관계: 5.17 쿠데타와 일본 」 . 『 Acta EurasiatICA』 (한국유라시아학회) 7 권 1 호. pp.23-48.
- 박태균. 2009. 「박정희 정부 시기를 통해 본 발전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역사와현실』 (한국역사연구회) 74호, pp.15-43.
- 박태균. 2019. 「박정희식 경제성장 정책의 종점으로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통권 128 호. pp.10-39.
- 손기섭. 2009. 「 한일 안보경협 외교의 정책결정 1981-1983 년 일본의 대한민국 정부차관 」 . 『 국제정치논총 』 (한국국제정치학회) 49(1), 305-328.

- 손기섭. 2020. 「80년대 한일 신 ODA 경협차관을 둘러싼 외교협상」. 『정치정보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23 권 1 호. pp.83-112.
- 유석열. 1982. 「학술회의발표문 : 80년대 북한의 변화 전망과 대남전략」. 『안보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2 권 0 호 pp.143-154.
- 윤홍근. 2013.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와 시장제도의 변화: 1980년대 초 '안정화시책'에 대한 담론제도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2 권 1 호. pp.163-188.
- 장준갑. 김건. 2013. 「1980년대 초반(1980-1981) 한미관계 읽기」. 『미국사연구』 (한국미국사학회) 38 권. pp.191-218
- 조양현. 2017. 「제5공화국 대일외교와 한·일안보경협 : 안보경협안의 기원에 대한 실증분석」.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57권 2호. pp.169-205.
- 황성현. 2015. 「한국의 1980년대 긴축 재정정책 연구」.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재정학회). pp.1-25
- Junya, N. 2020. "Strategic Japan-South Korea Cooperation: Prime Minister Nakasone Yasuhiro and Korean Peninsula Diplomacy." *Asia-Pacific review*, 27(1); 113-132.
- Kim, H. "1986. Policy - Making of 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1965--1983." Michigan U. PhD dissertation.
- Oh, K.D. 1986. "Japan-Korea Rapprochement: A Study in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1980'S." California U, PhD dissertation.

Shinichi, K. 2020. "The Making of Nakasone Yasuhiro's Diplomacy." *Asia-Pacific review*, 27(1); 6–15.

Young C. Kim. 1981. "North Korea in 1980: The Sun Also Rises," *Asian Survey*, 21(1); 112–124.

< 신문기사 >

『경향신문』. 1979년 4월 17일. 「신 부총리 경제 안정 종합시책 발표 중화학 조정, 생필품 공급확대」.

『경향신문』. 1979년 10월 1일. 「무역적자 내년 국제 수지적자 올 수준서 억제」.

『경향신문』. 1980년 1월 28일. 「전대통령방미등정하오 3시 영부인동반 10박 11일 -내일새벽 LA 도착」.

『경향신문』. 1980년 6월 10일. 「올들어 경상수지적자 23억 8천만불」

『경향신문』. 1980년 6월 28일. 「한국경제의 긍정적 평가」.

『경향신문』. 1980년 8월 15일. 「대일 무역적자 누적 작년말 1백62억불」

『경향신문』. 1980년 11월 27일. 「입법회의 지상 녹음 파장 큰 스즈끼 일 수상 발언」.

『경향신문』. 1980년 12월 30일. 「도매물가 44.2%, 소비자 34.6% 상승을 억제목표 1.5배 넘어」

『경향신문』. 1980년 12월 30일. 「한은 추계 성장률 20년만에 마이너스 5.7% 작년비 1인당 GNP 89달러 감소」.

『경향신문』. 1981년 2월 3일. 「팬타곤서 국방장관 회담 F-16 등 최신장비 대한판매 촉진 합의」

- 『경향신문』, 1981년 2월 3일. 「한미정상회담 … 14개 정 공동성명 주한미군철수계획 백지화」.
- 『경향신문』. 1981년 6월 12일. 「표리부동한 등거리외교」.
- 『경향신문』. 1981년 8월 22일. 「한일외상회담 폐막 한국 60억불 요청, 안보연계 경험거부」.
- 『경향신문』. 1981년 8월 24일. 「60억불 차관 합의점 못찾아」.
- 『경향신문』. 1982년 3월 20일. 「일 상품차관 거절」.
- 『경향신문』. 1982년 6월 2일. 「안전기획부장에 노신영씨」.
- 『동아일보』. 1979년 4월 17일. 「「고질 인플레이」 도려낼 때-새 경제안정시책에 기대한다」.
- 『동아일보』. 1980년 5월 7일. 「GNP 16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 『동아일보』. 1980년 5월 17일. 「미 「한국위기경제」 지원검토」.
- 『동아일보』. 1980년 6월 27일. 「한국경제와 국제신용」.
- 『동아일보』. 1980년 7월 31일. 「성장률 연평균 8%로 5차5개년계획 지침 마련 86년 인 GNP 4천2백1달러」.
- 『동아일보』. 1980년 8년 22일. 「중공업투자의 재정비」
- 『동아일보』. 1981년 2월 3일. 「오늘새벽 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 1시간 20분 주한미군철수 계획 백지화」.
- 『동아일보』. 1981년 3월 3일. 「한국수뇌 이동 일지보도 한일우호증진 합의」.
- 『동아일보』. 1981년 3월 10일. 「한일관계 … 새 현실과 냉기」.
- 『동아일보』. 1981년 5월 30일. 「한일외상회담 연기」.
- 『동아일보』. 1981년 8월 21일. 「한일경협 오늘 중점논의」.
- 『동아일보』. 1981년 8월 22일. 「탈 인플레이겨냥… 성장보다

안정추구 「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방향과 문제점」.

『동아일보』. 1981년 8월 22일. 「한일외상 공동발표문」.

『동아일보』. 1981년 8월 24일. 「실무자회담도 진전 못봐」.

『동아일보』. 1981년 8월 25일. 「「안정목지」의 기대 5년 5차경제계획
 부문별 점검 <1> 재정과 금융」.

『동아일보』. 1981년 9월 7일. 「무리한 요청 일본측」.

『동아일보』. 1981년 9월 10일. 「양국 개최식 인사 차원높은 협력 필요
 한국 신뢰 금 안가게 노력 일본」.

『동아일보』. 1981년 9월 10일. 「일, 안보-경협 분리 계속주장」.

『동아일보』. 1981년 9월 11일. 「안보경협 결렬」.

『동아일보』. 1981년 9월 12일. 「각료회의 취재한 한일특파원 방담 ' 안보경협' 거리가 너무 멀다」.

『동아일보』. 1981년 11월 4일. 「대이동 고급공무원 조직정비 이후 명암
 엇갈린 관가 <2> 없어진 자리·기구의 허실」.

『동아일보』. 1982년 2월 3일. 「성장은 해야되고...내자는 부족하고 「외채
 축소」 고민」.

『동아일보』. 1982년 7월 26일. 「5차계획 공공차관 79억달러로」.

『동아일보』. 1982년 6월 22일. 「교섭재개합의 경협 대응안 일에 통보」.

『동아일보』. 1983년 1월 12일. 「40억 달러 7년 걸쳐 대여」.

『동아일보』. 1983년 1월 12일. 「한반도안정 일안정에 긴요」.

『매일경제』. 1980년 5월 17일. 「시국불안 대외신용도 손상우려」.

『매일경제』. 1980년 6월 20일. 「올 소요외자 88억불 국제수지 방어·실업
 대책 시급」.

『매일경제』. 1980년 6월 28일. 「투자수입 지급액 1~5월 중 8억불

이자부담 늘어 무역외수지 악화」

『매일경제』. 1980년 7월 8일. 「대일무역적자폭 갈수록 확대」

『매일경제』. 1981년 1월 8일. 「외채비율 높아져」.

『매일경제』. 1981년 1월 10일. 「한일경제관계의 미래상」.

『매일경제』. 1981년 1월 13일. 「작년 국제원자재가 올라 경상수지 55억달러 적자」.

『매일경제』. 1981년 4월 22일. 「기획원 보고서 경상수지적자 개선 어려워」.

『매일경제』. 1981년 5월 12일. 「외채이자 부담 크게 늘어나 과실송금도 … 국제수지 큰 압박」.

『매일경제』. 1981년 5월 21일. 「대외차입여건 나빠져 국제수지 조정근란 국제고금리와 한국경제 하」.

『매일경제』. 1981년 6월 3일. 「정부, 공공차관 도입 확대 165억불 상당」.

『매일경제』. 1981년 7월 4일. 「중화학 투자조정과 진로 1.중화학공업 기틀 자리질 때 수출 늘고 경제 성장 가속화」.

『매일경제』. 1981년 8월 18일. 「국제금융기구 이어 미수은 금리올려 외채이자 부담 가중」.

『매일경제』. 1981년 8월 20일. 「한일외상회담 3년만에 재개」.

『매일경제』. 1981년 11월 2일. 「노외무 한일정상회담 조기개최 희망」

『매일경제』. 1982년 1월 15일. 「외상회담 조기개최」.

『매일경제』. 1982년 1월 12일. 「실속있는 경제외교」.

『매일경제』. 1982년 1월 21일. 「불요불급품목 수입최대억제」.

『매일경제』. 1982년 2월 19일. 「2차회담 이해높여 한일경제협력 총규모 외교경로로 절충」.

『매일경제』. 1983년 1월 6일. 「IBRD 차관 5년간 36 억불」.

『매일경제』. 1983년 1월 12일. 「대한 경협 원칙타결 전대통령 증근
일수상 두차례 정상회담」.

『매일경제』. 1986년 10월 22일. 「내년 공공차관 축소」.

『조선일보』. 1981년 10월 15일. 「공공차관 사업 22 억불 확정」.

『한국경제』. 1994년 5월 19일. 「국제금리 오일쇼크 등 여파 6 차례
고금리시대.. 전후 변천사 」.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4051901491>(검색일:2020. 11.
15).

『日本經濟新聞』. 1981年 1月 16日. 「日韓実務者協議、借款問題で韓国
が1項目提示－經濟ベース認める」.

『毎日新聞』. 1981年 3月 3日. 「韓国 政治 全斗煥大統領就任式：伊
東外相、訪韓へ－「南北問題」など認識にお隔たり」.

『毎日新聞』. 1981年 3月 3日. 「韓国 政治 全斗煥大統領就任式：伊
東外相、訪韓へ－盧信外相と会談、日韓関係修復を確認」.

< 인터넷 자료 >

김철환.

경상수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iebeljd&logNo=601
2754756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iebeljd&logNo=6012754756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검색일:
2020. 9. 7).

김희호.

공공차관.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7765>(검색일: 2020. 9. 20).

조갑제닷컴.

한국경협은

세지마의

발상.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730&C_CC=A
[C](#)(검색일: 2020. 8. 31).

国際協力銀行. 国際協力銀行(JBIC)が実施する円借款の概要と実績.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hakusyo/01_hakusho/ODA2001/html/siryou/sr30200.htm#:~:text=%E5%95%86%E5%93%81%E5%80%9F%E6%AC%BE%E2%80%A6%E2%80%A6%E5%A4%96%E8%B2%A8%E6%BA%96%E5%82%99%E4%B8%8D%E8%B6%B3,%E3%81%AE%E6%94%AF%E6%8F%B4%E3%82%92%E8%A1%8C%E3%81%86%E3%82%82%E3%81%AE%E3%80%82

(접속일:2020.12.9)

日 本 衆 議 院 . 日 本 国 憲 法 .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shiryo/dl-constitution.htm#2sho(검색일:2020. 9.10)

Abstract

An Analysis on the Korea–Japan Security Economic Cooperation in the 1980s: Focusing on the Objective and the Result

Seika KATO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April 22nd, 198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rst asked Japan to support 10 billion dollars for five years as Security–Economic Cooperation for security reasons to respond to the threat from North Korea. Several months later, South Korea officially requested 6 billion dollars from Japan for public aid as the 5th Five–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with having the ostensible reason, "security". Though the reques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rst focused on "security," it was finalized for an "economic support" purpose. The suspicion was raised from the following two aspects: the request primarily focused on the military purpose, an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ack in the 1980s, an astronomical amount of loan was requested. According to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ttempted to analyze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ver the Security–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1980s with a broad perspective including economic aspects by studying empirical data, such as memoirs of key figures, primary data on economic policy, and newspaper articles.

First, the research suggested that South Korea's request for 10 billion dollars mainly focused on its security goals. President Chun Doo–Hwan, the initiative of a 10 billion dollar request, intended South Korea to improve its defense capacity in response to North Korea's military strength enhancement. In addition, Chun's 10 billion dollar Security–economic Cooperation initiative included psychological variables from Japan's economic gain from the special demand caused by the Korean War. Because of the authoritarianism from military–born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consent from the US to support on Japan–Korea Security–Economic Cooperation, it was possible for Chun to ask for a large amount of aid for security reasons at the time.

Second, although the negot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d been focused on using the fund from Japan entirely for social development as part of the Five–Year Plan, South Korea was persistent with their initial purpose to apply the fund for its security project until the settlement had been made. Despite the original demand for the funds had denied and the negotiation only focused on social develop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give up and emphasized the flexibility they should have in the use of funds endlessly to introduce funds for the security plan. As some argue, having the ostensible reason, "security", in the beginning, made it possible to achieve a large amount of loan. In addition, it could be argued that proposing the Five–Year Plan also played a role in obtaining security funds after all.

Third, the study showed that the funds resulted in refusing the plan of the Chun Doo–Hwan regime. The funds were proposed for achieving social development, not for security or economic achievement. The principles of the 4 billion dollar fund introduction were agre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regulate towards the Five–Year Plan or purchase of equipment from Japan.

This shows the fund was introduce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rojects.

Fourth,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hieved positive economic result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Japan in spite of the settlement with Japan. The study argues that the large loan from Japan with an average interest rate of 6% was a great achievement because experiencing the phenomenon of high international interest rates and significant creditability loss from other countries, South Korea's economic plan to gain large and quality loans was threatened at the time. In other words, having the ostensible reason, "security" played a big role for South Korea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in negotiating with foreign countries with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at South Korea was facing at the time and achieved to obtain a large amount of public loan needed for its economic plan. To evaluate South Korea's strategic implications, it is significantly important to discuss South Korea's strategy of having the ostensible reason, "security".

.....

Keywords: Korea–Japan Security–Economic Cooperation,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Korea's diplomacy with Japan, Korea's policy toward Japan, Korea's economic policy, Korea–Japan relations

Student Number: 2018–26480